

2026. 5
정기연구 2026-0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 이창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6. 5
정기연구 2026-0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이 창수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창수(제1장~제6장)

요 약

□ 연구 배경

- 어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와 대상 모두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최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국회 통과 등으로 어업의 패러다임 전환 예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 요구

□ 연구 목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원 방안 추진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
- 이를 위해 어업환경 및 어업·수산정책 분석, 연근해어업 경영실적 분석, 어업인의 어업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였음

□ 연근해어업의 경영 실적 및 어업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어업경영 불확실성의 구조적 확대 : 최근의 어업경영 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
- 비용 증가 압력의 지속 : 어업경영에서 인건비와 연료비는 가장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작용
- 어업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가중 : 최근의 수산자원 변동은 특정 어종 중심의 어업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줌
- 연안어업 영세성 및 취약성의 구조화 : 연안어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안어업은 소규모·영세적 경영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음
- 어업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요구 : 최근 어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기존 어업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여줌

□ 2026년 해양수산사업의 정책적 의미

- 어업 정책은 “현장을 유지하는 정책”이라는 성격이 강함
- 어업 정책은 동시에 “산업을 유지하는 경제 정책”의 성격을 띠
- 어업 정책은 “스스로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짐

□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해석	시사점
TAC 필요성	긍정 응답 높음	자원관리 필요성 자체는 인정	관리 방식의 현실 적합성 확보 필요
자발적 자원관리 참여	주변 참여 시 동참 응답 높음	공동체 분위기 영향 큼	지역 기반 집단 참여 구조 필요
투자 의향	필요성 인식 높으나 실행은 낮음	미래 불확실성 확대	정책금융 및 위험 완화 장치 필요
비용 부담	수리비·연료비·금융비용 부담 높음	경영 압박 심화	비용 절감형 지원 확대 필요
후계 계획	타인 이양 및 정책 의존 존재	후계구조 불안	어업승계 지원체계 필요

[시사점]

- 어업인은 현재의 어업을 불확실성과 경영위험이 중첩된 환경 속에서 유지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TAC 확대 등 자원관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 적용의 한계와 제도 중심 관리에 대한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함
- 어업경영은 투자 확대보다 현상 유지 중심의 소극적 대응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 고령화 등에 기인함
- 어업인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동시에 자원보호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음
- 결국 현재의 어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함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지원 방향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그 이용의 주체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도 지속가능한 상태여야 함을 전제
- 어업 지원 방향을 시점과 주체, 그리고 수협의 성격을 고려하여 3개로 설정
 - 첫째, 현시점에서 정부와 수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 : 정부-수협 연계 중점 추진과제 우선순위 설정(22개 세부 과제)
 - 둘째, 미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 :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안
 - 셋째, 미래 수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 : 수협의 중장기 중점 실천 과제

□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안 : 7대 실천 과제

- TAC 제도 보완
-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 경영안정 장치 강화
-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개선
-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강화
- 지역 맞춤형 정책 확대
- 현장 소통 구조 개선

□ 수협의 중장기 중점 실천 과제

〈수협의 중장기 중점 실천 사업〉

구분	핵심 목표	주요 방향	중점 지원사업
단기	생존 안정화	경영위험 완충 및 현장 부담 경감	경영비 절감 지원, 면세유 및 장비 지원, 조업정보 제공, 긴급 경영안정 지원,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행정·정보 지원
중기	구조 안정화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경영구조 구축	TAC 적응 지원,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확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연계, 유통·판매 구조 개선, 지역 협력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원
장기	체질 전환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	해역 이용정보 구축, 정밀형 수산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형 어업구조 전환, 복합소득 기반 확대, 스마트·청년어업 지원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6
	1. 연구 방법 및 진행	6
	2. 연구의 구성	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1. TAC 관련 연구	9
	2. 어업인 지원 관련 연구	10

제2장	어업 경영환경 및 연근해어업의 경영 실적	13
	제1절 어업 경영환경의 변화	15
	1. 어업경영 환경	15
	2. 인위적 요인의 변화	16
	3. 자연적 요인의 변화	21
	4. 인위적 자연요인	23
	제2절 근해어업 경영 실적 분석	25
	1. 분석 개요	25
	2. 주요 지표 분석 결과	25
	3. 근해어업의 경영 변동성 비교	31
	제3절 연안어업 어업 실태 분석	33
	1. 연안어업 경영 실태 조사 개요	33
	2. 조사 결과	34
	제4절 시사점	38
	1. 어업경영 불확실성의 구조적 확대	38

2. 비용 증가 압력의 지속	38
3. 어업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가중	39
4. 연안어업 영세성 및 취약성의 구조화	40
5. 어업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요구	40

제3장

어업 지원의 필요성 및 어업·수산 정책사업 동향	43
제1절 어업 지원의 필요성	45
1. 어업 지원 논리 접근 방향	45
2. 어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논리	46
3. 어업의 기능 및 역할 측면에서의 지원 논리	47
4. 어업의 국가·산업적 가치에 기반한 지원 논리	49
제2절 정부의 어업·수산 정책 현황	52
1. 어업·수산 관련 정부 사업 구분	52
2. 2026년 어업·수산 분야 세부 사업의 주요 내용	53
제3절 시사점	58
1. 직간접 어업지원 정책의 특징	58
2. 2026년 해양수산사업의 정책적 의미	60

제4장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63
제1절 조사 기획	65
1. 인식 조사 개요 및 참여 조합	65
2. 조사 항목의 구성	66
제2절 조사 결과	68
1. 응답자 분포	68
2. 어업활동 시 애로점	71
3. 정부 정책 인지 및 어업경영 계획	73
4. 어업경영 지원에 대한 인식	86
5. TAC 관련 어업인 애로 및 건의 사항	91
제3절 시사점	93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93
2. 시사점	94

제5장	어업 지원 방안	97
	제1절 어업 지원 방향 설정	99
	제2절 정부 사업의 수협 추진 우선순위	101
	1. 수협의 정부 사업 연계 필요성	101
	2. 수협-정부 사업 간 연계 구조	102
	3. 수협-정부사업 연계의 시너지 효과	104
	4. 수협의 정부사업 중점 추진 우선 순위	105
	제3절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안	108
	1. 연근해어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108
	2. 정책 개선 7대 과제	110
	3. 어선을 이용한 수온 정보 수집 사업 제안	112
	제4절 수협의 역할 제고와 추진 방안	114
	1. 수협의 역할 변화	114
	2. 수산보호직불제 관련 수협의 역할	115
	3. 수산자원 관리 관련 실천 과제 선정	116
	4.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중점 지원 사업 로드맵	119
	5. 수협 실무부서의 단계적 발전	123

제6장	결론	12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29
	1. 시사점 정리	129
	2. 연구 결과	131
	제2절 정책 제언	133
	1.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연근해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33
	2. 수협 중심의 민관 협력형(Co-management) 거버넌스 구축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 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영 현황 분석	136
부록 2. 연안어업의 업종별 경영 현황 분석	182
부록 3. 어업인 인식 조사 설문지	187

표 차례

〈표 1-1〉 주요 연구 방법	6
〈표 1-2〉 TAC 관련 선행 연구	9
〈표 1-3〉 어업인 지원 관련 선행 연구	11
〈표 2-1〉 최근 3년 주요 근해어업 연료비 비중 동향	20
〈표 2-2〉 2050년 주요 어종의 생산량·생산액 변동 추정	22
〈표 2-3〉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26
〈표 2-4〉 근해어업의 경영 변동성 비교	31
〈표 2-5〉 순이익률 기준 업종별 변동성(최고점-최저점) 동향	32
〈표 2-6〉 연안어업 경영 실태 조사 참여 조합 현황	33
〈표 2-7〉 연안어업의 기초 통계량	34
〈표 2-8〉 어로어가 및 어선사용어가의 소득 동향	35
〈표 3-1〉 어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한 지원 논리	47
〈표 3-2〉 어업의 기능 및 역할 측면에서의 지원 논리	49
〈표 3-3〉 어업의 국가·산업적 가치에 기반한 지원 논리	51
〈표 3-4〉 어업·수산 관련 정부 사업	52
〈표 3-5〉 어업·수산물 관련 정부 사업의 성격	61
〈표 4-1〉 어업인의 어업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65
〈표 4-2〉 조사 참여 조합 현황	66
〈표 4-3〉 어업별 응답자 현황	68
〈표 4-4〉 설문조사 결과 요약	93
〈표 5-1〉 수협-정부 사업간 연계 구조	103
〈표 5-2〉 수협-정부사업 연계 우선순위	107

〈표 5-3〉 정책 개선 7대 과제	110
〈표 5-4〉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관련 수협 역할(안)	116
〈표 5-5〉 수협의 수산자원관리 관련 과제별 세부 실천 과제(안)	117
〈표 5-6〉 수협의 시기별 목표 및 중점 지원 사업	120
〈표 5-7〉 수협의 단기 중점 지원 사업	121
〈표 5-8〉 수협의 중기 중점 지원 사업	122
〈표 5-9〉 수협의 장기 중점 지원 사업	123
〈부록 표 1〉 연안자망어업의 기초 통계량	182
〈부록 표 2〉 연안통발어업의 기초 통계량	183
〈부록 표 3〉 연안복합어업의 기초 통계량	18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목적	5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7
[그림 2-1] 어업 경영환경의 변화	15
[그림 2-2] TAC 제도의 변천	17
[그림 2-3] 인위적 요인 : 기술 발전	18
[그림 2-4] 인위적 요인 : 선원임금의 변화	19
[그림 2-5] 인위적 요인 : 국제유가 변화	20
[그림 2-6] 시나리오별 고수온 및 저수온 특보 기준 초과 일수 비교	21
[그림 2-7] 자연적 요인 : 급격한 수산자원의 변동	23
[그림 2-8] 인위적 자연 요인 : 수산업의 이중고	24
[그림 2-9] 근해어업 평균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26
[그림 2-10] 근해어업 평균의 순이익률 추이	27
[그림 2-11] 근해어업 평균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28
[그림 2-12] 근해어업 평균의 부채비율 추이	28
[그림 2-13] 근해어업 평균의 출어횟수 추이	29
[그림 2-14] 근해어업 평균의 출어일수 추이	30
[그림 2-15] 근해어업 평균의 어로일수 추이	30
[그림 2-16] 연안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34
[그림 2-17] 연안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35
[그림 2-18] 어가의 어가소득 및 어업소득 추이	36
[그림 2-19] 어선사용어가의 이전소득 및 어업소득률 변화 추이	36
[그림 2-20] 연안어업의 톤급별 승선 인원에 대한 응답 분포	37
[그림 3-1] 어업지원 논리 개발의 접근 방식	45
[그림 3-2] 직간접 어업 지원 정책	58
[그림 3-3] 2026 해양수산업의 정책적 의미	60

[그림 4-1] 설문 항목의 구성	67
[그림 4-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68
[그림 4-3] 응답자의 업종별·연령 분포	69
[그림 4-4] 근해어업 응답자의 업종 분포	70
[그림 4-5] 연안어업 응답자의 업종 및 지역 분포	70
[그림 4-6] 응답자 어선의 톤급별 분포	71
[그림 4-7] 어업활동 시 애로점에 대한 응답 분포	72
[그림 4-8] 근해어업의 어업활동 시 애로점에 대한 응답 분포	72
[그림 4-9] 연안어업의 어업활동 시 애로점에 대한 응답 분포	73
[그림 4-10] TAC 제도의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73
[그림 4-11] 근해어업의 TAC 제도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74
[그림 4-12] 연안어업의 TAC 제도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74
[그림 4-13]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75
[그림 4-14]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분포	76
[그림 4-15] 근해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76
[그림 4-16] 근해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분포	77
[그림 4-17] 연안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78
[그림 4-18] 연안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분포	78
[그림 4-19]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79
[그림 4-20] 근해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80
[그림 4-21] 연안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80
[그림 4-22] 어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 경영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81
[그림 4-23] 후계 계획에 대한 응답 분포	82
[그림 4-24] 근해어업의 어업 지속가능성 및 지속 경영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82
[그림 4-25] 근해어업의 후계 계획에 대한 응답 분포	83
[그림 4-26] 연안어업의 어업 지속가능성 및 지속 경영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83
[그림 4-27] 연안어업의 후계 계획에 대한 응답 분포	84
[그림 4-28] 어업투자의 필요성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85

[그림 4-29] 근해어업의 어업투자 필요성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85
[그림 4-30] 연안어업의 어업투자 필요성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86
[그림 4-31] 지원 필요성 및 선호 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 분포	87
[그림 4-32] 어업별 지원 필요성 및 선호 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 분포	87
[그림 4-33]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88
[그림 4-34] 근해어업의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89
[그림 4-35] 연안어업의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89
[그림 4-36] 제도적 지원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90
[그림 4-37] 근해어업의 제도적 지원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90
[그림 4-38] TAC 관련 어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92
[그림 5-1] 어업지원 방향 설정	99
[그림 5-2] 연근해어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108
[그림 5-3]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향	109
[그림 5-4] 어선을 활용한 실시간 수온 정보 수집 체계	113
[그림 5-5] 수협역의 역할 변화	114
[그림 5-6] 수협의 중점 지원 사업 로드맵	119
[그림 5-7] 수협 실무부서의 발전 방향	124
[부록 그림 1]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36
[부록 그림 2]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36
[부록 그림 3]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37
[부록 그림 4]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37
[부록 그림 5]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38
[부록 그림 6]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38
[부록 그림 7]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39
[부록 그림 8]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39
[부록 그림 9]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40
[부록 그림 10]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40
[부록 그림 11]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41

[부록 그림 12]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41
[부록 그림 13]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42
[부록 그림 14]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42
[부록 그림 15] 대형트롤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43
[부록 그림 16] 대형트롤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43
[부록 그림 17] 대형트롤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44
[부록 그림 18] 대형트롤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44
[부록 그림 19] 대형트롤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45
[부록 그림 20] 대형트롤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45
[부록 그림 21] 대형트롤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46
[부록 그림 22]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46
[부록 그림 23]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47
[부록 그림 24]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47
[부록 그림 25]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48
[부록 그림 26]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48
[부록 그림 27]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49
[부록 그림 28]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49
[부록 그림 29] 동해구트롤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50
[부록 그림 30] 동해구트롤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50
[부록 그림 31] 동해구트롤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51
[부록 그림 32] 동해구트롤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51
[부록 그림 33] 동해구트롤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52
[부록 그림 34] 동해구트롤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52
[부록 그림 35] 동해구트롤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53
[부록 그림 36]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53
[부록 그림 37]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54
[부록 그림 38]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54
[부록 그림 39]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55
[부록 그림 40]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55

[부록 그림 41]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56
[부록 그림 42]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56
[부록 그림 43]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57
[부록 그림 44] 대형선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57
[부록 그림 45] 대형선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58
[부록 그림 46] 대형선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58
[부록 그림 47] 대형선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59
[부록 그림 48] 대형선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59
[부록 그림 49]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60
[부록 그림 50] 기선권현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60
[부록 그림 51] 기선권현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61
[부록 그림 52] 기선권현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61
[부록 그림 53]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62
[부록 그림 54] 기선권현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62
[부록 그림 55] 기선권현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63
[부록 그림 56] 기선권현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63
[부록 그림 57] 근해안강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64
[부록 그림 58] 근해안강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64
[부록 그림 59] 근해안강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65
[부록 그림 60] 근해안강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65
[부록 그림 61] 근해안강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66
[부록 그림 62] 근해안강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66
[부록 그림 63] 근해안강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67
[부록 그림 64] 근해채낚기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67
[부록 그림 65] 근해채낚기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68
[부록 그림 66] 근해채낚기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68
[부록 그림 67] 근해채낚기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69
[부록 그림 68] 근해채낚기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69
[부록 그림 69] 근해채낚기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70

[부록 그림 70] 근해채낚기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70
[부록 그림 71] 근해자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71
[부록 그림 72] 근해자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71
[부록 그림 73] 근해자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72
[부록 그림 74] 근해자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72
[부록 그림 75] 근해자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73
[부록 그림 76] 근해자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73
[부록 그림 77] 근해자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74
[부록 그림 78] 근해연승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74
[부록 그림 79] 근해연승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75
[부록 그림 80] 근해연승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75
[부록 그림 81] 근해연승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76
[부록 그림 82] 근해연승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76
[부록 그림 83] 근해연승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77
[부록 그림 84] 근해연승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77
[부록 그림 85] 잠수기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178
[부록 그림 86] 잠수기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178
[부록 그림 87] 잠수기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179
[부록 그림 88] 잠수기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179
[부록 그림 89] 잠수기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180
[부록 그림 90] 잠수기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180
[부록 그림 91] 잠수기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181
[부록 그림 92] 연안자망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182
[부록 그림 93] 연안자망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183
[부록 그림 94] 연안통발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184
[부록 그림 95] 연안통발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184
[부록 그림 96] 연안복합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185
[부록 그림 97] 연안복합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186
[부록 그림 98] 연안복합 및 연안자망어업의 선원수에 대한 응답 분포	186

제 1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수산물은 인류에게 식량 중 하나이며, 향후에도 그 사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도 인류의 수산물 이용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이용의 대상인 수산자원의 경우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은 인류의 보편타당성과 당위성 측면에서의 공통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지속적인 어업경영 기반을 확보하고 어업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수산자원 이용의 궁극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어업기술의 발전과 과도한 어획노력 투입은 수산자원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수산자원의 이용과 수산자원의 지속이 공존할 수 있는 임계치를 월등히 넘어선 어업노력의 투입은 수산자원량의 감소를 초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업 허가제도, 금어기, 금어구, 체장제한 등 기술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어업을 관리해 왔다. 1999년에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를 도입하여 더욱 강력하고 국제기준에 준하는 관리를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최근 크게 회자되고 있는 기후변화(Climatic Change)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서식지나 산란지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관련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금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 확보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더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어업 제도의 변화만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 이전에 어업에 내재한 잠재력, 지속가능성 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업의 상태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 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에 제도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로 인한 변화를 촉진시킬 것인가는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각 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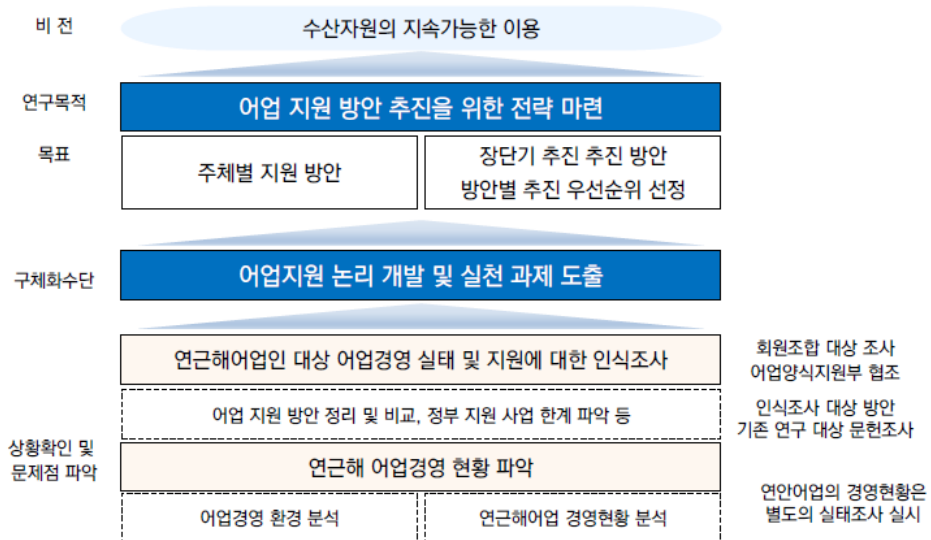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 어업관리제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 및 확보를 위한 근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에 내재한 잠재력, 지속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본 연구는 어업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이 무엇이고, 각 주체별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근해어업의 경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어업의 상태를 진단한다. 또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인지 수준, 정책 수용도, 경영 인식 등을 분석한다. 이에 덧붙여 정부의 해양수산사업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어업지원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어업 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전략은 주체별로 추진할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한 방안별 추진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중·장기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연구 방법 및 진행

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도출로 구분하여 연구 방법도 달리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① 어업 환경 분석, ② 어업 관련 정책 분석, ③ 어업경영 실태 및 인식 분석으로 나뉜다. 문헌연구를 기본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관련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분석한다. 어업 경영 실태 및 인식의 경우 설문조사와 함께 경영분석, 통계분석 등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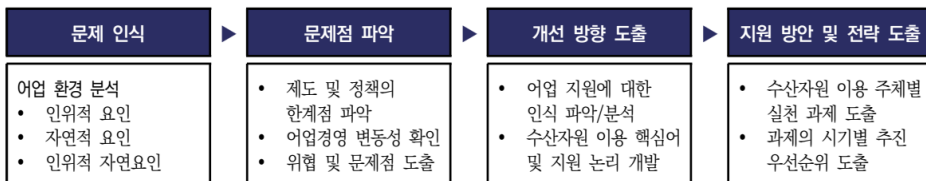
〈표 1-1〉 주요 연구 방법

구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방안 도출	
	어업 환경 분석	어업 관련 정책 분석	어업경영 실태 및 인식 분석	어업 지원 방향 설정	실천 과제 도출
목적	어업 환경의 위협 파악	어업 지원 정책의 한계 파악	연근해 어업경영의 문제점 파악	어업 지원 기본 방향 설정	주체별 실천 과제 도출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관련 자료 수집 • 자료 정리 및 분석	• 정책 자료 수집·정리 • 분류 및 한계 분석	• 문헌 및 실태 조사 • 설문조사 • 경영분석, 통계분석	[※] 규범적 접근 • 어업 지원 논리 및 자원 이용 핵심어 도출	[※] 집단지성 이용 • 전문가 및 실무자 등 토론

개선 방안 도출은 ① 어업 지원 방향 설정과 ② 실천 과제 도출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는 정책적·철학적 관점에 기반한 규범적 접근, 집단지성의 이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와의 논의 과정은 실효성 있는 실천 과제 도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진행

연구의 진행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문제 인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업 환경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문제점 파악이다. 현재 어업이 가지는 문제점, 어업과 관련한 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게 된다. 어업의 문제점의 경우 어업경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수지현황 등의 경영실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어업경영의 변동성 역시 어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다음 단계는 개선 방향 도출이다. 어업 지원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정책 수용도 등을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산자원 이용 및 어업지원 논리를 충분히 고민하여 진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지원 방안 및 전략 도출이다. 수산자원 이용 주체별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한다.

2. 연구의 구성

연구는 총 6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과 결론 각 1개 장, 본론 4개 장이다. 먼저 서론의 경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구성,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결론에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본론인 4개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은 어업경영 환경 및 연근해어업의 경영실적이다. 이 장에서는 어업경영 환경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어업의 위협요인을 정리했다. 그리고 어업경영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어업의 내부적인 문제를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3장은 어업 지원의 필요성 및 정책 동향이다. 정부의 2026년 해양수산정책사업 중 어업·수산사업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했다. 또한 어업 지원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는데, 이는 새로 개발된 논리도 포함한다.

4장은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기획,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어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업 지원 방안을 수록했다. 어업 지원 방향은 물론이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했다. 크게 보면 ① TAC와 관련한 연구와 ② 어업인 지원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TAC 관련 연구

TAC는 정부 수산자원관리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 주제의 성격 상 정책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정부의 정책 연구와 KMI에서 수행한 연구 등 관련 연구는 크게 제도 도입 및 관리 측면의 정책연구와 정책 대상 관점에서 수행된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2〉 TAC 관련 선행 연구

구 분	연 구
정책입안자 입장에서의 연구	류정곤·John M. Gates·남종오(2005), 다수어종·다수어업의 TAC 결정모델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류정곤·John M. Gates·남종오·김대영(2006), 다수어종·다수어업의 TAC 평가에 관한 연구 II : 단일어종·다수어업/다수어종·다수어업 TAC 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류정곤·심성현·고동훈·오서연·한다정(2019),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2012),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정책 대상 입장에서의 연구	이창수·박지훈(2019),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김우경(2020), TAC 제도 하 어업인 소득보전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박지훈(2023), TAC 제도 기반 어업규제 혁신 추진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먼저 정책입안자 입장에서의 연구는 TAC 제도의 확대, 평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류정곤 외(2005), 이정삼 외(2006)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2012)도 TAC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ITQ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정삼 외(2019)의 경우 TAC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였다.

반면 정책 대상의 입장에서 수행한 연구는 수협·수산경제연구원 등에서 주로 진행하였다. 이창수·박지훈(2019)은 TAC 제도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언했다. 획일화된 운영모델이 아닌 지역·업종·어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별 모델 적용을 주장했다. 이창수·김우경(2020)은 TAC 제도로 인한 어업인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의 제한과 관련해 그 반대급부로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방안을 제언했다. 어획부문 소득보장보험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비교적 최근으로 볼 수 있는 이창수·박지훈(2023)은 TAC 제도 하에서 불필요한 어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 대상의 입장에서 수행한 연구가 상반된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TAC 제도가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 방식 등에서 주장하는 바가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상호 보완적인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어업인 지원 관련 연구

어업인 지원과 관련한 연구 역시 정책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관련 연구는 주로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최근 기후변화, 급격한 어황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어황 변동 등에 대응한 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창수(2024)와 이창수(2025) 등 두 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표 1-3〉 어업인 지원 관련 선행 연구

구 분	연 구
최근의 연구	이창수(2024), 어항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2025),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및 어업인 지원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2024)의 경우 동해안에서 발생한 급격한 어항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홍어의 개념, 어업재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어획부문 보험도입을 강조했다. 이창수(2025)는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어업지원 방안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특히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 및 정책지원조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 두 연구의 접근 방식을 따랐다. 특히 실천과제 도출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이창수(2025)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였다.

제 2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어업경영 환경 및 연근해어업의 경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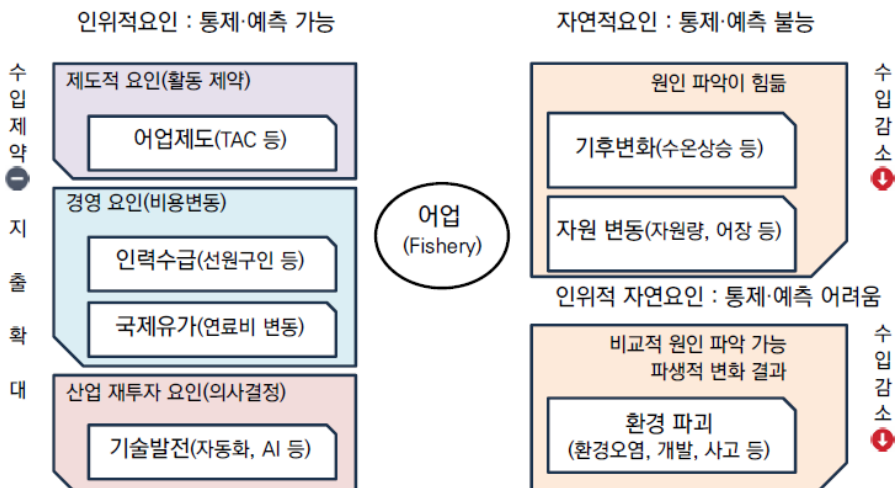
- 제 1 절 어업경영 환경의 변화
- 제 2 절 근해어업 경영실적 분석
- 제 3 절 연안어업 어업경영 동향
- 제 4 절 시사점



제 1 절 어업 경영환경의 변화

1. 어업경영 환경

어업을 둘러싼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업경영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변화 역시 어업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1] 어업 경영환경의 변화

어업 환경을 구분하면 크게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 그리고 인위적 자연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위적 요인의 경우 통제·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 경영, 재투자 등의 요인을 말한다. 자연적 요인은 통제·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자연 재해 등을 포함한다. 인위적 자연요인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통제와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주로

환경 파괴로 발생하는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어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각 환경별로 변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인위적 요인의 변화

가. 제도적 변화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통해 어업 및 수산자원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어획보고의 의무화이다.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작동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조업일 마다 어획 실적 또는 전재 계획·실적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어선소유자가 수산자원의 양륙 후 실적 역시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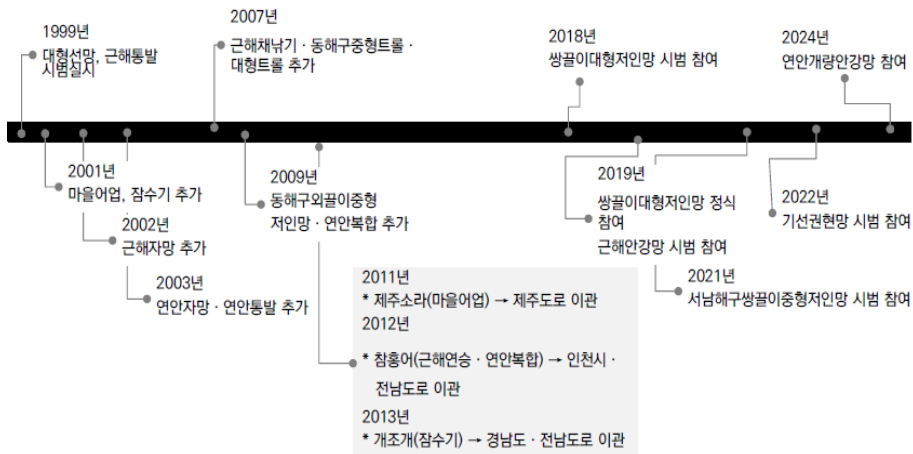
둘째, 지정양륙항 이용이다. 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지정양륙항에서만 양륙하도록 제한한다. 단,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나 낙도벽지, 소령어선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셋째, 어획확인서 발급·전달 의무화이다. 어획확인서 발급을 통해 어선소

유자가 양륙실적 보고를 완료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 및 수산물 유통 시 어획 확인서 전달 의무화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수입 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 발급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어획증명제가 시행된다.

나. TAC 제도의 전면 확대 기초

TAC 제도의 전면 확대 기초는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TAC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업종 또는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TAC 제도를 전업종 및 어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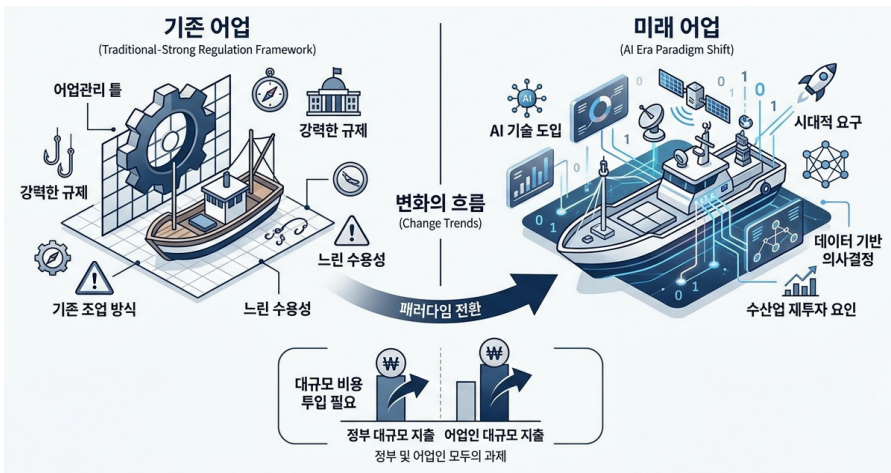
[그림 2-2] TAC 제도의 변천

이는 어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역차별을 없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AC 제도 적용으로 인한 역차별이 상쇄될 수 있다. 특히 연안어업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은 우리나라 어업에서의 획기적 변화로 평가받을 수 있다. 둘째, 기존 생산 중심 어업에서 시장·자원 중심 어업으로의 전환이다. 얼마나 많이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가가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셋째,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 노력이 강조된다. 어업인의 경영 이윤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는 제고 될 수 있다. 물론 어업인의 경영 이윤 포기에 대한 지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술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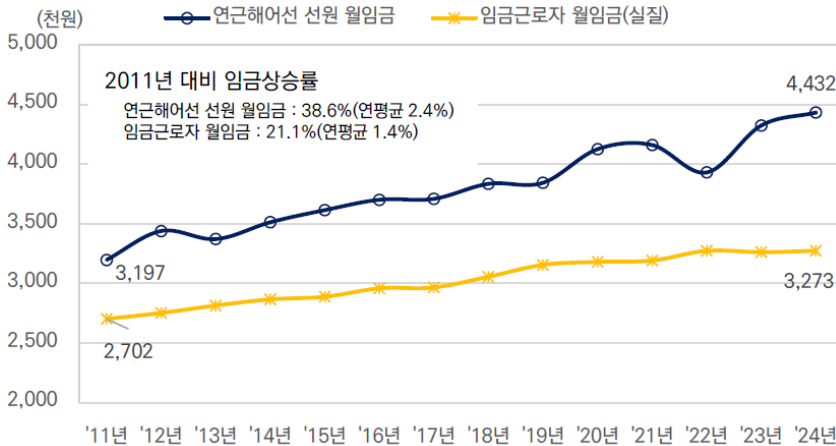
급격한 기술 발전도 눈여겨 봐야 할 요인이다. 기존의 어업은 어업관리의 특성상 강력한 규제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성과가 어업 현장에 적용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기술 발전에 대한 수용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기술의 도입,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은 어업경영 및 자원관리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그림 2-3] 인위적 요인 : 기술 발전

라. 주요 비용의 급격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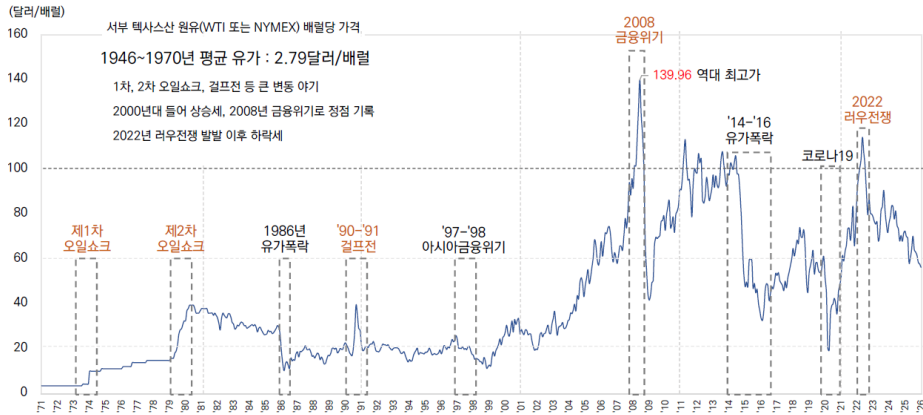
어업경영에서 중요한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연료비로 볼 수 있다. 이 중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원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선원 임금은 일반 임금근로자의 월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어업경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4년 현재 연근해어선의 선원 월임금은 443만원으로 2011년 대비 38.6% 높았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2.4%로 임금근로자 월임금 증가율 1.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림 2-4] 인위적 요인 : 선원임금의 변화

연료비는 인건비와 함께 어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비용이다. 이는 국제유가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변동이 잦고, 그 폭도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큰 변동성은 어업경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그림 2-5] 인위적 요인 : 국제유가 변화

다음의 표는 주요 근해어업의 연료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어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최근 3년 주요 근해어업 연료비 비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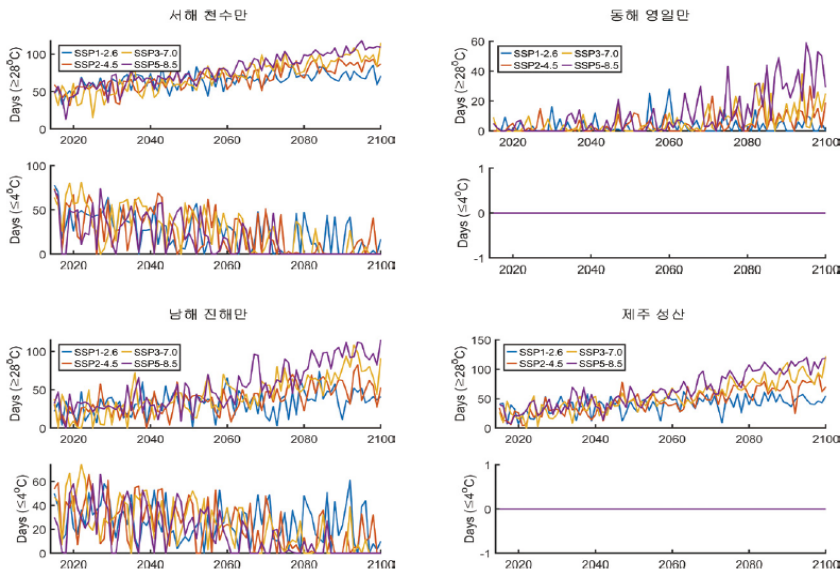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어업비용	연료비	비중	어업비용	연료비	비중	어업비용	연료비	비중
주요근해어업평균	972	254	26.2	970	223	23.0	976	214	22.0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4,326	2,034	47.0	4,096	1,819	44.4	4,034	1,520	37.7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802	221	27.5	817	196	23.9	799	179	22.4
대형트롤어업	2051	811	39.6	1,833	709	38.7	1,871	679	36.3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670	196	29.2	626	179	28.5	713	172	24.1
동해구중형트롤어업	613	100	16.3	163	32	19.6	65	12	18.9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1011	283	28.0	1,011	243	24.1	910	231	25.4
대형선망어업	12,592	3,533	28.1	14,570	2,925	20.1	13,895	2,691	19.4
기선권현망어업	2,740	786	28.7	2,942	790	26.8	2,840	591	20.8
근해안강망어업	949	265	28.0	1,038	254	24.5	1,009	230	22.8
근해채낚기어업	435	158	36.2	331	97	29.5	407	116	28.4
근해자망어업	927	142	15.4	995	145	14.6	986	144	14.7
근해연승어업	1,085	210	19.4	1,094	210	19.2	1,077	200	18.6
잡수기어업	233	23	9.9	218	20	9.3	210	21	9.9

3. 자연적 요인의 변화

가. 기후변화

최근 10년 내 어업에서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주목할 변화를 보였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의 2024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면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한 SSP5-8.5 시나리오의 경우, 동해는 5℃ 내외, 서해와 남해, 동중국해는 4℃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¹⁾



자료 : 국립수산물과학원,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2024.

[그림 2-6] 시나리오별 고수온 및 저수온 특보 기준 초과 일수 비교

1) 지난 56년간(1968-2023년) 해역별 수온 상승 정도 차이와 유사하게 동해가 다른 해역에 비해 수온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국립수산물과학원, 2024)

서해 천수만, 남해 진해만, 동해 영일만, 제주의 성산 등 우리나라 주요 위치의 연안과 내만의 수온 분포를 예측했다. 고수온 특보 발표 기준은 수온 28℃,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은 수온 4℃로 이를 기준으로 고수온과 저수온 일수를 계산했다. 시나리오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SSP5-8.5 시나리오 하에서 2090년 이후 28℃를 상회(上廻)하는 일수는 서해 천수만, 남해 진해만, 제주 성산의 경우 연평균 100일 이상 지속되고, 동해 영일만은 50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해 천수만과 남해 진해만에서는 2090년 이후에는 4℃보다 낮은 날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오징어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참조기는 58%, 오징어와 멸치는 각각 30%,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어, 삼치 등의 생산량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2〉 2050년 주요 어종의 생산량·생산액 변동 추정

어종별	생산량(천 톤)		생산 금액(억 원)		변화율
	2023년	2050년	2023년	2050년	
오징어	23	16	2,572	1,800	△30%
멸치	148	109	3,103	2,296	△26%
참조기	15	6	1,447	607	△58%
방어	25	28	894	992	26%
삼치	46	58	1,917	2,43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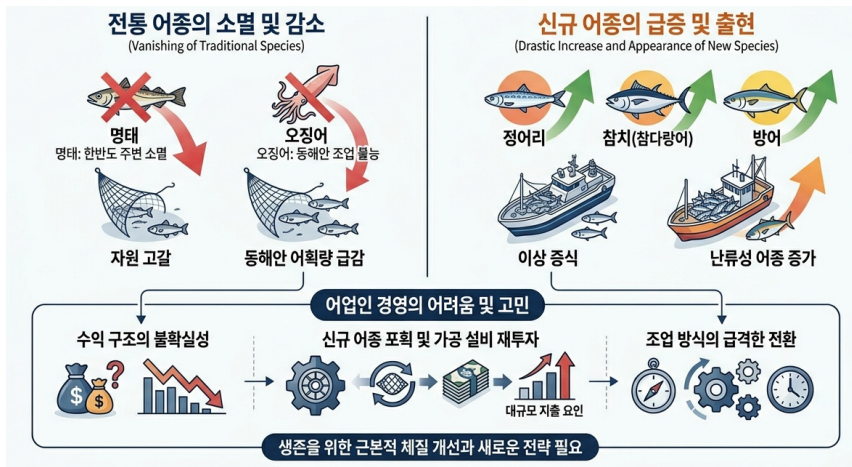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24. 12. 5.

나. 급격한 수산자원 변동

어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받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수산자원의 경우 특히 수산자원 변동은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어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대표적으로 명태의 경우 급격히 소멸하여 오늘날에는 사실상 어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4년

전 동해안의 흥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아직까지도 어황이 회복되지 않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채낚기어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어업경영에서 수익 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최근 정어리, 참치, 방어 등의 어종의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조업 방식에 급격한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어종변화에 따른 여타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어업인의 측면에서는 신규 어종의 포획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 확대로 어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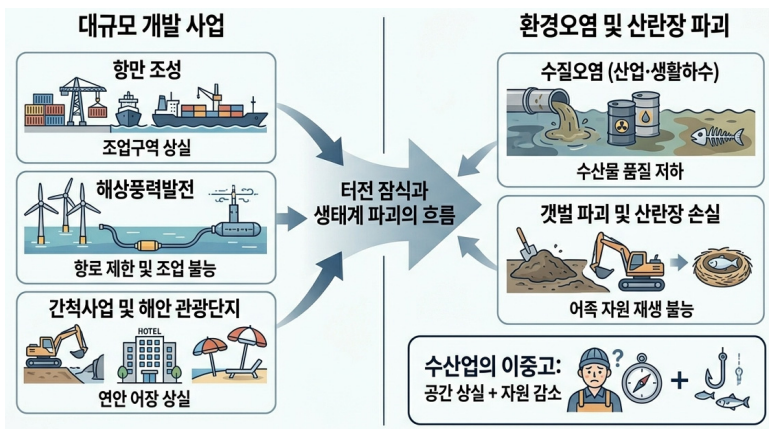


[그림 2-7] 자연적 요인 : 급격한 수산자원의 변동

4. 인위적 자연요인

어업은 산업 특성상 자연의존적인 생산 방식을 유지해 왔다. 어업의 특성

상 자연 의존적인 성격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발전 과정에서 대규모 연안·해양 개발이 확대되었다. 대규모 항만 개발, 간척사업 및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산업 및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갯벌의 파괴, 어족자원의 산란장 손실 등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 등으로 인해 조업어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어업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조업 공간의 상실과 수산자원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그림 2-8] 인위적 자연 요인 : 수산업의 이중고

제2절 근해어업 경영 실적 분석

본 절에서는 근해어업의 경영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업종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해어업평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개별 업종의 내용은 부록으로 편성하였다.

1. 분석 개요

경영실적의 분석 대상은 주요 근해어업으로 한정했다. 수협중앙회의 ‘어업경영조사보고’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동 조사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83년부터 2024년으로 가장 최근 자료까지 반영한 것이다.

주요 경영 분석 내용은 수지비율, 부채비율, 출어 및 어로일수 등이다. 그리고 업종별 경영실적의 추세와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간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했다. 기간은 1983~1999년, 2000~2010년, 2010~2024년이다.

2. 주요 지표 분석 결과

가. 경영 실적

근해어업 평균의 총수입은 2010~2024년 1,181,429천원을 기록하며, 1983~1999년의 241,761천원에 비해 388.7% 증가했다. 총비용은 같은 기간 211,884천원에서 953,854천원으로 350.2% 늘었다. 순이익률도

12.4%에서 19.3%로 좋아졌는데, 2000~2010년은 9.0%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동 기간동안 어업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3〉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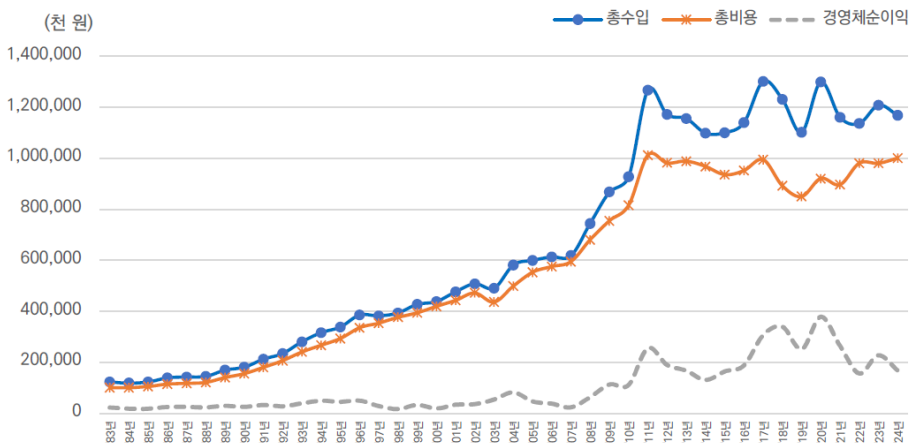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 분	'99년 이전	'00년~'10년	'11년~현재	'99년 이전 대비
총수입	241,761	624,087	1,181,429	388.7
총비용	211,884	567,617	953,854	350.2
경영체순이익	29,877	56,470	227,575	661.7
순이익률	12.4	9.0	19.3	55.9

주 : 어업경영조사 상 '주요 근해어업 평균'의 경영실적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나. 주요 경영실적 추이

다음의 그림은 총수입, 총비용, 경영체순이익 등을 1983년부터 그 추이를 도식한 것이다. 최근 들어 변동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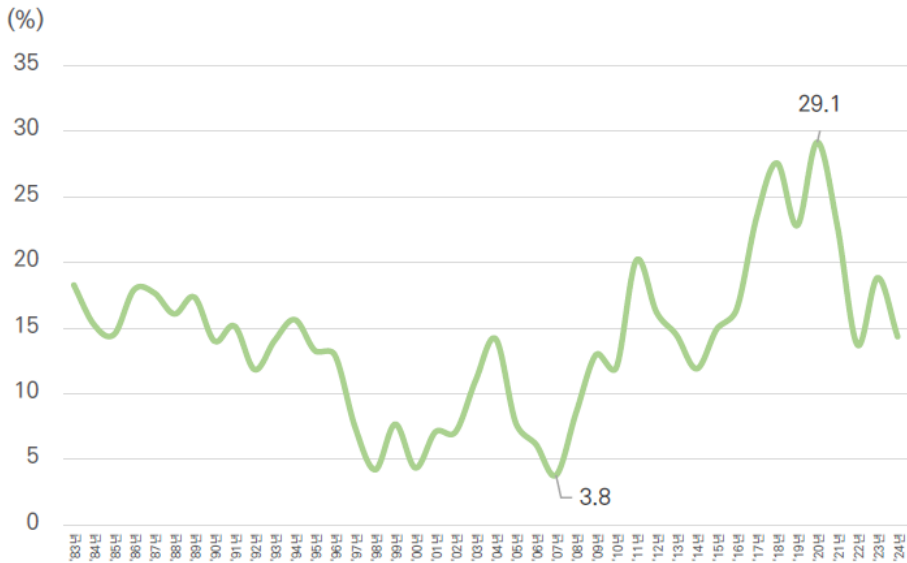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그림 2-9] 근해어업 평균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다. 순이익률 추이

근해어업평균의 순이익률 추이를 보면 2010년대 들어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폭은 3.8%에서 29.1%로 그 차이는 25.3%p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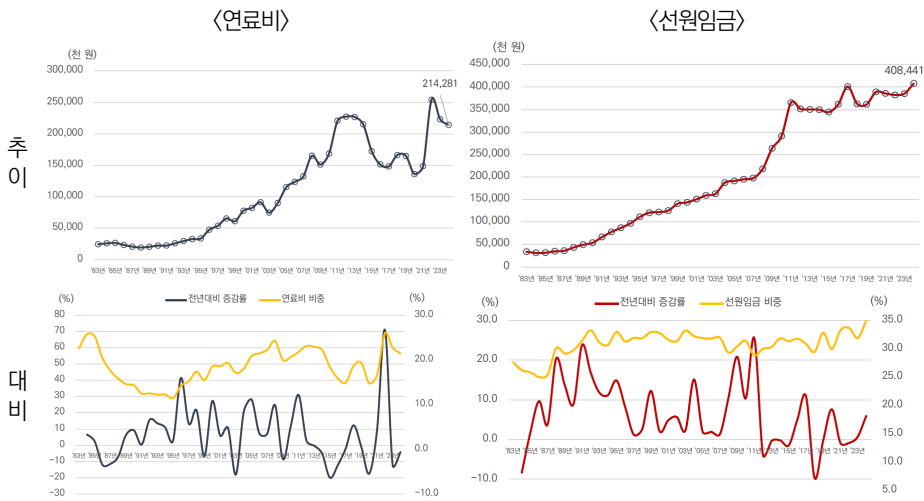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그림 2-10] 근해어업 평균의 순이익률 추이

라.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근해어업에서 비중이 큰 비용항목은 연료비와 선원임금이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료비와 선원임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세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감율과 비용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의 비중도 그래프로 표현했다.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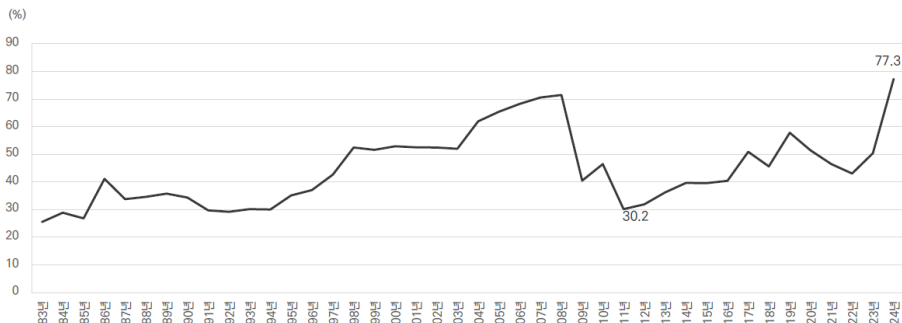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그림 2-11] 근해어업 평균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마.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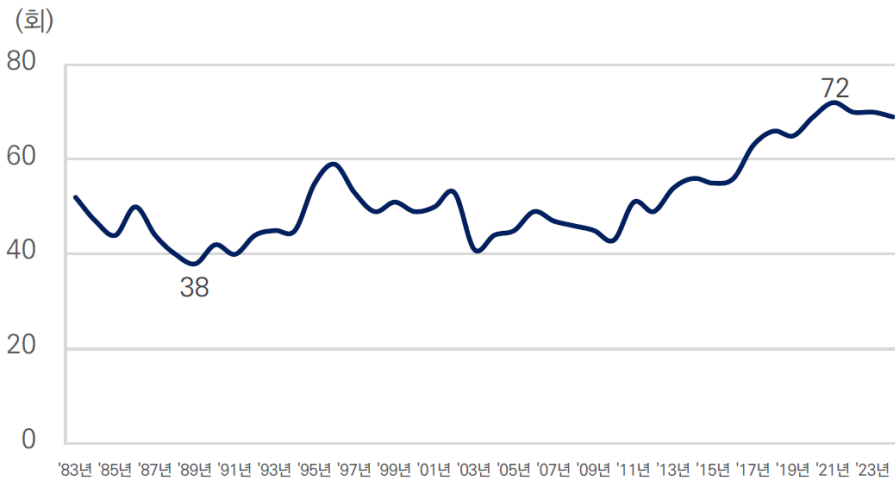
부채비율은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후 30~40%대를 보였지만 최근 급격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분석 기간 내 최고 수준(77.3%)을 기록했다.



[그림 2-12] 근해어업 평균의 부채비율 추이

바. 출어횟수 추이

출어횟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 이전 38회이던 출어횟수는 최근 72회까지 증가했다. 이는 엔진 성능의 개량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조업 거리는 늘어난 반면 이동 속도 역시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 영향에 따라 당일 조업도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한 출어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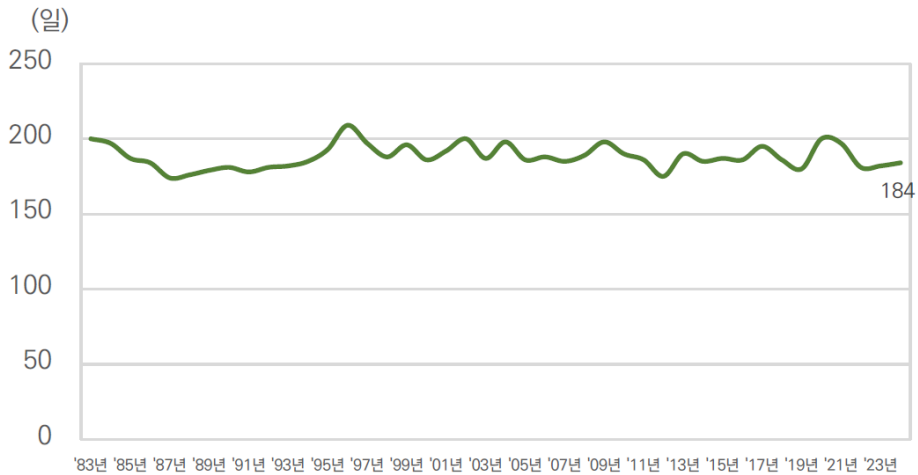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그림 2-13] 근해어업 평균의 출어횟수 추이

사. 출어일수 추이

근해어업 평균의 출어횟수는 증가한 반면 출어일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업 효율 개선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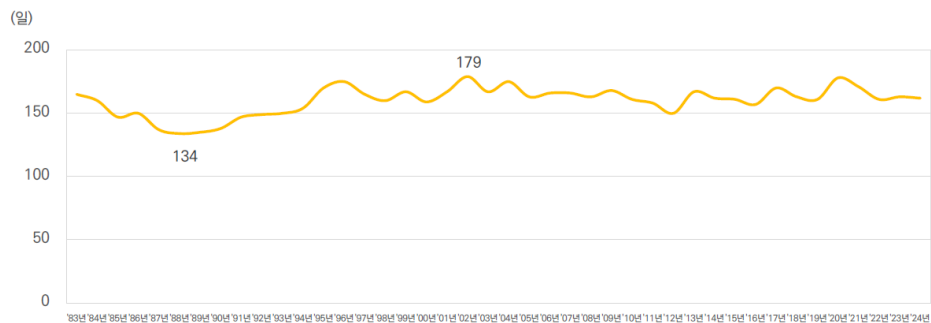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그림 2-14] 근해어업 평균의 출어일수 추이

아. 어로일수 추이

근해어업 평균의 어로일수도 1990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50~180일 사이에서 해마다 어로일수가 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그림 2-15] 근해어업 평균의 어로일수 추이

3. 근해어업의 경영 변동성 비교

가. 경영실적 변동성 비교

다음의 표는 근해어업의 경영실적 및 주요 비용의 시기별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즉 각 시기별 개별 항목의 최댓값과 최솟값, 그리고 그 차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최근 시기로 갈수록 변동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어업경영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졌음을 의미한다.

〈표 2-4〉 근해어업의 경영 변동성 비교

(단위 : 천원, %, %p)

구 분		99년 이전	'00년~'10년	'11년~현재	
총수입	최대	427,122	927,455	1,301,138	
	최소	118,790	438,236	1,098,752	
	GAP	27.8	47.3	84.4	
총비용	최대	394,293	816,212	1,011,930	
	최소	100,526	419,132	850,435	
	GAP	25.5	51.4	84.0	
경영체 순이익	최대	49,820	112,868	378,554	
	최소	16,612	19,104	130,837	
	GAP	33.3	16.9	34.6	
순이익률	최대	18	14	29	
	최소	4	4	12	
	GAP	14.0	10.4	17.2	
주 요 비 용	연료비	최대	65,475	168,559	254,260
		최소	19,219	74,682	136,045
		GAP	29.4	44.3	53.5
	선원 임금	최대	140,698	291,203	408,441
		최소	31,189	143,692	344,685
		GAP	22.2	49.3	84.4

주 : 어업경영조사 상 '주요 근해어업 평균'의 경영실적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나. 순이익률 기준 업종별 변동성

다음의 표는 순이익률을 시기별 업종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5년의 경영 상황을 추가했다. 분석기간 동안 변동성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여타 업종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이 심하게 나타났다.

〈표 2-5〉 순이익률 기준 업종별 변동성(최고점-최저점) 동향

(단위 : %p)

구 분	99년 이전	'00년~ '10년	'11년 이후	최근 5년 경영 상황
주요 근해어업평균	14.0	10.4	17.2	-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23.7	14.1	39.7	• 오징어 등 어황 부진으로 경영실적 저조 • 적자 경험
외끌이대형 저인망어업	25.6	8.0	36.5	
대형트롤어업	25.3	53.7	58.1	• 오징어 등 어황부진으로 경영실적 저조 • 적자 지속, 경영난 심각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41.6	16.7	13.5	-
동해구 중형트롤어업	29.5	17.8	231.3	• 동해안 및 오징어 어황 부진, 각종 어업규제로 경영 실적 저조 • 적자 지속, 경영난 심각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33.6	16.1	24.4	• 삼치 등 일부 어종의 어황이 양호하여 비교적 안정적 경영 실현
대형선망어업	27.7	21.5	33.7	-
기선권현망어업	45.3	25.4	31.2	• 포장단위 개선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세 진입
근해안강망어업	35.4	21.8	26.2	-
근해채낚기어업	37.7	27.8	44.6	• 오징어 어황 부진으로 경영 실적 저조 • 적자 지속, 경영난 심각
근해자망어업	25.5	14.5	23.7	-
근해연승어업	27.7	11.7	20.4	-
잠수기어업	14.8	26.1	8.1	-

제3 절 연안어업 어업 실태 분석

연안어업의 어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1. 연안어업 경영 실태 조사 개요

연안어업의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연안어업 경영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4장에서 다루게 될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포함하여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여한 조합은 총 26개 조합이다.

〈표 2-6〉 연안어업 경영 실태 조사 참여 조합 현황

구 분	조사 참여 조합
경인(2)	경기수협, 경인북부수협
강원(4)	삼척원덕수협, 동해시수협, 죽왕수협, 속초시수협
충남(4)	서천군수협, 서산수협, 당진수협, 보령수협
전북(1)	부안수협
전남(3)	고흥군수협, 여수수협, 해남군수협
경북(2)	울진후포수협, 포항수협
경남(6)	경남 고성군수협, 하동군수협, 통영수협, 남해군수협, 거제수협, 부경신항수협
부산(1)	부산시수협
제주(3)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조사항목은 어획량, 매출액, 비용, 손익 등 경영실적, 출어일수, 조업일수의 조업활동을 포함했다. 그리고 톤급과 승선인원을 조사함으로써 조업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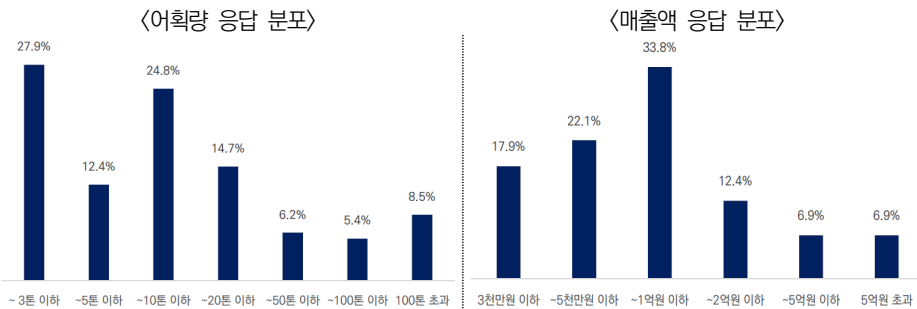
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연안어업의 기초 통계량 다음의 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표 2-7〉 연안어업의 기초 통계량

구 분	어획량	매출액	비용	손익	출어일수	조업일수
평균	45.3	13461.5	8184.4	4375.6	183.6	175.2
최빈값	2	5000	2000	2000	200	250
표준 편차	154.4	20222.5	15768.7	3680.1	68.9	64.0
최솟값	0.15	270	100	-500	15	15
최댓값	1429	130000	96000	22000	300	300
관측수	129	145	144	144	137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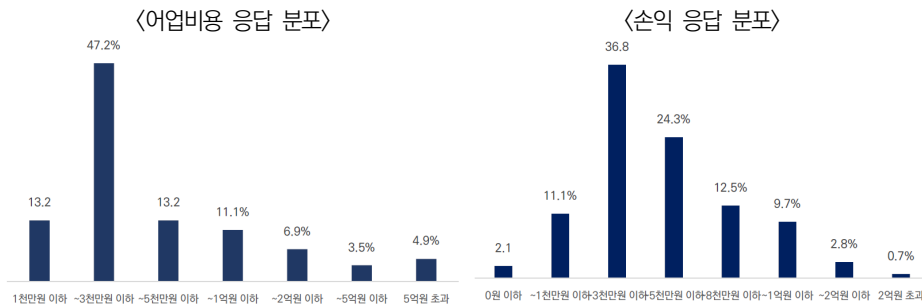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어획량과 매출액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면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규모라는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어획량의 경우 연간 5톤 이하가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연간 5,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0.0%로 나타났다.



[그림 2-16] 연안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어업비용과 손익에 대한 응답 분포도 어획량과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영세성을 드러내고 있다. 어업비용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손익은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전체의 3/4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림 2-17] 연안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한편 어가소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평균 어선사용어가의 경우 53,497천원, 이 중 어업소득은 17,409천 원이었다. 상기 어업비용 및 손익에 대한 응답 분포와 비교할 경우 소득 상황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8〉 어로어가 및 어선사용어의 소득 동향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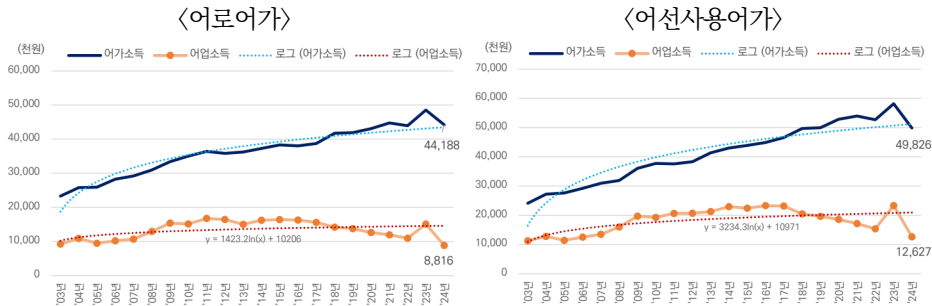
구 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총수입	어업경영비	어업 외 소득
최근	어로어가	44,905	11,864	43,135	31,272	14,659
5년 평균	어선사용어가	53,497	17,409	71,415	54,006	14,575
최근	어로어가	45,562	11,603	44,819	33,216	14,904
3년 평균	어선사용어가	53,573	17,104	74,547	57,444	14,157

자료 : 국가데이터처, 어가경제조사

어가 소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다. 어가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4년 현재 연간 4,4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중 어업소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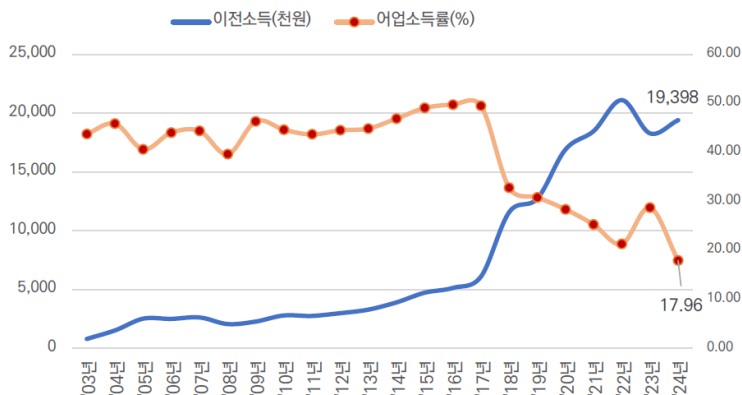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8.0%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연근해어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의해 서도 증명되고 있다.



자료 : 국가데이터처, 어가경제조사

[그림 2-18] 어가의 어가소득 및 어업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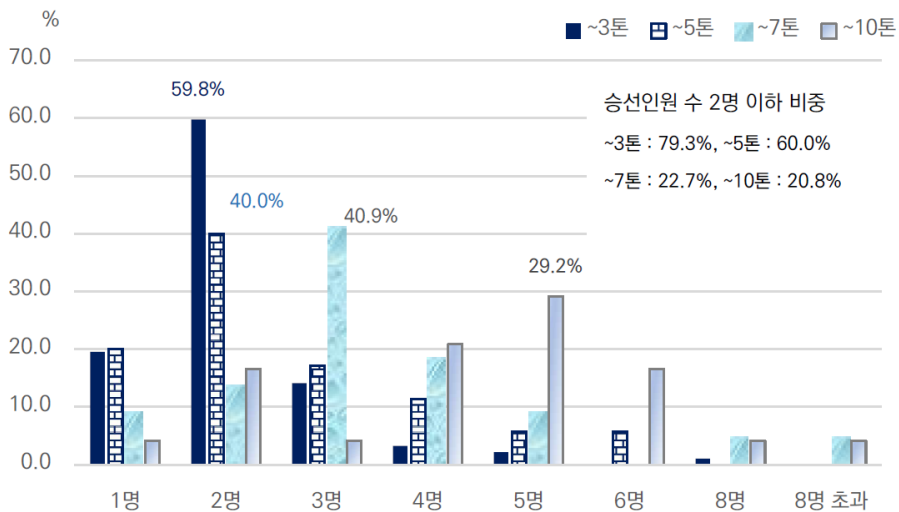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어선사용어가의 이전소득 및 어업소득을 변화 추이이다. 앞선 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어업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어가 소득은 늘어났다. 그 이유는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전소득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자료 : 국가데이터처, 어가경제조사

[그림 2-19] 어선사용어가의 이전소득 및 어업소득을 변화 추이

한편, 톤급별 승선인원 응답분포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조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승선인원 2명 이하의 비중은 3톤 이하가 79.3%, 3~5톤 이하는 6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안어선에서 상대적 큰 배로 구분할 수 있는 5~7톤 이하, 7~10톤 이하의 경우 승선인원 2명 이하의 비중은 각각 22.7%, 20.8%로 나타났다.



[그림 2-20] 연안어업의 톤급별 승선 인원예 대한 응답 분포

제 4 절 시사점

이 절에서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경영실적 및 어업동향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1. 어업경영 불확실성의 구조적 확대

최근의 어업경영 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도 자연환경 변화, 어황 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은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국제유가 변동, 수산자원 급변, 제도 변화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어업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영실적 분석 결과 시기별 변동 폭이 최근으로 올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어업경영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 확대는 단순히 수익 감소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업인의 투자 의사결정, 경영계획 수립, 인력 운영, 조업 방식 선택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향후 어업지원 정책은 단순 생산 지원 중심이 아니라 경영 안정성과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비용 증가 압력의 지속

어업경영에서 인건비와 연료비는 가장 중요한 비용 항목으로 작용한다.

분석 결과 선원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반 임금근로자 대비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어업 노동의 강도와 위험성,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층의 어업 기피 현상은 향후 인건비 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어업경영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료비 역시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 폭 확대는 연료비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조업계획 수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 활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경영 지원을 넘어 비용 절감형 기술 도입과 경영 효율화 지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어업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가중

최근의 수산자원 변동은 특정 어종 중심의 어업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명태는 사실상 어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동해안 오징어 역시 급격한 어황 악화 이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어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업일수록 수산자원 변동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어종 분포와 회유 경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방어, 참치, 삼치 등 일부 어종의 생산량 증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 조업 방식과 경영 구조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규 어종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구·어법 변화, 유통체계 개선, 시장 대응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투자 부담 역시 발생한다. 결국 최근의 어항 변화는 단순한 생산량 변화가 아니라 어업경영 구조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연안어업 영세성 및 취약성의 구조화

연안어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안어업은 소규모·영세적 경영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획량과 매출액 모두 일정 수준 이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비용과 손익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소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어업 자체만으로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최근 어가소득 증가는 이전소득 확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동 구조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승선인원 2명 이하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한된 인력 기반 위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 강도 증가와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영세·소규모 구조가 지속될 경우 연안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안어업 지원은 단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구조적 취약성 개선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어업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요구

최근 어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기존 어업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정책이 생산 확대 또는 단기 경영 안정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는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확보, 경영 불확실성 완화 등 보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TAC 제도의 전면 확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등은 우리나라 어업관리 체계가 데이터 기반·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는 어업인의 새로운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위치보고, 어획보고, 지정양륙항 이용 등 새로운 제도적 의무는 경영 비용과 행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어업지원 정책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수용성 제고, 경영 위험 완화, 구조 전환 지원, 신규 어종 대응 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접근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어업지원의 필요성 및 어업·수산 정책사업 동향

- 제 1 절 어업지원의 필요성
- 제 2 절 어업·수산 정책사업 동향
- 제 3 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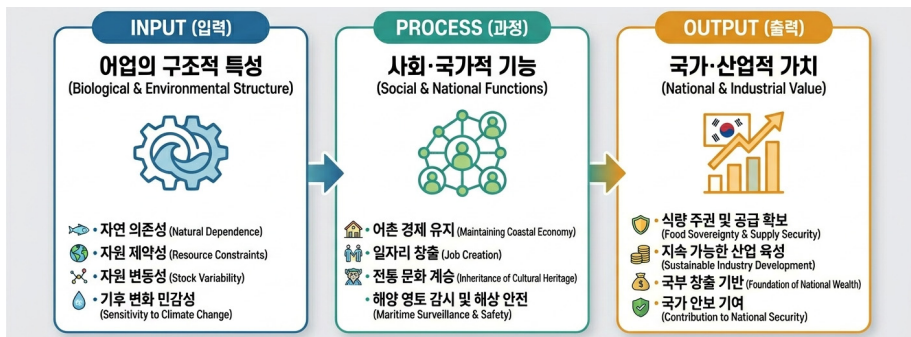
제 1 절 어업 지원의 필요성

이 절에서는 기존 어업이 가지는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복지성 지원 논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1. 어업 지원 논리 접근 방향

어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기반과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어업의 구조적 특징, 기능, 그리고 가치를 감안하면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어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한 지원 논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어업을 왜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업의 사회·국가적 기능에 따른 지원 논리이다. 이는 어업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업의 국가·산업적 가치에 기반한 지원 논리가 도출된다. 이는 어업이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해답이다.



[그림 3-1] 어업지원 논리 개발의 접근 방식

2. 어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논리

어업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운영 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특수성을 가진다. 수산자원은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자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어업은 단순히 시장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머무르지 않으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체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업인은 단순 생산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관리 주체의 역할까지 함께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가의 자원관리 정책은 어업인의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금어기, 금지체장, 감척사업, 휴어제 등 다양한 규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상당 부분 개별 어업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가진다. 즉, 어업인은 공공의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에 참여하면서도 생산 제한, 조업 제한, 소득 감소 등의 부담을 직접 감수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공공적 기능 수행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또한 어업은 시장 메커니즘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 산업은 기술 혁신이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일정 부분 위험을 통제할 수 있지만, 어업은 자연환경 의존성이 매우 높아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크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 해양환경 변화, 적조, 자원량 변동, 국제 유가 상승, 수산물 가격 불안정 등은 어업인의 노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어장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어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어업은 공유자원 관리, 자연환경 의존성, 높은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 산업이다. 따라서 일반 산업과 동일한 시장 원리만으로 접근할 경우 생산기반 붕괴, 자원 고갈, 지역경제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어업지원은 단순한 산업 보호정책이 아니라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가 해양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 정책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표 3-1〉 어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반한 지원 논리

구 조	내 용	지원 논리의 의미
공유자원 기반 산업	수산자원이라는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작동	어업인은 단순 생산자가 아니라 자원 이용과 관리에 동시에 참여하는 주체
관리 책임	규제 강화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개인이 부담	공공적 자원관리 비용을 개별 어업인이 부담하는 구조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	기후변화·자원 변동·가격 불안정 등 통제 불가능 요소 존재	일반 산업과 달리 시장 기능만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어려움
높은 불확실성	자연환경과 국제시장 변화에 직접 영향	소득 안정성과 경영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공공정책 의존	자원관리·질서 유지·환경보전과 정책이 밀접히 연결	국가 정책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업 구조
외부효과 발생	자원보호·환경관리 효과가 사회 전체에 귀속	개인 수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익적 효과 존재

3. 어업의 기능 및 역할 측면에서의 지원 논리

어업은 단순히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반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어업은 해양공간을 실제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현장 기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바다는 육상과 달리 관리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며, 어업인은 연안과 해양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해양공간의 실질적 관리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 생산활동을 넘어 국가 해양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유지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업은 해양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양사고, 기상 악화, 오염사고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바로 어업인이다. 연안과 해상에서 상시 활동하는 어업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양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정보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 안전관리 체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업은 연안지역 인구 유지와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어업 기반이 약화될 경우 연안 및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해양관리 공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어업이 사실상 지역경제의 중심 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어업 유지 자체가 지역 존속과 직결된다.

아울러 어업은 수산식품 산업의 기초 생산기반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수산물 생산이 유지되어야 가공, 유통, 외식, 관광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관광 산업 확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어업은 단순 1차 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해양 전통지식과 어업기술을 계승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어장 환경, 조업 방식, 해양 변화에 대한 현장 경험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려운 국가적 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어업활동은 연안 해역 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환경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수온 변화, 적조, 오염 등 해양환경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주체 역시 현장의 어업인이다.

결국 어업은 단순한 생산산업이 아니라 해양관리, 지역 유지, 산업 유지, 환경 감시, 문화 보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 산업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어업지원은 특정 산업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해양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정책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표 3-2〉 어업의 기능 및 역할 측면에서의 지원 논리

기 능	역 할	지원 논리의 의미
해양관리	해양공간의 실질적 관리 주체 유지	어업인은 단순 생산자가 아니라 연안 및 해양공간의 실질적 이용·관리 주체 역할 수행
재난 대응	해양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기반 유지	사고·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현장 기반 유지 필요
지역 유지	연안지역 인구 유지 및 해양관리 공백 방지	어업 기반 약화 시 연안지역 공동화 및 관리 공백 우려
산업 기반	수산식품 산업의 원료 공급 기반 유지	가공·유통·외식 등 수산식품 산업 유지의 기초 생산 기반 역할
지식·기술	해양 전통지식과 어업기술의 국가적 자산 보존	축적된 현장 경험과 기술은 단절 시 복원 어려운 국가 자산
질서 유지	연안 해역 이용 질서 유지	어업활동 자체가 연안 이용 질서와 공간 관리 안정성 유지에 기여
환경 감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 수행	수온·오염·적조 등 환경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인지하는 현장 감시체계 역할
해양활동 기반	국가 해양활동 인프라의 지속적 활용 기반 유지	항포구·위판장·냉동시설 등 해양활동 인프라 유지 기반 제공
문화·공동체	해양문화 및 어촌 생활양식의 보존	어촌의 문화·생활양식·공동체 유지에 핵심적 역할 수행

4. 어업의 국가·산업적 가치에 기반한 지원 논리

어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와 해양주권, 지역 유지, 산업생태계 형성에 직결되는 필수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과거의 어업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투자라

는 관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즉, 어업지원은 특정 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업은 국민 먹거리 공급과 직결되는 식량산업이다. 국제 분쟁,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수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가격 불안정과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생산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호가 아니라 식량주권 확보의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우리 스스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국내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해양주권과 자원관리 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국내 어업 기반이 약화될 경우 주변국 어선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쇠퇴를 넘어 국가 해양관리 역량 약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업지원은 해양영토와 자원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의미도 가진다.

어업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산업은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공, 유통, 냉동·물류, 기자재, 외식, 관광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체험관광, 온라인 유통, 수산식품 가공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 기반 유지와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어업은 어촌을 존속시키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어업이 약화되면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어촌 공동체 붕괴와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안 및 도서지역은 어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업 유지 자체가 지역 유지 정책과 직결된다.

이와 함께 어업은 자연환경 의존성이 높고 재해와 시장 변동에 취약한 산업이라는 특성도 가진다. 기후변화, 수온 상승, 적조,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장 기능만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결국 어업지원은 단순한 보호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 3-3〉 어업의 국가·산업적 가치에 기반한 지원 논리

구분	지원 논리	핵심 의미	정책적 연결
국가·주권	식량(먹거리) 주권의 지속 확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유지	식량안보, 공급망 안정, 자급 기반 유지
	우리 자원의 주체적 이용 도모	우리 수산자원을 우리 국민과 산업이 활용하도록 유지	EEZ 관리, 해양주권, 자원관리 정책
	사라질 수 없는 산업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산업	국가 필수산업 관리, 지속가능성 정책
	헌법 등에 보호의무 명기	국가의 보호·육성 책임이 제도적으로 부여됨	헌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산업	수산자원의 지속이용 수단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산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체계 유지 필요	TAC, 금어기, 직불제, 감척사업
	하나의 산업으로 전후방 구조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생산 외에도 가공·유통·물류·기자재 등 산업 연계 효과 존재	산업생태계 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거리의 존속 및 신규 창출	기존 어업 유지뿐 아니라 신규 고용·창업 기반 제공	청년어업인, 어촌비즈니스, 창업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관광·체험·가공·디지털 유통 등 융복합 가능성 존재	6차산업화, 어촌관광, 스마트어업
지역·사회	어촌을 존속시키는 근간 산업(Classic industry)	어업이 어촌의 정주·경제·공동체 유지 기반 역할 수행	지역소멸 대응, 어촌 활성화 정책
공공성	공익적 기능을 수행	식량공급, 해양환경 관리,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기능 수행	공익직불제, 환경·생태 정책
형평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	자연환경 의존성, 소득 불안정성, 영세성 등 구조적 취약성 존재	재해지원, 소득안정, 경영안정 정책

제 2 절

정부의 어업·수산 정책 현황

1. 어업·수산 관련 정부 사업 구분

어업·수산과 관련한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정부의 해양수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바탕으로 ‘어업·수산 관련 정부 사업’을 분류하면, 수산정책관 6개, 어업자원정책관 5개 등 11개 핵심사업, 22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3-4〉 어업·수산 관련 정부 사업

8. 수산정책관	9. 어업자원정책관
8-15 수산어업행정지원	9-3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① 어선안전장비지원
8-18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9-4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 ②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8-19 수산장비(임대)활용 ① 수산장비임대 ② 이동수리소 지원	9-7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①-1 연근해어선감척(2026년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①-2 연근해어선감척(2026년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①-3 연근해어선감척(2026년도 정치망어업 감척)
8-2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① 어업활동지원	9-10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① 바다숲 조성 ② 수산자원 증대(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③ 수산종자 자원관리 ④ 충허용어획량제도 운영
8-21 수산 공익직불제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9-11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8-23 원양어업활성화 ① 원양어업 국제규제대응 ② 해외어장 자원조사	9-12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

※ 사업명 앞 번호 표기는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의 번호를 그대로 옮김

2. 2026년 어업·수산 분야 세부 사업의 주요 내용

가. 개요

2026년 해양수산업 중 어업 및 수산 분야는 수산정책관 및 어업자원정책관 소관으로 구성되며, 총 11개 주요 사업과 22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 자료는 각 세부사업의 사업 내용, 대상,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 수산정책관 소관 사업

(1) 수산장비(임대)활용

① 수산장비임대

어업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 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은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이며, 어업 생산 활동 전반에 활용된다. 기대효과는 장비 구입비 절감과 어업 작업 효율성 향상이다.

② 이동수리소 지원

어선 및 장비 고장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업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형 정비체계를 운영한다. 대상은 연근해 어업인이며, 기대효과는 조업 중단 시간 감소 및 어업 손실 최소화이다.

(2) 어업인 삶의 질 향상

① 어업활동지원

어업인의 기본적인 어업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업 환경 개선 및 활동 지원 요소를 포함한다. 대상은 어업인이며, 기대효과는 작업 부담 완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이다.

(3) 수산 공익직불제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원 보호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자원 보호 활동 참여 어업인 및 어촌계이다. 기대효과는 자원 보호 활동 참여 확대 및 자원 회복 기여이다.

(4) 원양어업활성화

① 원양어업 국제규제대응

국제 수산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이다. 국제 협약 및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은 원양어업 기업 및 관련 기관이다. 기대효과는 조업 안정성 확보 및 규제 리스크 감소이다.

② 해외어장 자원조사

해외 어장의 수산자원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신규 어장 개발 및 자원 활용 기반 자료를 구축한다. 대상은 원양어업 관련 기관이다. 기대효과는 어장 개발 가능성 확대 및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이다.

다. 어업자원정책관 소관 사업

(1)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① 어선안전장비지원

어선 안전 운항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장비 지원이 포함된다. 대상은 어선 소유 어업인이며, 기대효과는 해상 사고 발생 위험 감소이다.

(2)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

어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 체계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 대상은 어업 사업장이며, 기대효과는 산업 재해 감소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이다.

②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어선 작업환경 개선 및 위생·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설비 개선이 포함된다. 대상은 어업 사업장이며, 기대효과는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이다.

(3) 연근해어선 감척

① 근해어업 감척

근해어업 어선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사업이다. 어획량 조절 및 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근해어업 경영자이며, 기대효과는 어획 압력 감소 및 자원 회복이다.

② 연안·구획어업 감척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어장 이용 강도를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대상은 연안어업 종사자이며, 기대효과는 어장 부담 완화 및 자원 지속성 확보이다.

③ 정치망어업 감척

정치망 어업 구조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특정 어업 방식의 집중도를 완화한다. 대상은 정치망 어업 종사자이며, 기대효과는 자원 이용 부담 감소 및 구조 개선이다.

(4) 수산자원조성사업

① 바다숲 조성

해조류 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연안 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대상은 연안 해역이며, 기대효과는 생태계 회복 및 자원 증가이다.

② 산란·서식장 조성

어류 산란 및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연 재생산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연근해 해역이며, 기대효과는 자원 회복 및 개체 수 증가이다.

③ 수산종자 자원관리

수산종자의 생산 및 방류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자원 공급 체계를 안정화한다. 대상은 양식 및 자원관리 기관이며, 기대효과는 자원 공급 안정성 확보이다.

④ TAC 운영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어획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대상은 전체 어업 종사자이며, 기대효과는 과잉 어획 방지 및 자원 지속성 확보이다.

(5)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어업 생산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원 및 생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대상은 어업 전반이며, 기대효과는 생산 안정성 및 자원 관리 효율성 향상이다.

(6)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업의 내용은 어업용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 및 지원하는 것이다. 면세유 공급 체계를 안정

화한다. 대상은 어업인 및 경영체이며, 기대효과는 연료비 절감 및 경영 안정성 향상이다.

제3절 시사점

1. 직간접 어업지원 정책의 특징

일반적으로 어업 지원사업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의 경우 출어비(영어자금), 연료비(면세유류 공급), 어구비, 제세공과금, 어선건조,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직불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간접지원의 경우는 수산자원 조성(자원량 증대), 진입 제한(경쟁 완화), 각종 보험 제도, 신용보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2] 직간접 어업 지원 정책

직접지원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자연환경과 수산자원 변동에 민감한 어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직접지원은 비용 지원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 역시 존재한다. 우선 지원의 효과가 단기 경영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산업 구조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지원이 반복될 경우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어업의 경우 수익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원금이 경영 안정과 생계 유지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 내부의 재투자나 구조 전환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직접지원은 산업 보호와 유지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반면 간접지원은 제도와 환경 개선을 통한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업경영의 기반 자체를 안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수산자원 조성이나 TAC 제도와 같은 자원관리 정책은 지속적인 어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험 및 신용보증 제도는 어업인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간접지원 역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제도 중심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어업인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지원의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특히 TAC 확대, 조업 규제 강화, 보고 의무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은 정책 목적과 달리 어업인에게서는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업종별 특성과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어업지원 정책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특성과 한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2026년 해양수산사업의 정책적 의미

2026년 해양수산사업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사업 목록 이상의 의미가 드러난다. 개별 사업은 행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지원사업이지만, 이를 관통해 보면 어업·수산 정책이 가지는 본질적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수렴된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전에 제시된 공식 분류가 아니라, 사업들을 관찰한 결과 도출할 수 있는 해석적 시사점이라는 것이다.

현장 유지 정책	산업유지 경제 정책	자율 조정 및 회복 정책
이미 존재하는 어업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	어업이 경제활동 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기반에 관심	어업 정책 내부에 성장과 동시에 축소, 확대와 동시에 조정이 공존

[그림 3-3] 2026 해양수산사업의 정책적 의미

첫째, 어업 정책은 “현장을 유지하는 정책”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어업인 교육훈련, 행정지원, 삶의 질 개선, 장비 임대와 수리 지원 등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어업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어업이 고도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구조 유지가 중요한 산업임을 보여준다. 정책의 상당 부분이 ‘성과 창출’보다 ‘작동 유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어업 정책의 기본 성격을 드러낸다.

둘째, 어업 정책은 동시에 “산업을 유지하는 경제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원양어업 활성화, 면세유 지원,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등은 어업을 단

순한 생계 활동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이 영역은 생산성과 비용 구조, 시장 대응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결국 어업이 경제 활동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기반에 해당한다. 즉, 어업 정책은 복지나 보조의 차원을 넘어 산업 운영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셋째, 어업 정책은 “스스로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어선 감척, 공익직불제, 어선 안전관리, 바다숲 조성, 산란장 조성, TAC 제도 등은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과잉을 줄이고 자원을 회복시키며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들이다. 이는 어업 정책 내부에 성장과 동시에 축소, 확대와 동시에 조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감척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정책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어업·수산관련 정부 사업의 성격

구 분	사업 번호	사업명	세부 사업	성 격
수산 정책관	8-15	수산업행정지원	-	현장 유지
	8-18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8-19	수산장비(임대)활용	① 수산장비임대 ② 이동수리소 지원	
	8-2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① 어업활동지원	조정·회복
	8-21	수산 공익직불제	①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8-23	원양어업활성화	① 국제규제대응 ② 해외어장 자원조사	산업 운영 축
어업자원 정책관	9-3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① 어선안전장비지원	조정·회복
	9-4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① 중대재해 대응 ② 클린사업장	
	9-7	연근해어선감척	① 근해·연안·정치망 감척	
	9-10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① 바다숲 ③ 종자관리 ② 산란장 ④ TAC	
	9-11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	산업 운영
	9-12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주 : 사업번호는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상의 번호를 그대로 옮김

결국 이 세 가지 의미는 서로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층위이다. 어업 정책은 현장을 유지하면서 산업을 운영하고, 동시에 자원과 구조를 조정하는 다층적 정책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업 목록은 단순한 지원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유지-운영-조정”이라는 서로 다른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정책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제 4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제 1 절 조사 기획

제 2 절 조사 결과

제 3 절 시사점



제 1 절 조사 기획

1. 인식 조사 개요 및 참여 조합

본 조사는 어업인의 어업경영과 어업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연근해어업인으로 어선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맨손어업과 해녀는 제외했다.

조사기간은 2026. 3. 10(화) ~ 3. 20(금)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했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수협이 계통조직 활용했다. 유효설문 수는 287개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5.8\%p$ 이다.

〈표 4-1〉 어업인의 어업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 어선어업을 경영하는 연근해어업인(맨손, 해녀 제외)
기간	• 2026. 3. 10(화) ~ 3. 20(금)
조사 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 자기기입식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수협의 계통조직 활용
유효 설문	• 287개
표본오차	• $\pm 5.8\%p$ (95% 신뢰수준)

조사에 참여한 조합은 총 31개 조합이다. 참여 조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표 4-2〉 조사 참여 조합 현황

구 분	조사 참여 조합
경인(2)	경기수협, 경인북부수협
강원(4)	삼척원덕수협, 동해시수협, 죽왕수협, 속초시수협
충남(4)	서천군수협, 서산수협, 당진수협, 보령수협
전북(1)	부안수협
전남(5)	고흥군수협, 여수수협, 해남군수협, 근해안강망수협, 근해유망수협
경북(3)	울진후포수협, 포항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6)	경남 고성군수협, 하동군수협, 통영수협, 남해군수협, 거제수협, 부경신항수협
부산(3)	부산시수협, 12잠수기수협, 대형선망수협
제주(3)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2. 조사 항목의 구성

조사 항목은 범주를 구분하여 구성했다. 지역, 연령, 업종, 선박 등에 대한 정보를 묻는 개인정보, 연안어업의 경영 실적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가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어업 경영상 애로점, ②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인식, ③ 어업경영의 지속 의지, ④ 어업경영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⑤ TAC 참여 업종을 대상으로 한 TAC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이다. 각각의 범주는 세부 항목으로 다시 구성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그림 4-1]에 정리하였다.

제4장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개인정보 지역/소속 수협 연령/성별 업종 선박수 선박별 본수 선박별 선원 수(본인 포함)	다. 최근 어업 경영 상 애로점 ① 어업 일반 구인난(선원 구인) 조업어장 이동(기후변화) 어군 탐지 입출항 어업인 간 갈등 조업구역 선정 낚시어선과의 갈등 정부 정책 변동성(TAC, CTRP, 자수관한 연도제정 및연령 제한 등) ② 비용 유류비 부담 부채 상환 부담 이자비용 부담 선원 임금 부담 어구비(주 어구) 부담 출어비(미끼, 주무식비 등) 부담 수리비 등 부담 ③ 투자 설비 투자 필요성 설비 투자 의향 어선 교체 의향	라. 정책 인지 ① 정부 정책 운용에 대한 인식 필요성 운용 의향 ② TAC 전면 확대 인지 여부 TAC 전면 확대 필요성 TAC 전면 확대 인지 여부 ③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인지 여부 자수관 필요성 자수관 참여 의향 자수관 운영 주체 자수관 수단 ④ 기술적 수단(공어기 등)에 대한 인식 필요성 적절성 어업인들의 준수 정도 인식 ⑤ 어업경영 지속 의지 경영 지속의 필요성 인식 10년 내 경영 지속 여부 후계계획 유무	바. 어업경영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① 경영지원이 필요한 이유(지원 논리) ② 경영지원의 필요성 인식 ③ 경영지원 방식별 선호도 금전적 직접 지원(직불제) 어차보전 용자 규모 확대 ④ 경영지원 관련 정책 선호도 감척 사업 확대 어선 신조 지원 어선 개량 지원 유통가공 지원 수산물 판매 지원 ⑤ 경영 개선 의지(개인 노력) 필요성 참여 의향 ※ 현재 TAC 참여 업종 대상 TAC 참여 중 애로점 및 건의사항 open형(자유형)
---	--	---	---

[그림 4-1] 설문 항목의 구성

제 2 절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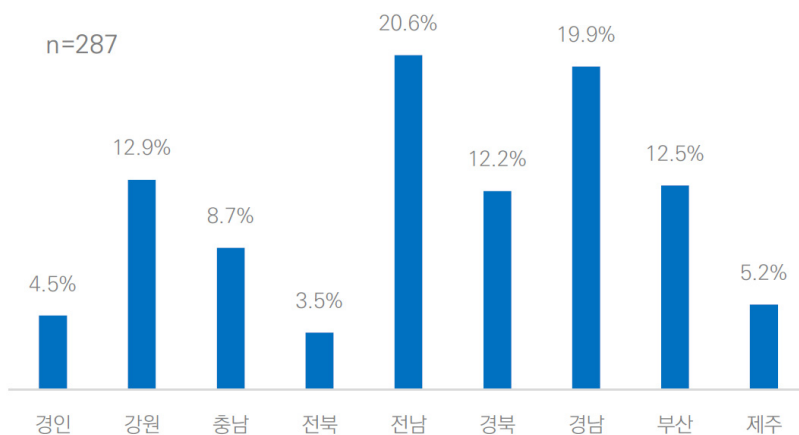
1. 응답자 분포

조사에 응답한 수는 287명이다. 이를 어업별로 구분하면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근해어업의 응답자는 106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 나머지 181명은 연안어업인데 전체 대비 비중은 63.1%이다.

〈표 4-3〉 어업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자 수(명)	비율(%)
합 계	287	100.0
근해어업	106	36.9
연안어업	181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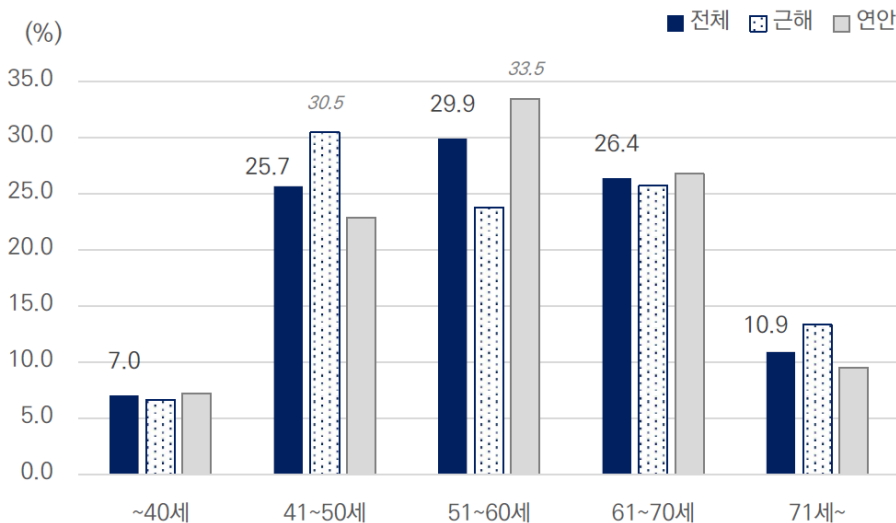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4-2]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이다.



[그림 4-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의 응답자 비중이 높았다. 전남의 응답자가 2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남의 19.9%였다. 이 외에도 강원, 경북, 부산 등의 분포 비중이 12%를 상회했다. 충남과 제주의 경우 응답자 비중은 8.7%, 5.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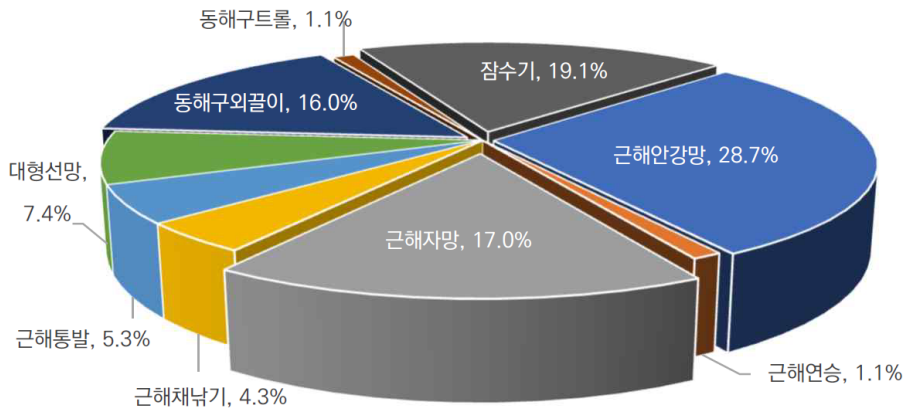
한편 응답자의 업종별·연령 분포를 보면 [그림 4-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51~60세의 비중이 2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26.4%인 61~70세, 25.7%의 41~50세 순이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연안어업의 경우 51~60세의 분포 비중이 더 커진 반면 근해어업에서는 오히려 41~50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4-3] 응답자의 업종별·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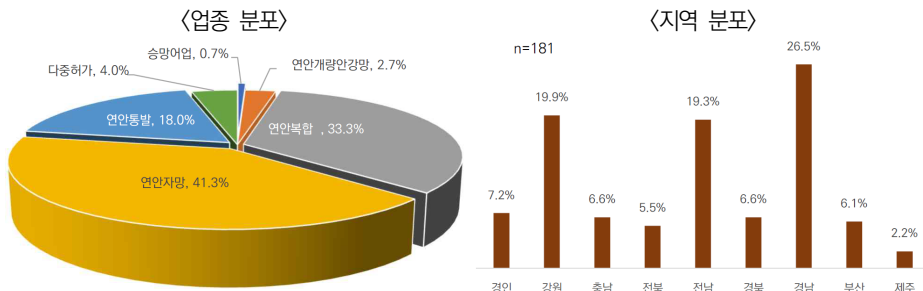
업종별 분포는 [그림 4-4]와 [그림 4-5]로 정리하였다. 먼저 근해어업의 세부 업종분포를 보면 근해안강망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잠수기(19.1%), 근해자망(17.0%), 동해구외끌이(16.0%) 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업종의 수는 9개였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그림 4-4] 근해어업 응답자의 업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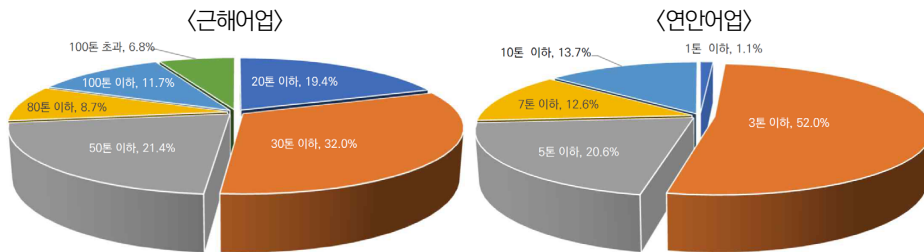
연안어업은 연안자망이 전체의 4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연안복합어업 33.3%, 연안통발 18.0%의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이 16.5%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9.9%, 전남이 19.3% 등이었다.



[그림 4-5] 연안어업 응답자의 업종 및 지역 분포

응답자의 어선 톤급은 [그림 4-6]에서 보는 것과 같다. 먼저 근해어업의 경우 20~30톤 이하의 비중이 32.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30~50톤 이하의 21.4%, 20톤 이하 19.4%의 순이었다. 100톤을 초과하는 어선도 6.8%로 나타났다.

연안어업은 1~3톤급 이하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다음으로는 3~5톤 이하로 전체 대비 비중은 20.6%였으며, 7~10톤 이하 13.7%, 5~7톤 이하 12.6%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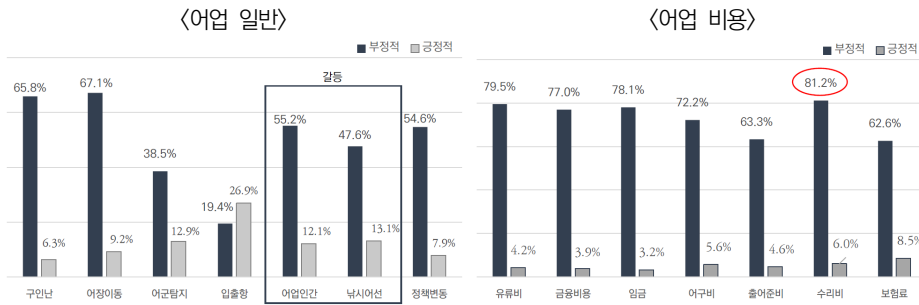
[그림 4-6] 응답자 어선의 톤급별 분포

2. 어업활동 시 애로점

어업활동 시 애로점은 어업 일반과 어업비용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어업일반의 경우 구인난과 어장이동 등이 어업 경영에서 어려운 요인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정책의 잦은 변동도 애로점으로 들 수 있다. 갈등의 경우 어업인 간의 갈등이 낚시어선과의 갈등에 비해 더 어려운 요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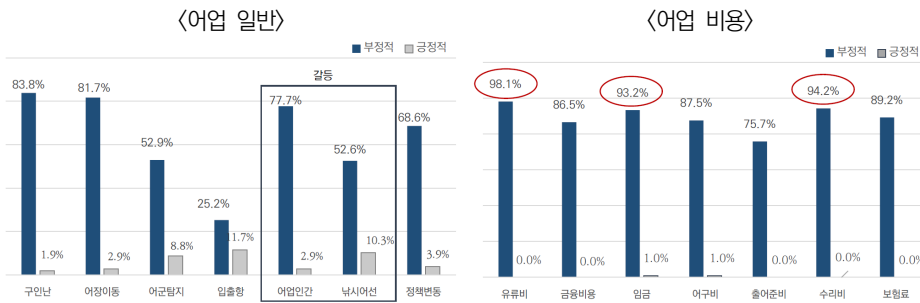
어업 비용의 경우 ‘수리비’에 대한 어려움이 여타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료비와 선원임금에 대한 어려움 역시 크게 나타났으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어업소득의 정체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체된 어업소득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 감당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선 및 설비에 대한 재투자저커녕 수리도 여유롭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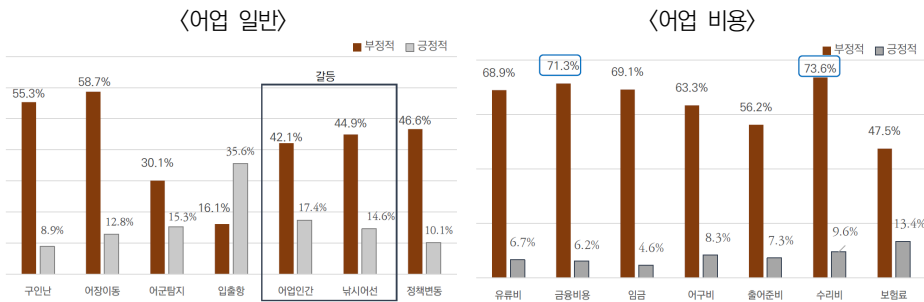
[그림 4-7] 어업활동 시 애로점에 대한 응답 분포

어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근해어업의 응답 분포이다. 근해어업의 응답분포는 전체 응답분포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용측면에서는 수리비, 유류비,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림 4-8] 근해어업의 어업활동 시 애로점에 대한 응답 분포

연안어업의 경우도 전체 응답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갈등의 경우 어업인 간 갈등보다는 낚시어선과의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어업 비용의 측면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이 다음으로 응답하여 근해어업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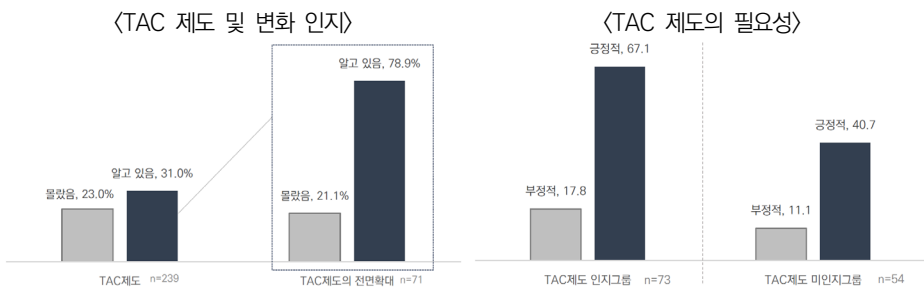


[그림 4-9] 연안어업의 어업활동 시 애로점에 대한 응답 분포

3. 정부 정책 인지 및 어업경영 계획

가. TAC 제도 인지 및 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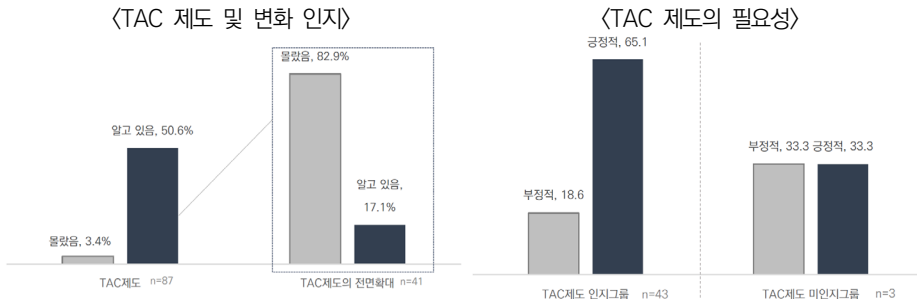
TAC 제도에 대한 인지는 알고 있음이 31.0%에 불과했다. 이 중 정부가 TAC 제도를 전면확대할 기조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78.9%가 인지하고 있었다. TAC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TAC 인지 그룹에서 67.1%, 비 인지 그룹에서는 40.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림 4-10] TAC 제도의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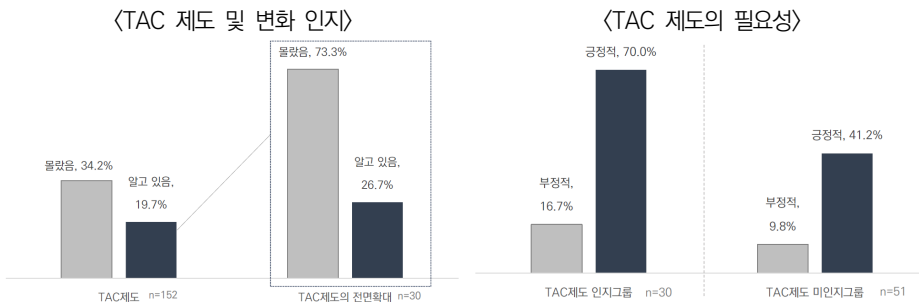
어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근해어업의 경우 TAC 인지도는 전체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TAC 인지 그룹 내에서 정부의 TAC 전면 확대 기조에 대한 인지는 낮은 편이었다. TAC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TAC 인지 그룹에서는 65.1%가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 응답 18.6%와 큰 차이를 보였다. TAC 제도 비 인지 그룹의 경우 표본 수가 3개에 불과하여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림 4-11] 근해어업의 TAC 제도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연안어업의 경우 TAC 제도를 대부분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TAC 인지도는 전체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TAC 인지 그룹 내에서도 정부의 TAC 전면 확대 기조에 대한 인지는 낮은 편이었다. TAC 제도의 필요성은 TAC 인지 그룹에서 70.0%, 비 인지그룹 41.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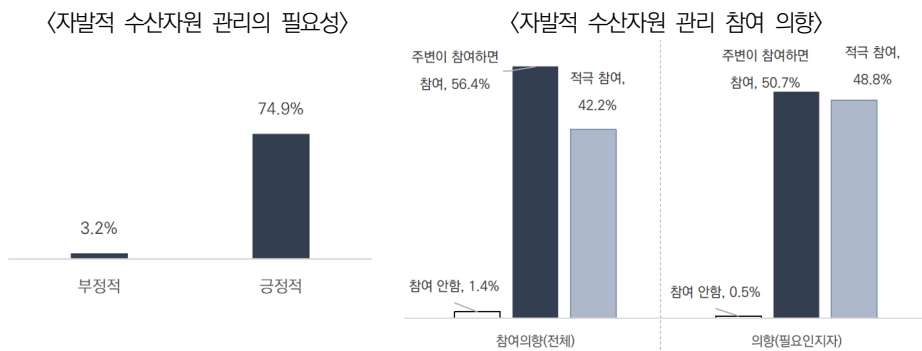


[그림 4-12] 연안어업의 TAC 제도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및 주체

수산자원관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이다. 실제 수협을 중심으로 몇몇 업종에서 자발적인 휴어기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74.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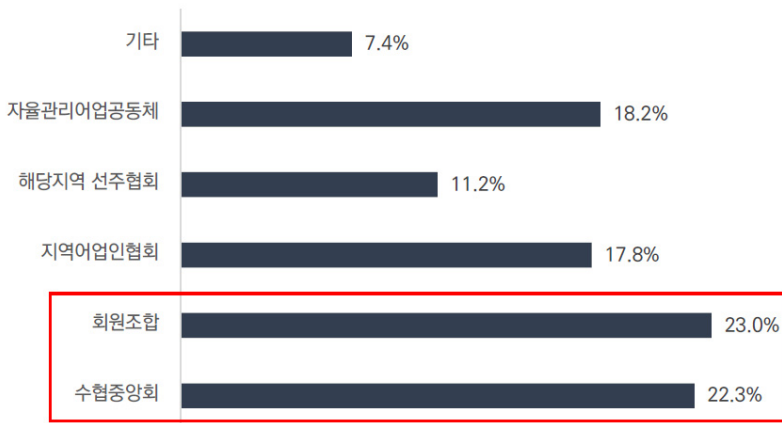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자 자신의 참여 의향의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보다 주변이 참여하면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 56.4%,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인지자 내에서도 50.7%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그림 4-13]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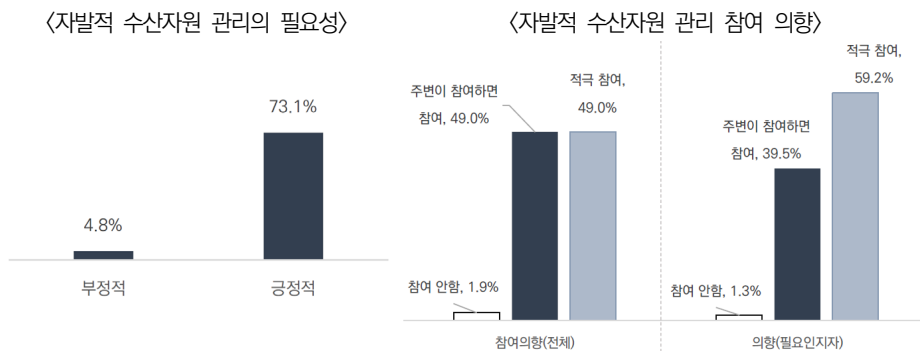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의 운영주체의 경우 회원조합이 23.0%, 수협중앙회가 22.3%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동에서 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응답도 18.2%로 나타나 향후 관련 운동 추진 시 고려할 요인이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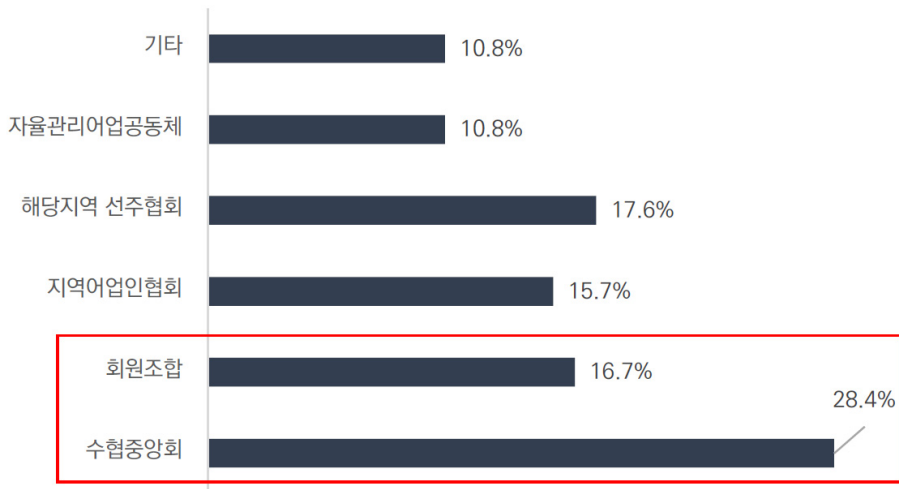
[그림 4-14]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분포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업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근해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73.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참여 의향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근해어업 전체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주변이 참여하면 참여하겠다는 의향과 동률을 이뤘다. 그렇지만 필요성을 인지한 그룹의 경우 적극 참여의향이 59.2%로 더 높았다.



[그림 4-15] 근해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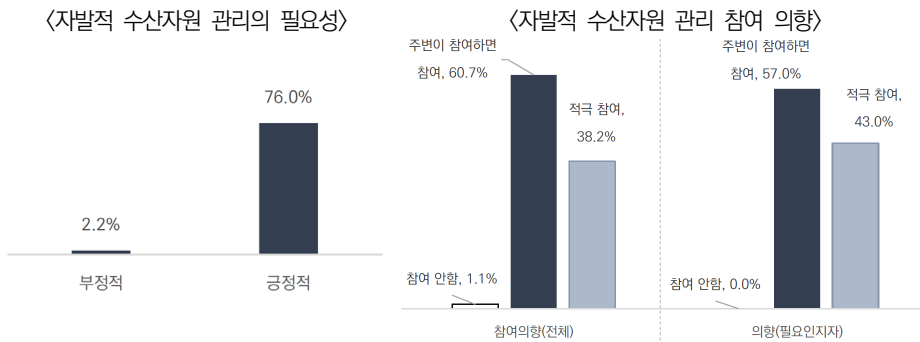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의 경우 근해어업은 수협중앙회의 역할을 매우 크게 평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응답비율이 28.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여타 주체의 경우 2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림 4-16] 근해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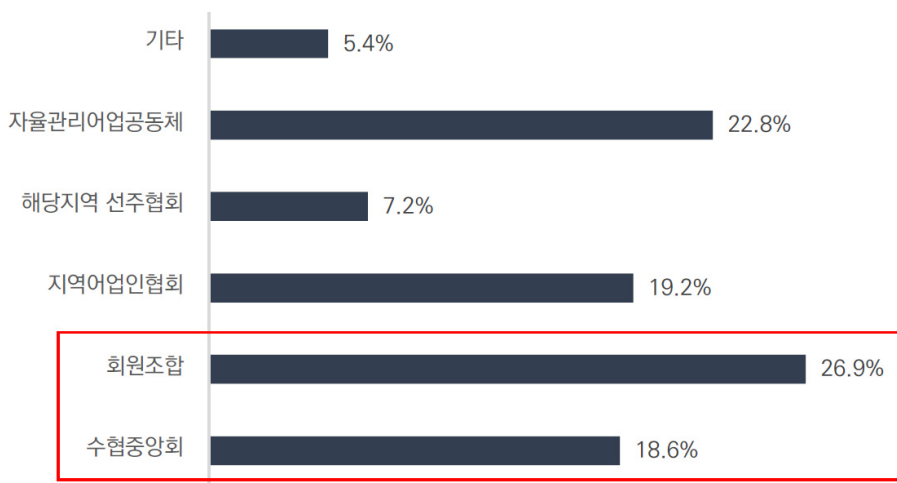
연안어업의 경우에도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의 76.0%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참여 의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보다는 주변이 참여하면 동참하겠다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에서보면 주변이 참여하면 동참하겠다는 의향이 60.7%, 필요성 인식 그룹에서도 57.0%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 각각 38.2%, 43.0%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안어업에서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동을 추진할 경우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그림 4-17] 연안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필요성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근해어업과는 달리 회원조합에 대한 응답 비중이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22.8%, 지역어업인협회 19.2% 등으로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지역어업인협회에 대한 응답 비율은 수협중앙회의 18.6%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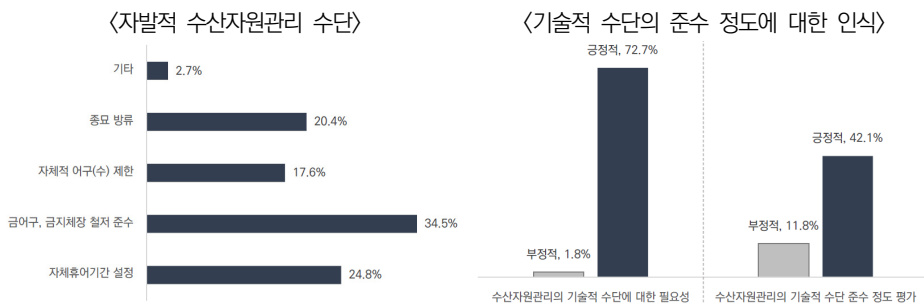


[그림 4-18] 연안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 분포

다.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인식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에 대해서는 금어구, 금지체장 등의 철저한 준수가 34.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자체 휴어기간 설정 24.8%, 종묘방류 20.4%, 자체적 어구 제한 17.6%의 순이었다.

수산자원관리의 기술적 수단에 대한 인식의 경우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72.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단에 대해 어업인들이 준수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42.1%, 부정적이 1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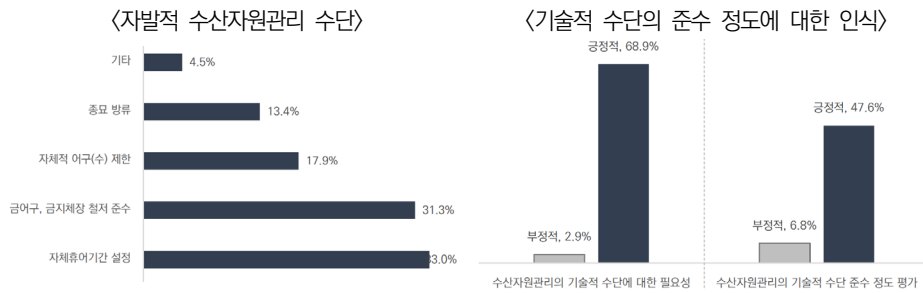


[그림 4-19]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어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근해어업은 자발적 수산자원 수단에 대해서는 자체 휴어기간 설정이 33.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근해어업의 경우 자체적인 휴어기간을 설정한 업종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금어구, 금지체장 등의 철저한 준수에 대한 응답도 31.3%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6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그리고 기술적 수단의 준수에 대해 47.6% 어업인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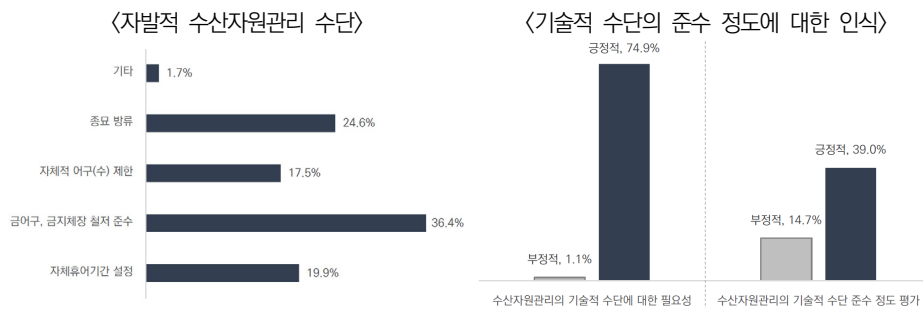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그림 4-20] 근해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연안어업의 경우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수단에 대해 금어구, 금지체장 등의 철저한 준수가 36.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종묘방류 24.6%, 자체 휴어기간 설정 19.9%, 자체적 어구 제한 17.5%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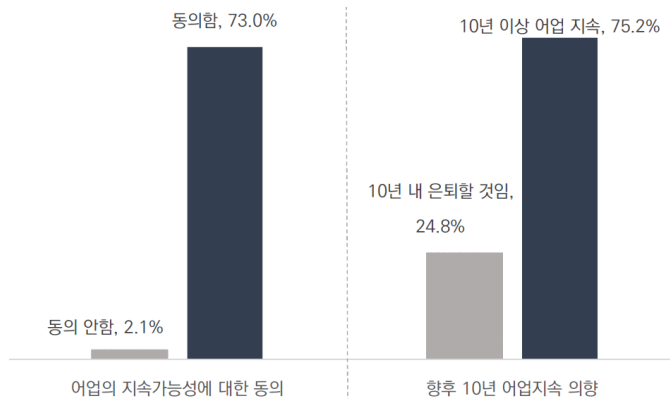
기술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74.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 39.0%, 부정적 응답 14.7%로 인식하였다.



[그림 4-21] 연안어업의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수단 및 기술적 수단의 준수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

라. 어업의 지속가능성 및 경영 지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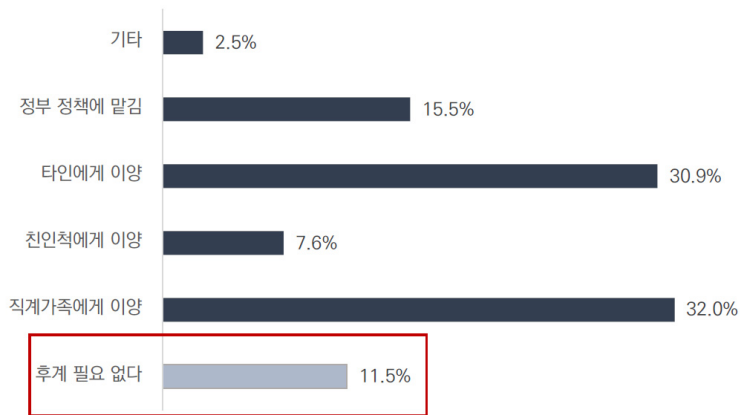
‘어업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은 전체의 73.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향후 10년 어업지속 의향은 10년 내 은퇴가 24.8%, 10년 이상 지속 어업이 75.2%였다.



[그림 4-22] 어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 경영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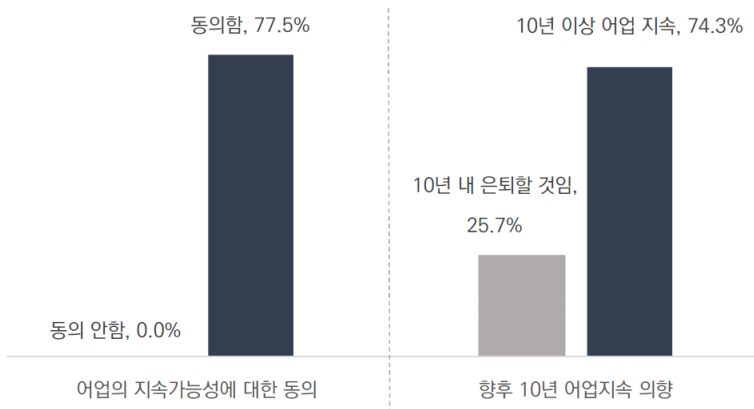
후계의 경우 직계가족에게 이양하겠다 32.2%, 타인에게 이양 3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정부 정책에 맡기겠다는 응답도 15.5%로 나타났으며, 친족에게 이양 7.6%의 순이었다. 반면 후계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그림 4-23] 후계 계획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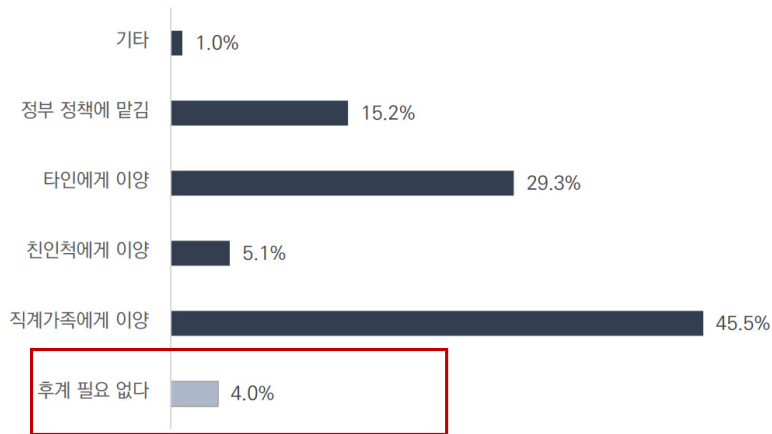
어업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제에 대해 77.5%가 동의했다. 향후 10년 어업지속 의향은 은퇴가 25.7%, 어업 지속이 74.3%였다.



[그림 4-24] 근해어업의 어업 지속가능성 및 지속 경영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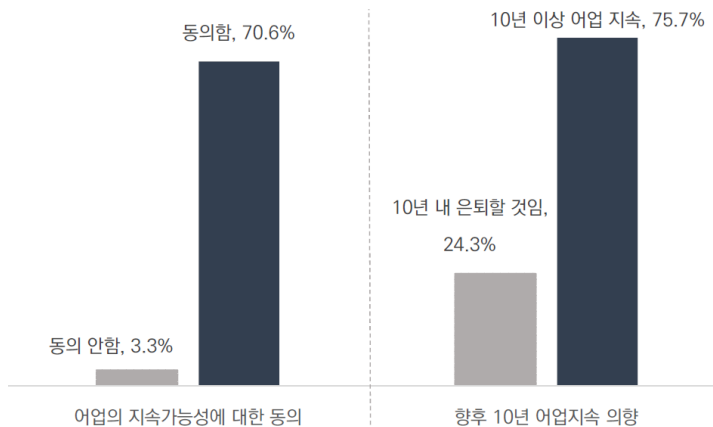
후계 계획의 경우 직계가족에게 이양하겠다는 비중이 4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타인에게 이양으로 29.3%, 정부정책에 맡김이 15.2%로 나타났다.

다. 한편 후계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4.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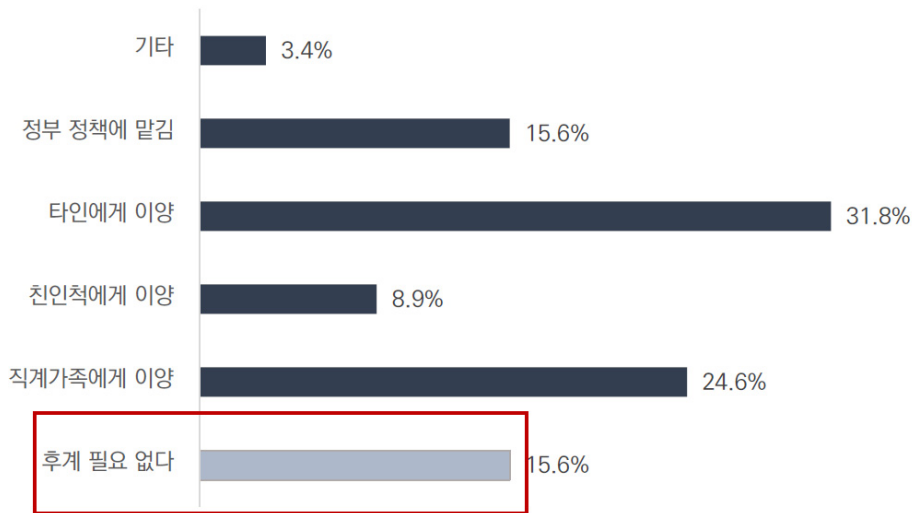
[그림 4-25] 근해어업의 후계 계획에 대한 응답 분포

연안어업의 경우도 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제에 대해 70.6%가 동의했다. 향후 10년 어업지속 의향은 은퇴가 24.3%, 어업 지속이 75.7%로 근해어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4-26] 연안어업의 어업 지속가능성 및 지속 경영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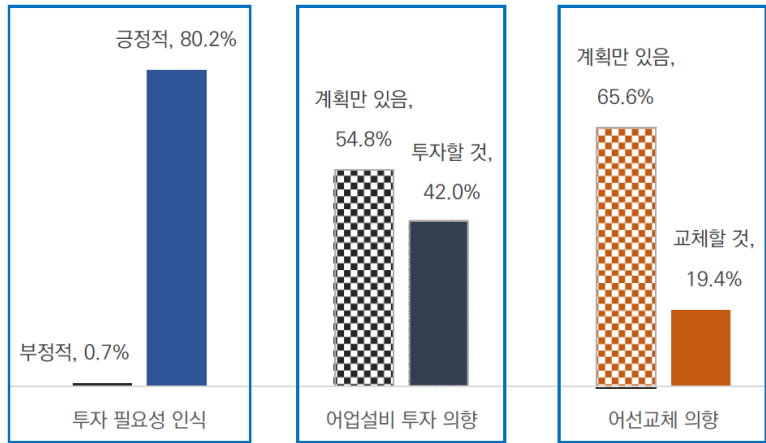
후계 계획의 경우 근해어업과는 달리 타인에게 이양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계가족에게 이양하겠다는 비중이 24.6%, 정부정책에 맡김이 15.6%로 순으로 높았다. 반면 후계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15.6%로 근해어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4-27] 연안어업의 후계 계획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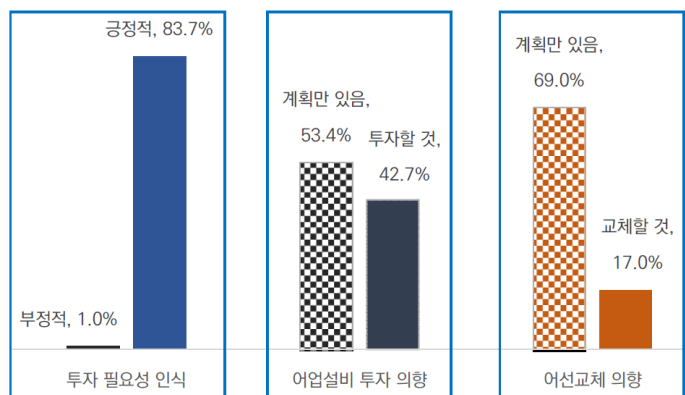
마. 어업투자의 필요성 및 투자 의향

어업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0.2%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의향에 있어서는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계획만 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업설비의 경우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2.0%, 계획만 있다는 54.8%였으며, 어선의 투자에서도 어선을 교체하겠다는 19.8%, 계획만 있다는 65.6%였다. 투자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만큼 그 실행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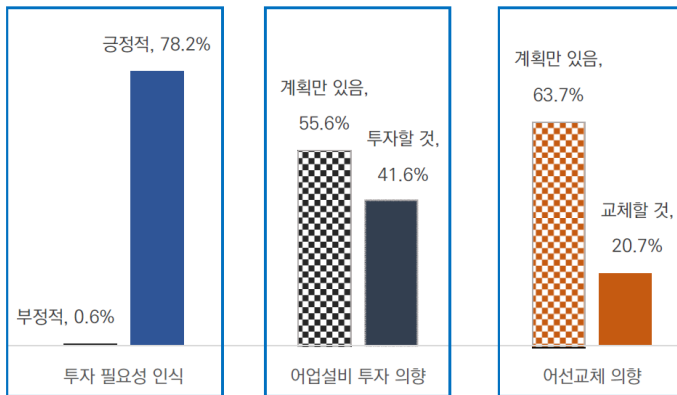
[그림 4-28] 어업투자의 필요성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근해어업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3.7%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투자 의향에서는 어업설비에 대해 42.2%가 투자하겠다고 한 반면 계획만 있다가 54.8%였다. 어선의 교체는 19.4%가 교체하겠다고 의향을 밝혔고, 65.6%는 계획만 있었다.



[그림 4-29] 근해어업의 어업투자 필요성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연안어업 역시 근해어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8.2%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투자 의향에서는 어업설비에 대해 41.6%가 투자하겠다고 한 반면 계획만 있다가 55.6%였다. 어선의 교체는 20.7%가 교체하겠다고 의향을 밝혔고, 63.7%는 계획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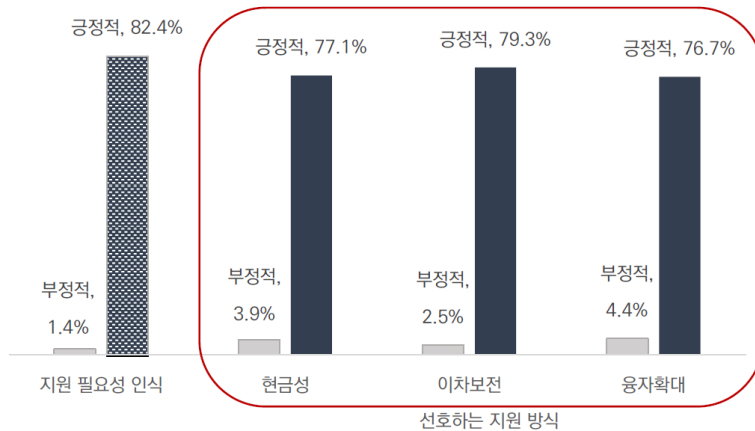
[그림 4-30] 연안어업의 어업투자 필요성 및 투자 의향에 대한 응답 분포

4. 어업경영 지원에 대한 인식

가. 지원 필요성 및 선호 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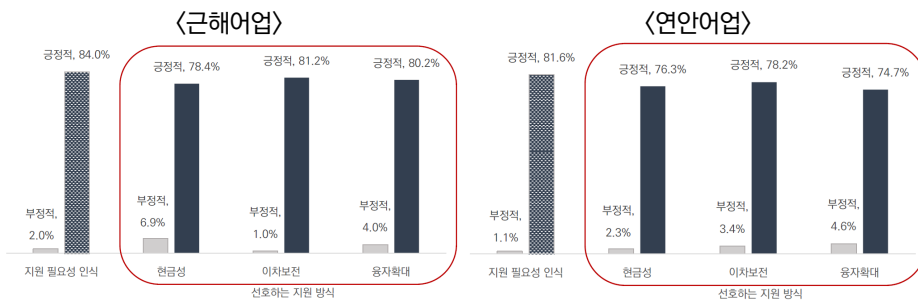
최근 어업환경의 악화로 어업수익이 정체되고, 어업 규제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어업인들은 어업 지원에 대해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4%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선호하는 지원 방식의 경우 현금성 지원, 이차보전, 용자 확대 모두 높은 긍정적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현금성 지원은 77.1%, 이차보전 79.3%, 용자 확대 76.7%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었다.



[그림 4-31] 지원 필요성 및 선호 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 분포

이러한 응답 경향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치적으로 볼 때 근해어업이 연안어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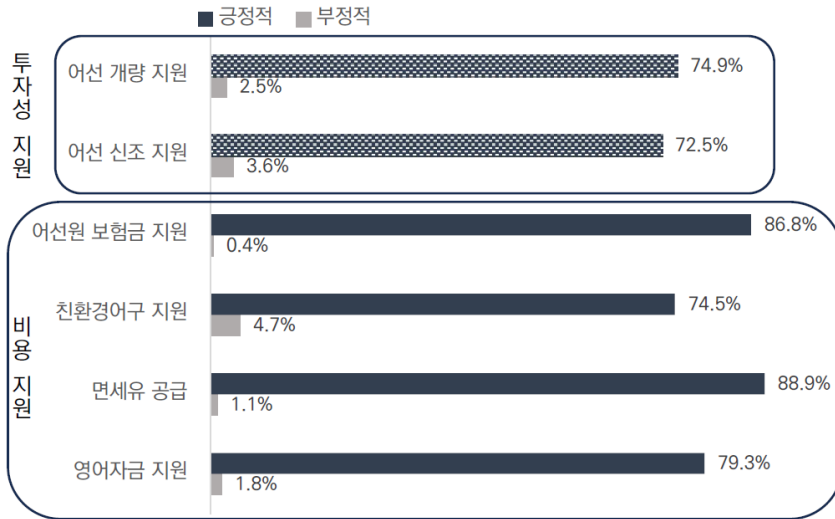
[그림 4-32] 어업별 지원 필요성 및 선호 지원 방식에 대한 응답 분포

나.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

투자성 지원은 어선 개량 지원과 어선 신조 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어선개량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은 74.9%였으며, 어선 신조 지원은 72.5%로 나타났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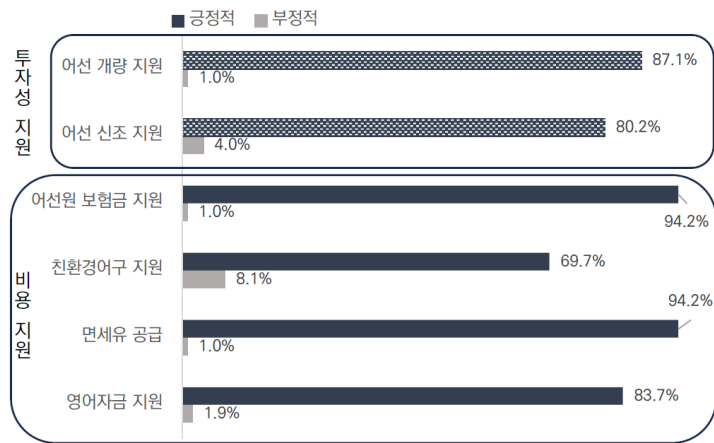
어업비용 지원은 면세유공급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고, 어선원 보험금 지원도 86.8%를 기록했다. 영어자금 지원의 경우는 79.3%였으며, 친환경어구 지원은 74.5%의 긍정 응답 비율을 얻었다.



[그림 4-33]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어업별로 보면 먼저 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개량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은 87.1%였으며, 어선 신조 지원은 80.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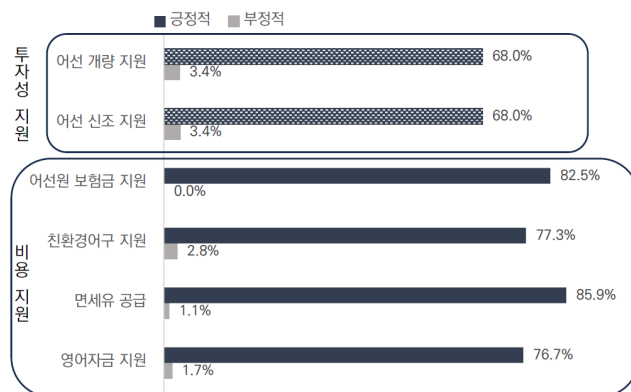
어업비용 지원은 면세유공급과 어선원 보험금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94.2%로 가장 높았다. 영어자금 지원의 경우는 83.7%를 기록한 반면 친환경어구 지원은 69.7%의 긍정 응답 비율을 얻어 상대적으로 어업 경영 지원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 근해어업의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연안어업에서는 어선개량 지원과 어선 신조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이 68.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해어업과 다소 차이 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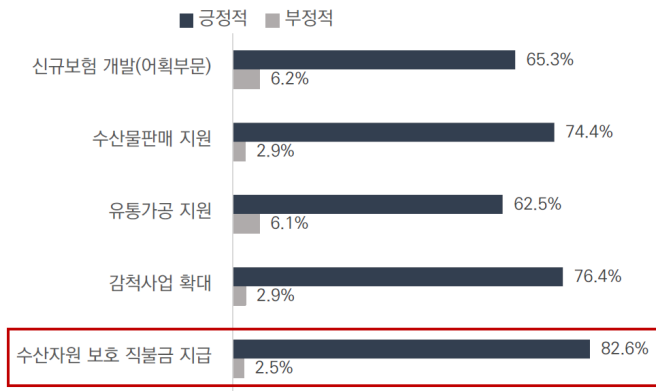
하지만 어업비용 지원은 근해어업과 마찬가지로 면세유공급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85.9%로 가장 높았고, 어선원 보험금 지원도 82.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친환경어구 지원에 대해 77.3%, 영어자금 지원이 76.7%의 긍정 응답 비율을 기록해 근해어업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그림 4-35] 연안어업의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의 정책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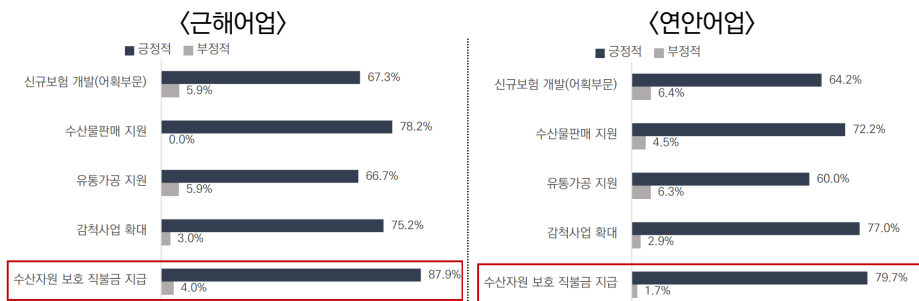
다. 제도적 지원에 대한 선호

어업 지원제도의 선호를 조사한 결과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감척사업 76.4%, 수산물 판매지원 74.4%의 순이었다. 어획부분의 신규보험 개발과 유통가공 지원은 각각 65.3%, 62.5%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36] 제도적 지원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어업을 불문하고 공히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근해어업의 제도적 지원 선호에 대한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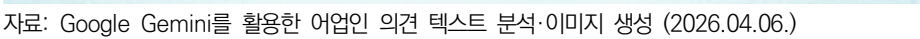
5. TAC 관련 어업인 애로 및 건의 사항

TAC 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인식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적합성, 형평성, 생존권, 국제적 공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물량 부족’과 ‘배정량’ 문제였다. 특히 현재의 TAC 산출 방식이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환경과 실제 조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어군의 이동과 어황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에 의해 할당량이 설정되면서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TAC 제도의 현실 적합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형평성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났다. 일부 어업인은 채낚기 등 특정 업종에 물량이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어획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보다 우선적인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서해 지역에서는 자원 분포 및 조업 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물량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 간·지역 간 형평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TAC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TAC 제도는 어업인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접 연결되고 있었다. TAC 준수는 결국 조업량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소득 감소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저리 대출, 직불금, 소득 보전 장치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단순 규제 강화만으로는 TAC 제도의 현장 정착이 어렵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될 때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 공정성 문제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제3절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경영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어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의 영역을 넘어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은 TAC 제도나 기술적 규제 수단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았다.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와 기술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할당량의 현실 적합성, 업종 및 지역 간 형평성, 생존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크게 나타났다. 결국 향후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단순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 반영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4-4〉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해석	시사점
TAC 필요성	긍정 응답 높음	자원관리 필요성 자체는 인정	관리 방식의 현실 적합성 확보 필요
자발적 자원관리 참여	주변 참여 시 동참 응답 높음	공동체 분위기 영향 큼	지역 기반 집단 참여 구조 필요
투자 의향	필요성 인식 높으나 실행은 낮음	미래 불확실성 확대	정책금융 및 위험 완화 장치 필요
비용 부담	수리비·연료비·금융비용 부담 높음	경영 압박 심화	비용 절감형 지원 확대 필요
후계 계획	타인 이양 및 정책 의존 존재	후계구조 불안	어업승계 지원체계 필요

어업경영 측면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와 미래 불확실성 확대가 핵심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비, 유류비, 금융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투자 실행의 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현재 어업인이 미래 경영환경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어업경영은 단순히 수익성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산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어업지원 정책은 단기 비용 지원뿐 아니라 경영 안정성과 재투자 기반 확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해어업은 상대적으로 투자 의향과 적극적 참여 의지가 높았으며, 수협중앙회와 같은 중앙조직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연안어업은 공동체 분위기와 지역 조직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주변이 참여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연안어업 정책에서 지역 기반의 집단 참여 구조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향후 어업지원 정책은 업종별 특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사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분석 결과, 현재 어업은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복합적인 제약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생계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업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은 TAC 확대 등 제도적 관리 강화에 대해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적용상의 한계를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산자원의 증감이 제도보다는 수온 변화 등 자연환경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기술적 수단 역시 일률적 적용

보다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제도 중심 관리와 현장 인식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경영 측면에서는 어선 교체와 같은 투자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용 부담과 고령화, 은퇴 계획, 그리고 현재 어선에 대한 만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어업인들은 미래를 위한 확장적 투자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의 불확실성과 낮은 수익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업경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 감소, 수산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유류비, 인건비, 장비비 등 경영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 구조 역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 속에서 어업은 경영의 문제를 넘어 생계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어업활동의 지속이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단순히 외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구 노력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불법어업을 지양하고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과 함께, 소득 증대와 경영 개선을 위한 개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자구노력은 비용 증가, 자원 감소, 환경 변화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단독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종합하면, 어업인은 현재의 어업을 불확실성과 제약이 중첩된 환경 속에서 유지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과 함께 경영에 대한 소극적 대응, 그리고 지원과 자구노력의 병행 필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업이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 5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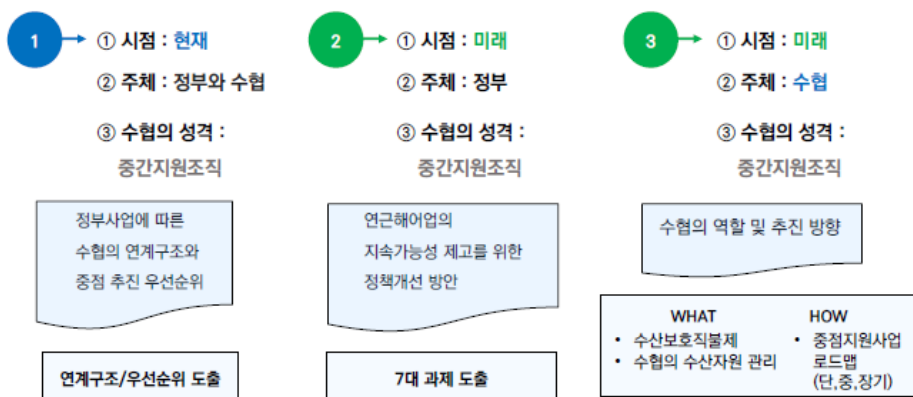
- 제 1 절 어업 지원 방향 설정
- 제 2 절 정부 사업의 수협 추진 우선순위
- 제 3 절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안
- 제 4 절 수협의 역할 제고와 추진 방안



제1 절 어업 지원 방향 설정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이용의 주체인 어업과 이용의 객체인 수산자원이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어업을 관리하며, 수산자원을 조성하기도 한다. 또한 어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이용의 주체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은 과거 또는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업 지원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업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의 시점, 그리고 지원 주체 그리고 수협조직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시점의 경우 현재와 미래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다. 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되겠지만, 수협이 중간지원 조직이자 생산자 대표조직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그에 걸맞은 역할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1] 어업지원 방향 설정

이에 어업 지원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를 기준으로 정부와 수협이 역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사업에 따른 수협의 연계 구조와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 즉,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부의 역할을 논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또는 신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수협의 역할이 강조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중간지원조직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 시 수협의 역할 강화 또는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수협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중·장기에 걸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수단 및 형태를 활용해 어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도 요구되는데, 이는 현재 사업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에 따른 수협의 연계 구조와 중점 추진 과제 발굴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2절 정부 사업의 수협 추진 우선순위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수협은 정부의 어업·수산 정책과 긴밀한 협력과 사업의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절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 사업에 대한 수협의 중점 추진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1. 수협의 정부 사업 연계 필요성

2026년 해양수산사업 구조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어업·수산 정책은 개별 사업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결하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대표적인 주체가 수협이다.

수협과 정부 사업의 연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업 현장은 지역별 특성, 어업 방식, 어선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장의 복잡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실행 단계로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며, 이 기능을 수협이 수행하게 된다. 즉,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이 바로 연계의 출발점이다.

연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 효과의 전달 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선 안전장비 지원, 장비 임대 사업, 면세유 공급, 어업인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사업들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어업인의 행동 변화와 현장 적용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조합 조직과 현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전달하고 실행을 보조하

는 역할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통로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명확한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현장 대응 속도가 개선되며, 정책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반대로 수협 입장에서는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기능이 강화되고, 조합 중심의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며, 조직의 현장 영향력이 확대된다. 결국 양측 모두 단독으로 수행할 때보다 더 높은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산자원 관리, 어선 안전, 장비 지원, 생산체계 개선과 같은 영역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만으로 완결되기 어렵다. 현장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협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적 기능이 아니라 정책 성과를 완성시키는 실행 축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수협과 정부 사업의 연계는 선택적 협력이 아니라, 수산정책 구조의 현실적 완성 조건에 가깝다. 정책은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수협은 단순한 참여 주체를 넘어, 해양수산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자 실행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협-정부 사업 간 연계 구조

수협과 정부의 수산 관련 사업은 수협의 역할 참여 수준에 따라 직접연계, 간접연계, 비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연계 사업은 수협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핵심 실행 주체로 기능하는 영역으로, 수산장비 임대 및 이동수리소 지원(8-19),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8-20), 어선원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9-4),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9-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은 수협의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 기능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현장 실행력과 직결되는 특징을 가진다.

간접연계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수협이 일부 협력 또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9-3), 수산자원조성사업(9-10), 지속가능 어업생산체계 구축(9-11), 수산 공익직불제(8-21)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들은 자원관리, 안전관리, 제도 운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협은 주로 대상 관리, 홍보, 장비 보급, 현장 지원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비연계 사업은 원양어업활성화(8-23)와 같이 국가 단위 정책 및 국제규제 대응 성격이 강한 영역으로, 수협의 직접적 역할은 제한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볼 때, 정부와 수협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사업 성격과 기능에 따라 역할이 차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역할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1〉 수협-정부 사업간 연계 구조

구 분	사업 번호	사 업 명	세부 사업	비 고
직접	8-19	수산장비(임대)활용	수산장비임대 / 이동수리소 지원	• 장비 공동활용 및 현장 수리 기능으로 수협 조합 사업과 직접 연계
	8-2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어업활동지원	• 조합 기반 복지·현장지원 기능과 직접 연계
	9-4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 클린사업장	• 현장 안전관리 기능이 수협 역할과 직접 연결
	9-12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면세유 공급시설	• 수협 경제사업 핵심 영역으로 직접 수행
간접	9-3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어선안전장비지원	• 장비 보급·유통 단계에서만 수협 참여 가능
	9-10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바다숲 / 산란장 / 종자관리 / TAC	• 자원관리 중심으로 협력 또는 참여 수준
	9-11	지속가능 어업생산체계 구축	-	• 제도 설계 중심, 현장 협력 수준 참여
	8-21	수산 공익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정부 중심 집행, 수협은 대상 관리·홍보 역할
비연계	8-23	원양어업활성화	국제규제대응 / 해외어장자원조사	• 국제·국가 중심 영역으로 수협 직접 역할 제한적

3. 수협-정부사업 연계의 시너지 효과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협 간의 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설계와 제도화,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정책의 방향성과 규범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어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현장 전달과 실행 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협은 정부 정책과 어업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중간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수협은 어업인과 가장 밀접한 조직으로서 정책의 홍보, 교육, 현장 적용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업인의 의견과 경영 실태를 정부에 전달하는 피드백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TAC 제도,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어획 보고체계 등과 같은 정책은 현장 수용성과 참여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부와 수협의 연계가 강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현장 대응 속도가 개선되며, 정책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왜곡이나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면 수협 입장에서는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기능이 강화되고, 조합 중심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며, 조직의 현장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수협의 협력 구조는 각각의 단독 수행 방식보다 높은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정책의 설계, 전달, 실행, 피드백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수협의 정부사업 중점 추진 우선 순위

가. 수협-정부사업 연계 우선순위 설정 기준

수협이 정부 해양수산사업과 연계되는 구조를 분석할 때, 단순히 사업의 규모나 예산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협은 정책 집행기관이 아니라 현장 기반의 협동조합 조직이며, 동시에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가 아니라 “수협이 얼마나 깊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때 적용되는 핵심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현장성 (Field Relevance)

현장성은 해당 사업이 실제 어업 현장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의미한다. 수협은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실행 조직이기 때문에, 어업인의 일상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예를 들어 장비 임대, 면세유 공급, 안전관리, 어업인 지원 사업 등은 모두 현장에서 즉시 체감되는 영역이다. 반대로 국제 규제 대응이나 자원조사 처럼 정책 또는 연구 중심 사업은 현장 직접성이 낮다. 즉, 현장성 기준은 “수협이 실제로 손을 댈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 실행가능성 (Operational Feasibility)

실행가능성은 해당 사업을 수협 조직 구조와 역량으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조합 네트워크, 경제사업 구조, 지도사업 체계 등을 통해 실제 집행 또는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면세유 공급이나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은 수협의 기존 조직 구조와 매우 잘 맞는다. 반면 감척사업이나 TAC 운영처럼 정책 결정 중심 구조는 수협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즉, 실행가능성은 “수협이 주체 또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기준이다.

(3) 조직 적합성 (Institutional Fit)

조직 적합성은 해당 사업이 수협의 본질적 기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한다. 수협은 단순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어업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현장 지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유통·면세유), 지도사업(교육·안전), 현장지원 기능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조직 적합성이 높다. 반대로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 국제협약, 연구 중심 사업은 수협의 고유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즉, 이 기준은 “이 사업이 수협의 정체성과 맞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나. 우선순위 설정 결과

수협-정부사업 연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그 기준을 현장성, 실행가능성, 조직 적합성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은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로, 수협 고유 경제사업으로 조직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반면, 낮은 순위의 사업은 “원양어업 국제규제대응”으로 국가 중심 사업으로 수협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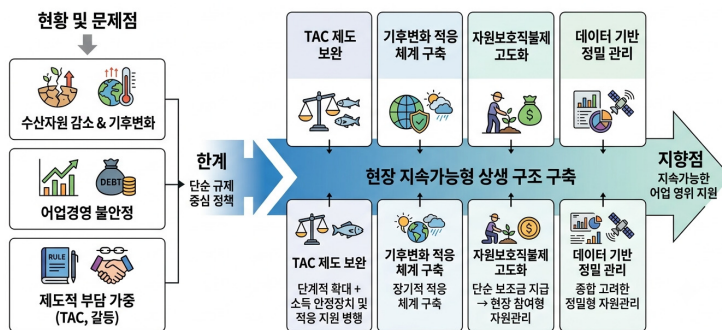
〈표 5-2〉 수협-정부사업 연계 우선순위

순위	사업번호	사업명	우선순위 책정 이유
1	9-12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수협 고유 경제사업으로 조직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최상
2	8-19	수산장비(임대)활용	현장 직접 서비스로 현장성·실행가능성 매우 높음
3	9-4	어선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지도·안전 기능으로 현장 밀착형 핵심 사업
4	8-2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조합 기반 서비스로 현장성과 조직 기능 직접 연결
5	9-3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장비 보급 중심의 현장 실행 사업
6	9-10	수산자원조성사업	현장 참여 가능하나 정부 주도 구조
7	9-11	지속가능 어업생산체계	제도 참여형으로 중간 수준 실행가능성
8	8-21	수산 공익직불제	대상 관리·홍보 중심의 간접 실행 구조
9	8-18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지도사업 기반으로 조합 기능 활용 가능
10	9-7	연근해어선 감척	구조조정 사업으로 주도권 제한적이나 현장 접점 존재
11	8-15	수산어업행정지원	행정 지원 성격으로 간접 참여 수준
12	8-23	해외어장 자원조사	연구·조사 중심으로 직접성 낮음
13	9-10	TAC 운영	제도 운영 중심으로 간접 참여 구조
14	9-7	정치망어업 감척	정책 주도 구조조정으로 실행 주체 아님
15	9-7	근해어업 감척	정부 주도 구조조정 사업
16	9-7	연안·구획어업 감척	정책 집행 중심으로 수협 역할 제한
17	9-10	바다숲 조성	공공 생태사업으로 직접 실행 어려움
18	9-10	산란·서식장 조성	정부 주도 자원조성 사업
19	9-10	수산종자 자원관리	공공 관리체계 중심으로 간접 참여
20	9-4	중대재해 대응 지원	제도·법제 중심으로 보조 역할
21	9-4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실행 주도권 낮음
22	8-23	원양어업 국제규제대응	국가 중심 사업으로 수협 역할 제한적

제 3 절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안

1. 연근해어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최근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어업경영 불안정, 해양환경 변화 등 다양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TAC 제도 확대, 해양 공간 이용 갈등 증가, 이상 수온 및 어종 이동 등은 기존 어업방식과 경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현장 체감 부담 역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어업소득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가경제는 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5-2] 연근해어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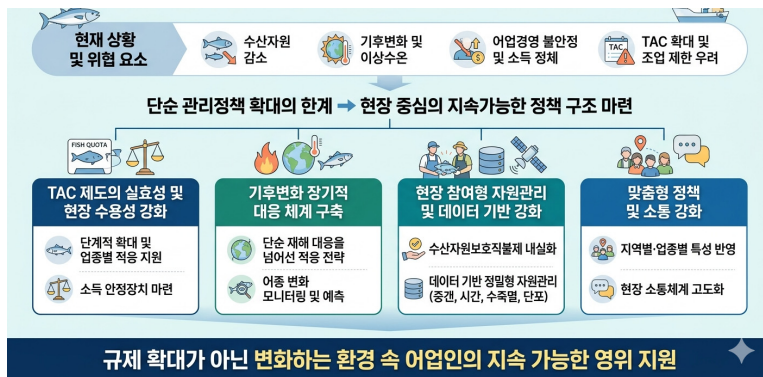
현재 정부는 TAC 운영,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감척사업, 안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관리정책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관리 강화를 넘어, 현장 수용성과 경영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력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TAC 제도의 경우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지만, 현장에서는 소득 감소와 조업 제한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 확대와 함께 업종별 적응 지원, 소득 안정장치 마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수산업 전반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재해 대응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적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역시 단순 지급제도를 넘어 현장 참여형 자원관리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공간·시기·수층·어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형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확대와 현장 소통체계 강화 역시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연근해어업 정책은 단순 규제 확대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5-3]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향

2. 정책 개선 7대 과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부의 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개선 실천 과제를 7개로 요약했다. 다음의 <표 5-3>은 정책 개선 7대 과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5-3> 정책 개선 7대 과제

구 분	현 황	문제점	개선 방안
1. TAC 제도 보완	TAC 적용 업종 및 관리 범위 지속 확대 추진	현장 수용성 부족, 소득 감소 우려, 업종별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업종별 적응 지원 강화, 단계적 확대 추진, 소득 안정장치 마련, 현장 협의체 운영
2.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이상수온, 어종 이동, 재해 증가 등 기후 영향 확대	사후 대응 중심 정책 구조, 현장 체감형 대응 부족	기후 적응형 어업 지원,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후위험 정보 제공 강화
3. 경영안정 장치 강화	일부 정책자금·재해지원 제도 운영 중	어업경영 변동성 확대 대비 부족, 소득 불안정 심화	소득안정 장치 확대, 가격안정 지원 강화, 재해·경영위험 대응 체계 보완
4.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개선	직불제 확대 추진 및 참여 대상 확대 중	업종별 특성 반영 미흡, 현장 체감 부족, 참여 기준 복잡성 존재	업종 맞춤형 기준 마련, 참여형 구조 강화, 현장 실천 중심 제도 개선
5.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강화	TAC·금어기·금어구 중심 관리체계 운영	공간·시기·수층별 정보 부족, 정밀 관리 한계 존재	해역 이용정보 구축, 현장 데이터 축적, 데이터 기반 정밀 자원관리 체계 전환
6. 지역 맞춤형 정책 확대	전국 단위 기준 중심 정책 운영	해역·업종별 특성 반영 한계	지역·업종별 맞춤형 관리모델 확대, 지역 단위 실증사업 추진
7. 현장 소통 구조 개선	정책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일부 운영	정책 전달 중심 구조, 현장 공감대 및 참여 부족	상시 소통체계 구축, 업종별 협의의 강화, 현장 의견 반영 시스템 확대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TAC 제도 보완이다. 현재 TAC

적용 업종 및 관리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수용성 부족,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 업종별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성 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적응 지원 강화, 단계적 확대 추진, 소득 안정장치 마련, 현장 협의체 운영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이다. 현재 이상수온, 어종 이동, 재해 증가 등 기후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체감형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 적응형 어업 지원 강화,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후위험 정보 제공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필요하다.

셋째, 경영안정 장치 강화이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 및 재해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어업경영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안정 장치 확대, 가격안정 지원 강화, 재해 및 경영위험 대응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

넷째,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개선이다. 현재 직불제는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참여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장 체감도가 낮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업종 맞춤형 기준 마련, 참여형 구조 강화, 현장 실천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강화이다. 현재 TAC, 금어기, 금어구 중심의 자원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시기·수층별 정보가 부족하여 정밀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역 이용정보 구축, 현장 데이터 축적 확대, 데이터 기반 정밀 자원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 맞춤형 정책 확대이다. 현재 수산정책은 전국 단위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역 및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업종별 맞춤형 관리모델 확대와 지역 단위 실증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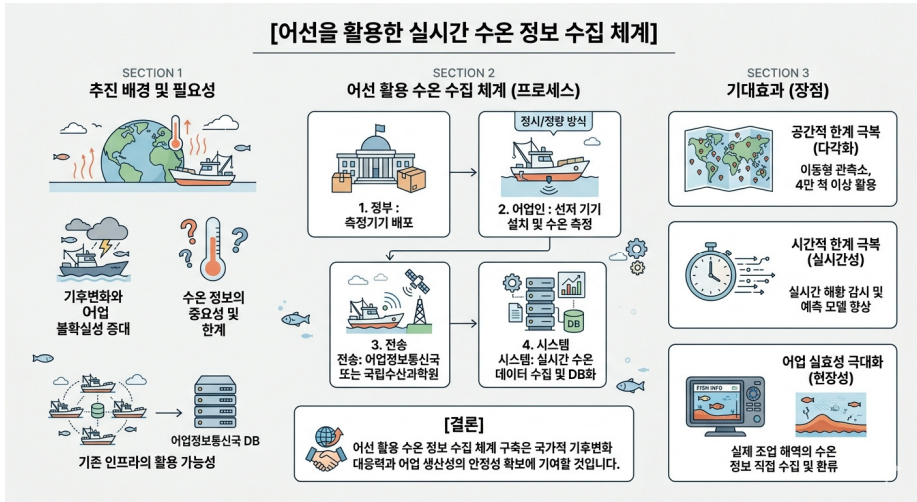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장 소통 구조 개선이다. 현재 정책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전달 중심 구조로 인해 현장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시 소통체계 구축, 업종별 협의 강화, 현장 의견 반영 시스템 확대 등이 필요하다.

3. 어선을 이용한 수온 정보 수집 사업 제안

해양환경의 변화는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했듯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와 전망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그 중 수온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수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수온이기도 하다.

이에 더 많은 수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을 이용하여 수온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만 척 이상의 어선이 존재하며, 이들 어선으로 하여금 수집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축적하는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어업정보통신국으로 위치정보, 어획보고가 진행되며 그 자료는 DB화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어선에 수온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온 측정기기를 어선에 배포하고, 어업인들은 어선에 수온 측정기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온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업정보통신국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보내고, 보내진 정보를 DB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온 측정기를 선저(船底)에 부착한다면 실시간 수온 정보의 수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4] 어선을 활용한 실시간 수온 정보 수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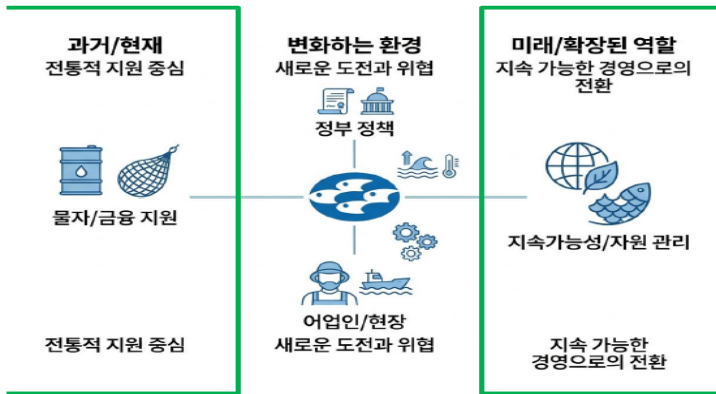
어선을 활용한 수온 정보의 수집은 기존 측측 지점에 한정된 수온 정보 수집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어선 자체가 측측 지점이 되므로 매우 많은 지점이 추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실시간 수온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이는 수온 측정 장비 등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효성 있는 정보라는 점이다. 어선이 이동하는 곳의 수온 정보가 수집이 된 것인데, 여기에는 조업 장소에서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즉 어업과 가장 밀접하게 획득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어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공통의 극복 과제이다. 이에 어선을 활용한 수온 정보 수집은 분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제 4 절 수협의 역할 제고와 추진 방안

1. 수협의 역할 변화

수협의 본질적인 역할은 어업인 지원에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존재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성 확대, TAC 제도 확대, 해양환경 변화, 연안개발 등으로 어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어업소득은 정체되는 반면 이전소득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어업인은 높은 경영위험 속에서 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5-5] 수협의 역할 변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수협의 역할도 단순한 물자·금융 지원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면세유 공급, 유통·판매 지원, 장비 지원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존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

요해지고 있다. 즉 “어업을 돕는 조직”을 넘어 “어업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수산자원관리 영역에서 수협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TAC 제도 등은 자원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현장 수용성과 어업인 참여 없이는 안정적 정착이 어렵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정부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제도를 현장에 맞게 연결하고 어업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회원조합과 어촌계를 기반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관리 활동을 지원하며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결국 수협은 단순 지원기관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생존을 함께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수산보호직불제 관련 수협의 역할

수협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수산자원보호직불제 확대와 연계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직불금 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국회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책적 이슈를 형성(Issue making)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협 부설 연구기관(In-house research institute)인 수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실무차원에서 접근하여 수협의 작동 가능한 역할을 중심으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실무 추진 분야를 15개로 세분하고 각 역할과 선정 이유를 정리했다.

〈표 5-4〉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관련 수협 역할(안)

분 야	세부 역할	이유
제도 안내	직불제 설명회·현장 홍보	제도 이해 부족 해소 필요
신청 지원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지원	고령 어업인 행정 부담 완화
참여 확대	미참여 어업인 발굴 및 참여 유도	제도 확산 필요
이행 지원	자원보호 실천사항 안내	현장 실행력 강화
현장 모니터링	실천 여부 현장 확인 지원	제도 신뢰성 확보
데이터 축적	자원보호 활동 사례 기록	정책 개선 기초자료 확보
우수사례 발굴	우수 참여조직 사례 공유	자발적 참여 유도
교육 운영	자원보호 및 직불제 교육	제도 수용성 향상
갈등 조정	직불제 기준 관련 현장 의견 수렴	현장 갈등 최소화
정책 건의	업종별 개선사항 정부 건의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필요
지역 협력체계	어촌계·조합 공동 참여 유도	지역 단위 실천력 확보
홍보 콘텐츠 제작	카드뉴스·사례집 제작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청년어업인 연계	청년층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성 강화
자율관리 연계	자율관리어업과 직불제 연계	제도 시너지 가능
정보 플랫폼 구축	직불제 정보 통합 제공	접근성 향상

3. 수산자원 관리 관련 실천 과제 선정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수협이 실천할 수 있는,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정리하였다. 총 5개의 과제이며, 각 과제별 2~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해 총 13개 과제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7〉에 정리했다.

〈표 5-5〉 수협인 수산자원관리 관련 과제별 세부 실천 과제(안)

과 제	실천 과제	비 고
어업인 참여형 자원관찰 체계 구축	이상수온·적조·해파리 발생 신고 체계 구축	현장 이상징후 조기 대응 필요
	업종별 자원변화 사례 수집	현장 체감형 자료 확보 가능
	현장 관찰 우수사례 공유	현장 관찰 우수사례 공유 참여 확산 및 현장 공감대 형성
수산자원관 리 갈등 조정 플랫폼	업종 간 갈등 현황 조사	현장 갈등 구조 파악 필요
	TAC 관련 의견수렴 체계 구축	정책 수용성 제고 가능
	정책 건의 체계 마련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강화
조업·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수온·기상·어황 정보 제공	조업 위험 감소 및 효율 향상
	모바일 조업정보 알림 서비스	현장 정보 접근성 강화
	회원조합 단위 정보 전달체계 구축	정보 전달의 현장성 강화
어업인 대상 자원관리 교육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환경 변화 적응력 강화
	신규 어업인 기초교육 강화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
기후변화 현장 데이터 축적	조업 변화 분석	어업환경 변화 대응 필요
	기후위험 현장보고 체계 구축	신속한 대응 기반 마련

수산자원과 관련한 수협의 실천 과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수협의 실무부서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실천과제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실행가능성’ 이었다.

초안은 총 8개 과제를 제시했으나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업종별 자율관리 모델 발굴, 지역단위 자원관리 실험사업, 수산자원관리 인식개선 등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업종별 자율관리 모델 발굴, 지역단위 자원관리 실험사업의 경우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자율관리 모델 발굴의 경우 자율관리 우수사례 조사, 업종별자율협약 모델 개발, 지역별 자율 휴어 사례 발굴, 어린물고기 보호 실천모델 구축, 자율관리 참여조직 네트워크 운영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단위 자원관리 실험사업의 실천 과제는 자율휴어 시범사업, 어린물고기 보호구역 운영, 친환경 어구 사용 실험사업, 공동 자원관리 모델 구축, 어촌계 단위 실천사업 운영 등이다.

4.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중점 지원 사업 로드맵

가. 중점 지원 로드맵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관점을 조금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역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협의 역할을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을 구분하여 각 기간별 중점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림 5-6] 수협의 중점 지원 사업 로드맵

단기는 생존 안정화, 중기는 구조 안정화, 그리고 장기는 체질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단기에 있어 경영위험 완충 및 현장 부담 경감은 분명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비 절감 지원, 면세유 및 장비 지원, 조업 정보 제공, 긴급 경영안정 지원,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행정·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

중기의 주된 지향점은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경영구조 구축이다. 중점 지

원 사업으로 TAC 적응 지원,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확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연계, 유통·판매 구조 개선, 지역 협력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수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해역 이용정보 구축,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체계 구축, 정밀형 수산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형 어업구조 전환, 복합소득 기반 확대, 스마트·청년어업 지원 등이다.

〈표 5-6〉 수협의 시기별 목표 및 중점 지원 사업

구분	핵심 목표	주요 방향	중점 지원사업
단기	생존 안정화	경영위험 완충 및 현장 부담 경감	경영비 절감 지원, 면세유 및 장비 지원, 조업정보 제공, 긴급 경영안정 지원,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행정·정보 지원
중기	구조 안정화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경영구조 구축	TAC 적응 지원,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확대,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연계, 유통·판매 구조 개선, 지역 협력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원
장기	체질 전환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	해역 이용정보 구축, 정밀형 수산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형 어업구조 전환, 복합소득 기반 확대, 스마트·청년어업 지원

나. 시기별 중점 지원 사업 : 단기

수협의 단기 중점 지원 사업의 핵심 방향은 당장 버틸 수 있도록 생존 안정성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생존 안정화, 경영위험 완충, 비용 절감, 조업 안정, 안전 지원, 현장 체감형 지원, 긴급 대응, 정보 지원, 경영 부담 완화, 어업인 보호 등이다.

〈표 5-9〉에서는 수협의 장기 중점 지원 사업을 세부 추진사업과 추진 목

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표 5-7〉 수협의 단기 중점 지원 사업

분야	세부 지원사업	추진 목적
경영비 절감 지원	어구·로프·소모품 공동구매	조업비용 절감 및 경영부담 완화
	면세유 공급 안정화 및 긴급 지원	유류비 변동 대응 및 조업 안정
	수산장비 임대 확대	초기 투자 부담 완화
조업 안정 지원	기상·해황 정보 제공 강화	조업 위험 감소
	어장·어황 정보 공유	헛조업 감소 및 조업 효율 향상
	긴급 조업지원 체계 구축	재해·기상 악화 대응
안전·노동 부담 완화	안전장비 보급 확대	인명사고 예방
	어선 작업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및 작업환경 개선
	외국인 선원 지원체계 구축	인력 운영 안정화
경영안정 지원	긴급 운영자금 지원	유동성 위기 대응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가격 변동 위험 완화
	보험·공제 기능 강화	경영 불확실성 대응
행정·정보 지원	TAC 대응 컨설팅	제도 적응 지원
	정부사업 연계 지원	정책 접근성 강화
	모바일 기반 정보 제공	현장 정보 접근성 강화

다. 시기별 중점 지원 사업 : 중기

수협의 중기 중점 지원 사업의 핵심 방향은 지원 중심”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 구축”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적응, 협업, 자율관리, 구조 안정화, 기후 대응, 지속가능성 등이다.

〈표 5-10〉에서는 수협의 중기 중점 지원 사업을 세부 추진사업과 추진 목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표 5-8〉 수협의 중기 중점 지원 사업

분야	세부 지원사업	추진 목적
TAC 적응체계 구축	업종별 조업전략 지원	TAC 제도의 현장 적응력 강화
	공동 관리체계 구축	현장 수용성 및 협업 기반 강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자율관리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지역별 자율관리 모델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마련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연계	직불제 참여 확대 지원	자원보호 참여 유도 및 제도 정착
	현장 실천활동 연계	자원관리 실효성 강화
유통·판매 구조 개선	공동브랜드 및 산지유통 강화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
	디지털 판매 확대	유통 다변화 및 판로 확대
지역 협력체계 구축	공동 장비·작업·출하 지원	비용 절감 및 협업체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 지원	어종 변화 대응 지원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조업 변화 분석 및 정보 제공	환경 변화 대응 기반 마련

라. 시기별 중점 지원 사업 : 장기

수협의 장기 중점 지원 사업의 핵심 방향은 “생산 중심 어업”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 어업”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정밀형 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 복합소득 구조, 스마트어업, 지속가능성 등이다.

〈표 5-11〉에서는 수협의 장기 중점 지원 사업을 세부 추진사업과 추진 목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표 5-9〉 수협의 장기 중점 지원 사업

분야	세부 지원사업	추진 목적
정밀형 수산자원관리	시기·공간별 관리체계 구축	획일적 규제 한계 보완
	업종·어종별 맞춤형 관리 확대	현장 적합형 관리체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형 구조 전환	기후 적응형 어업 지원	기후위험 대응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어업 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구축
복합 소득 기반 확대	관광·체험·가공 연계 지원	어업소득 의존도 완화
	지역 연계형 어촌 비즈니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다변화
스마트·청년어업 지원	디지털·스마트어업 기반 구축	미래형 어업 기반 마련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산업 지속성 확보
해양공간 관리 대응	해상풍력·연안개발 대응체계 구축	어업권 보호 및 해역 이용 대응 강화
	해역 이용 갈등 대응 지원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관리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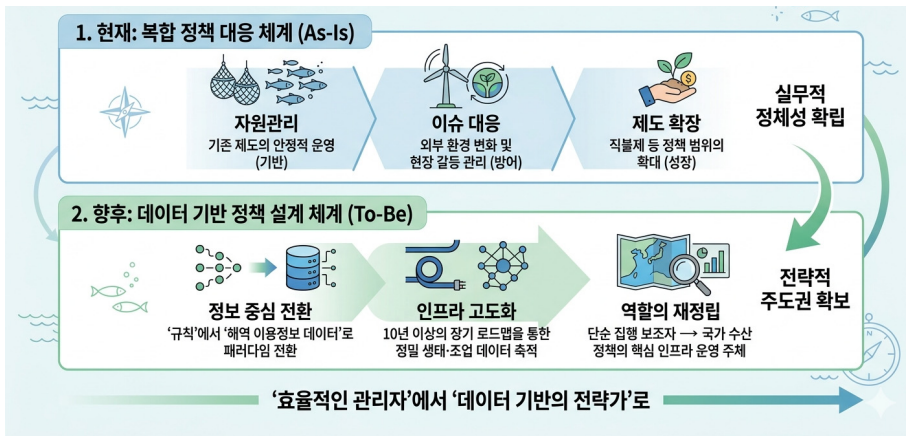
5. 수협 실무부서의 단계적 발전

수협의 수산자원관리 등에 관한 실무부서는 어업양식지원부이다. 이 부서는 수산 현장의 정책 변화와 환경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 단위의 수행 중심으로 기능이 인식되었으나, 최근의 정책 환경과 현장 요구를 종합하면 단순한 사업 집행 부서를 넘어 보다 구조화된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업양식지원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원관리 역할이다. 이 영역은 부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존재 기반에 해당한다. 수산자원관리,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보호지 불제 등은 모두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 영역이다. 이 역할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부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본 구조로 기능한다.

둘째, 이슈 대응 역할이다. 이 영역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기능으로, 해상풍력 개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사회·환경적 이슈에 대한 대응 활동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행이 아니라, 수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현장의 우려를 정책 과정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대외적 존재감과 정책 대응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셋째, 제도 확장 역할이다. 이 영역은 기존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정책 구조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확대 논의와 같이 기존 정책을 확장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 축은 단순한 참여 수준을 넘어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으로, 부서의 정책적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5-7] 수협 실무부서의 발전 방향

어업양식지원부의 기본 역할은 서로 독립된 기능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작동한다. 자원관리 축이 조직의 기반을 제공하고, 이슈 대응 축이 외부 환경과의 접점을 형성하며, 제도 확장 축이 조직의 성장 방향을 만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방향은 단순한 사업 수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관리 기반 위에서 정책 대응과 제도 확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정책

기능 조직으로의 변환이다.

이를 위해 기존 3대 역할을 자원관리, 해역정보, 제도 확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수산자원보호직불제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고도화에 힘쓴다. 이는 부서의 가장 기본 기능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둘째, 해역정보는 부서의 대외 존재감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해역 이용 정보 통합 구축 사업, 위치별 어업활동 데이터 구축, 수층(표층·중층·저층) 이용 정보화, 계절별·시기별 어업 패턴 데이터화, 어종별 공간 이용 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는 기존 이슈 대응 대신 해역 이용 정보를 선점·구축하는 인프라 역할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반응형 조직에서 정보 기반 조직으로, 갈등 대응에서 데이터 주도 구조로, 그리고 정책 협의에서 정보 제공 주체로의 전환이다. 이 경우 정부와의 관계는 정책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확장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제도 확대 및 고도화, 자율관리어업 제도 개선 및 확장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 제언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 시사점 정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인류의 식량 확보와 어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과도한 어획노력과 기후변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마련과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함께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원 방안 추진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어업환경 및 어업·수산정책 분석, 연근해어업 경영실적 분석, 어업인의 어업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근해어업의 경영 실적 및 어업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 ① 어업경영 불확실성의 구조적 확대 : 최근의 어업경영 환경은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 ② 비용 증가 압력의 지속 : 어업경영에서 인건비와 연료비는 가장 중요한 비용항목으로 작용한다.
- ③ 어업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가중 : 최근의 수산자원 변동은 특정 어종 중심의 어업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연안어업 영세성 및 취약성의 구조화 : 연안어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안어업은 소규모·영세적 경영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어업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요구 : 최근 어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기존 어업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 2026년 해양수산사업의 정책적 의미

- ① 어업 정책은 “현장을 유지하는 정책”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 ② 어업 정책은 동시에 “산업을 유지하는 경제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 ③ 어업 정책은 “스스로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다.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책에 대한 인식

- ① 어업인은 현재의 어업을 불확실성과 경영위험이 증첩된 환경 속에서 유지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TAC 확대 등 자원관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 적용의 한계와 제도 중심 관리에 대한 거리감이 동시에 존재한다.
- ③ 어업경영은 투자 확대보다 현상 유지 중심의 소극적 대응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용 부담과 낮은 수익성, 고령화 등에 기인한다.
- ④ 어업인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동시에 자원 보호와 경영 개선 등 자구노력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
- ⑤ 결국 현재의 어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그 이용의 주체뿐만 아니라 이용의 대상도 지속가능한 상태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어업과 수산자원 모두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에 어업 지원 방향을 시점과 주체, 그리고 수협의 성격을 고려하여 3개로 설정했다. 첫째, 현시점에서 정부와 수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둘째, 미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수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시점에서 정부와 수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정책 사업과 수협이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총 22개 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다음으로는 미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근해어업 정책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7개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 ① TAC 제도 보완
- ②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 ③ 경영안정 장치 강화
- ④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개선
- ⑤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강화
- ⑥ 지역 맞춤형 정책 확대
- ⑦ 현장 소통 구조 개선

마지막으로 미래 수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수협은 생산자단체이자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협의 역할 제고를 중점적으로 고민했다. 이에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관련하여 실무 추진 분야를 15개로 세분하여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해서도 5개 분야 13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수산자원관리와 관련 수협의 역할 강화 5개 분야 13개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어업인 참여형 지원관찰 체계 구축(3개) : 이상수온·적조·해파리 발생 신고 체계 구축, 업종별 자원변화 사례 수집, 현장 관찰 우수사례 공유
- ② 수산자원관리 갈등 조정 플랫폼(3개) : 업종 간 갈등 현황 조사, TAC 관련 의견수렴 체계 구축, 정책 건의 체계 마련
- ③ 조업·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3개) : 수온·기상·어황 정보 제공, 모바일 조업정보 알림 서비스, 회원조합 단위 정보 전달체계 구축
- ④ 어업인 대상 자원관리 교육(2개) :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신규 어업인 기초교육 강화
- ⑤ 기후변화 현장 데이터 축적(2개) : 조업 변화 분석, 기후위험 현장보고 체계 구축

또한 이들 실천 과제를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중점 지원 사업으로 단·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했다. 단기의 경우 생존 안정화를 목표로 경영 위험 완충 및 현장 부담 경감을 주된 방향으로 한다. 중기에는 구조 안정화가 목표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경영구조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에는 체질 전환이 목표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을 주된 방향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제 2절

정책 제언

이 절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또는 사업을 세 가지 제안한다.

1.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연근해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향후 연근해어업 정책은 규제 중심의 일률적 자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현장 수용성과 경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현재 TAC 확대, 기술적 규제 강화 등은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소득 감소 우려와 업종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TAC 제도 보완,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경영안정 장치 강화,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개선,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 해역별 맞춤형 정책, 현장 소통 구조 개선 등 7대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수협 중심의 민관 협력형(Co-management) 거버넌스 구축

정부 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집행 구조를 넘어, 현장 조직과 연계된 민관 협력형(Co-management)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 회원조합과 어촌계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수협은 어업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협을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협 지도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자원관리·경영안정·복지지원 등 현장성과 조직 적합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수협 간 연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와 함께 현장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자료]

국립수산물연구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2012), ITQ 어업자원관리제도 도입 연구용역.

류정곤·John M. Gates·남종오(2005), 다수어종·다수어업의 TAC 결정모델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류정곤·John M. Gates·남종오·김대영(2006), 다수어종·다수어업의 TAC 평가에 관한 연구 II : 단일어종·다수어업/다수어종·다수어업 TAC 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류정곤·심성현·고동훈·오서연·한다정(2019),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창수(2024), 어항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_____ (2025),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대응 및 어업인 지원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김우경(2020), TAC 제도 하 어업인 소득보전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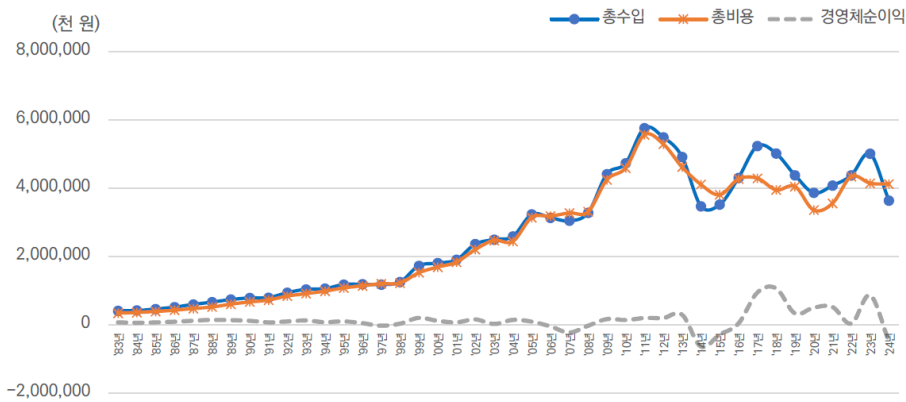
이창수·박지훈(2019),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_____ (2023), TAC 제도 기반 어업규제 혁신 추진 방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부록 1. 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영 현황 분석

가.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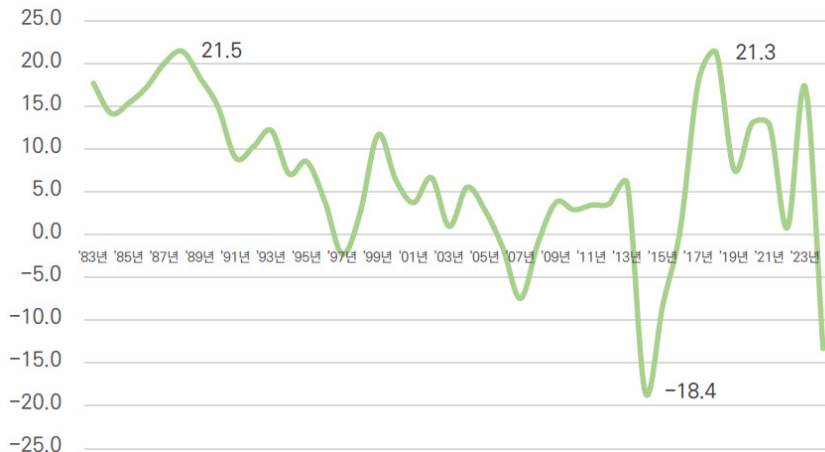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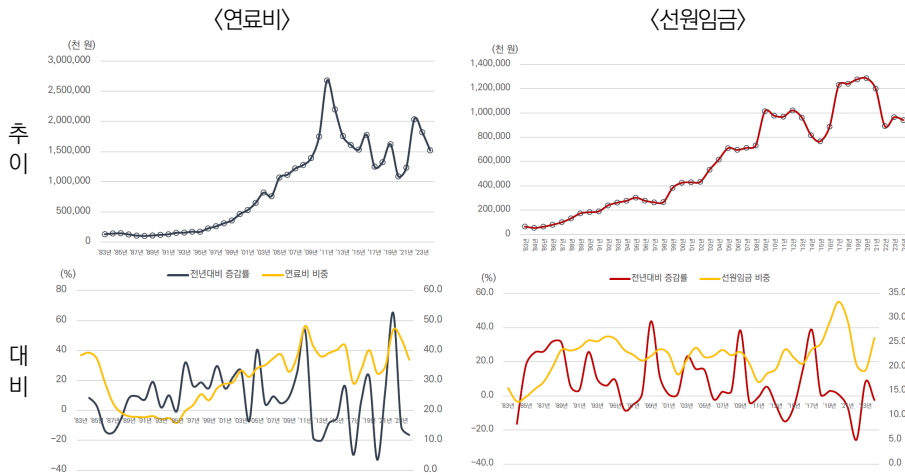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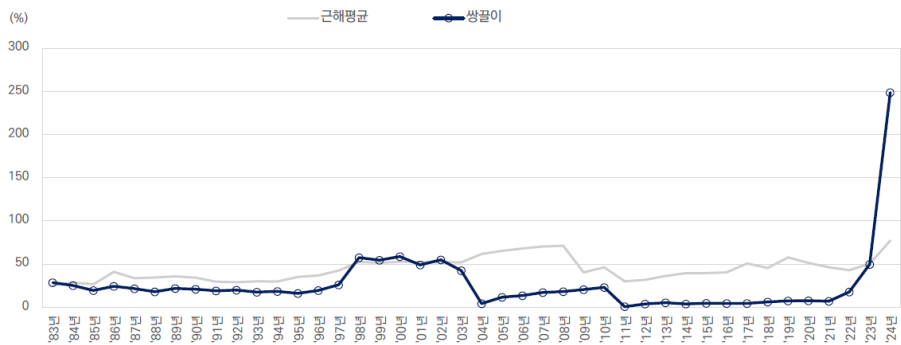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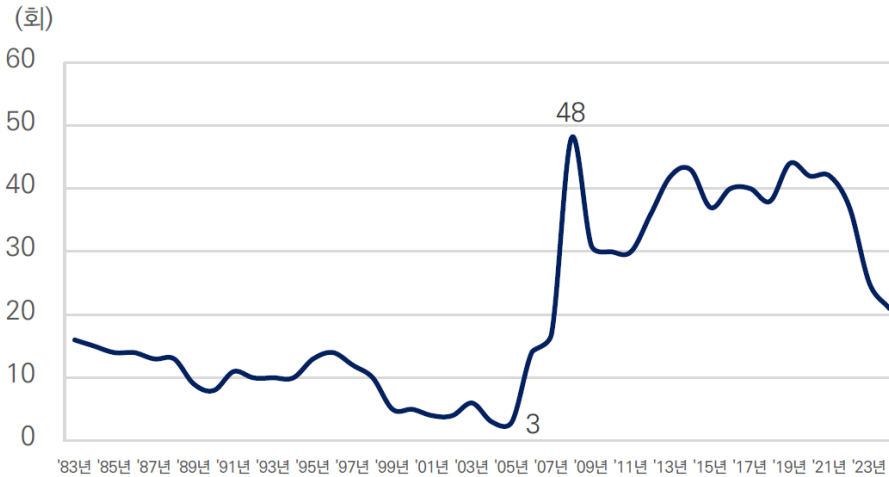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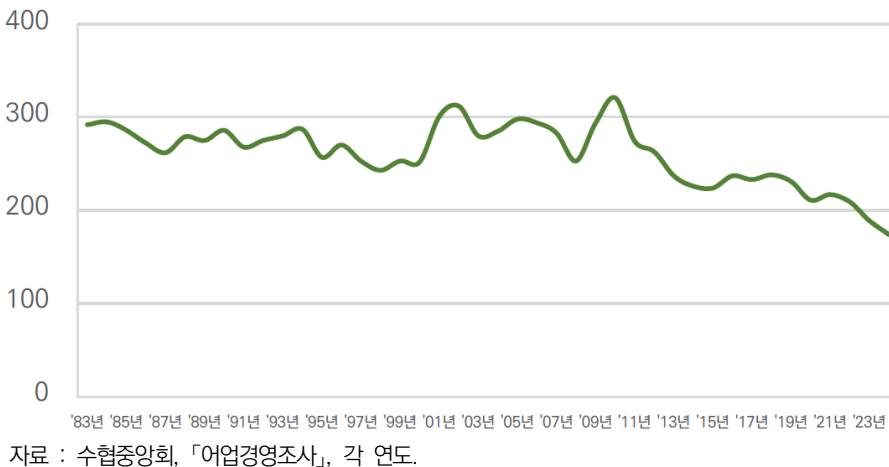
[부록 그림 4]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⑤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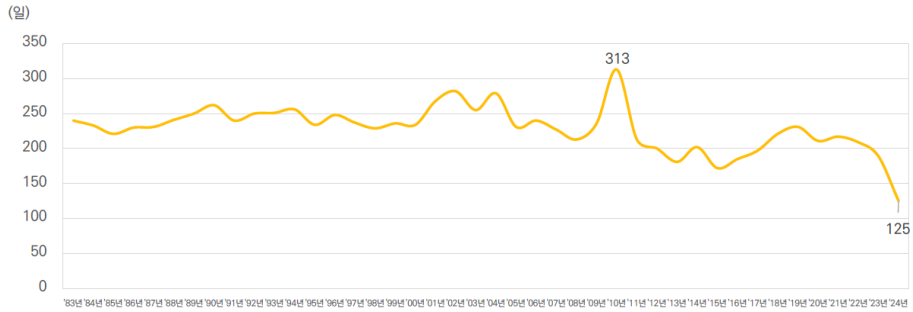
[부록 그림 5]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⑥ 출어일수 추이



[부록 그림 6]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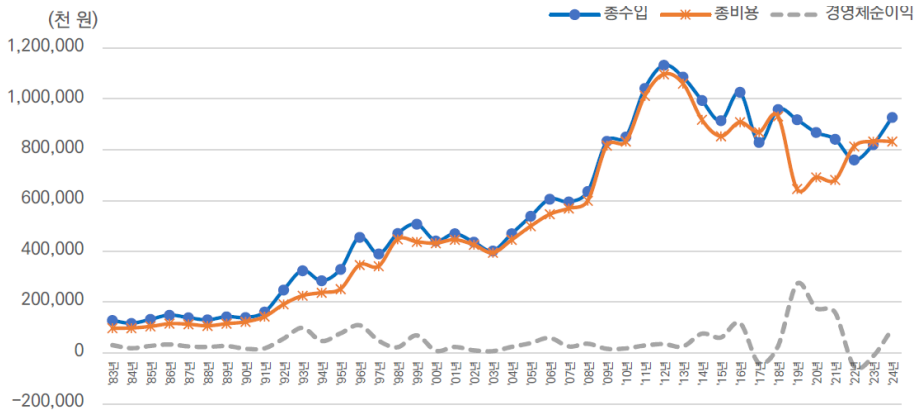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나.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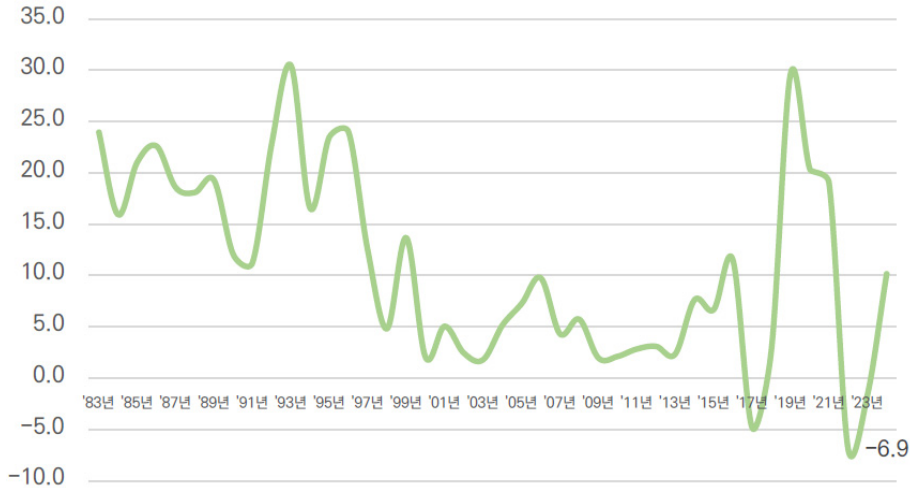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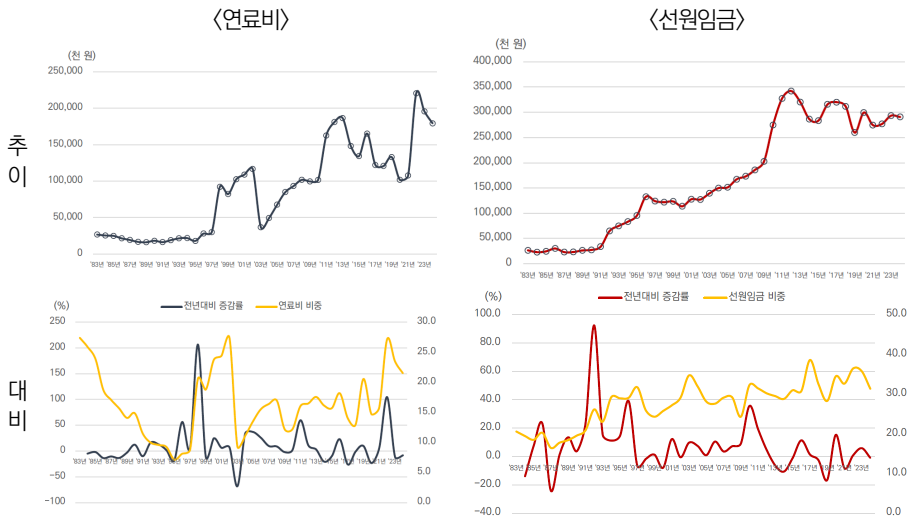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9]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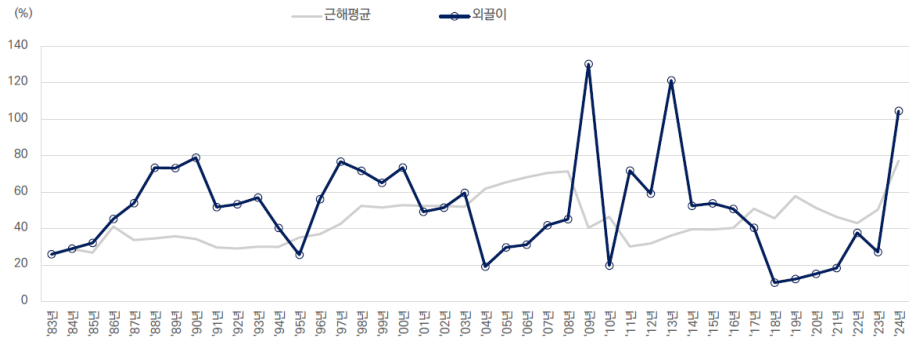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0]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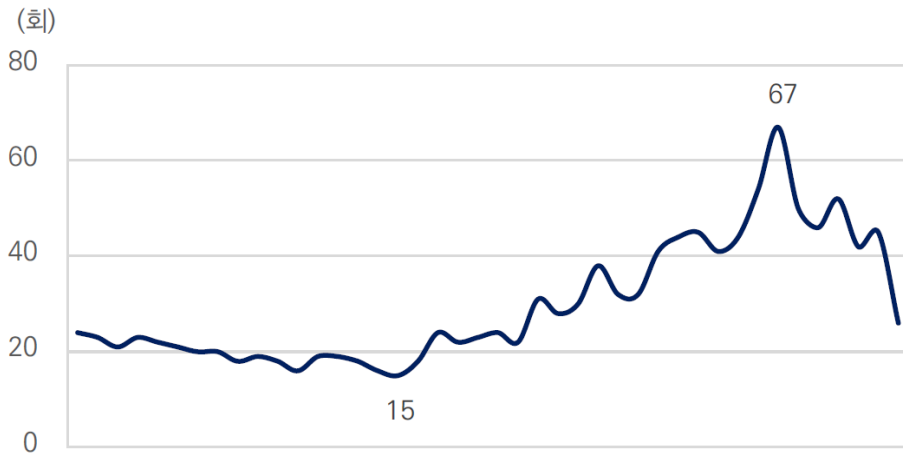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1]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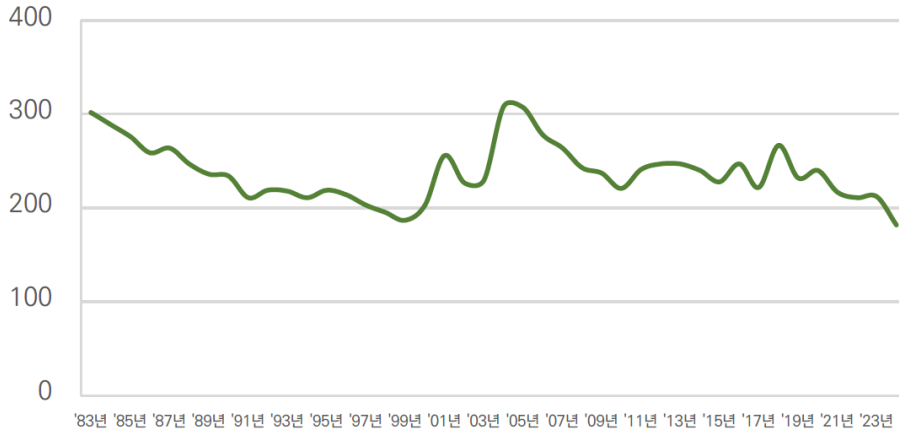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2]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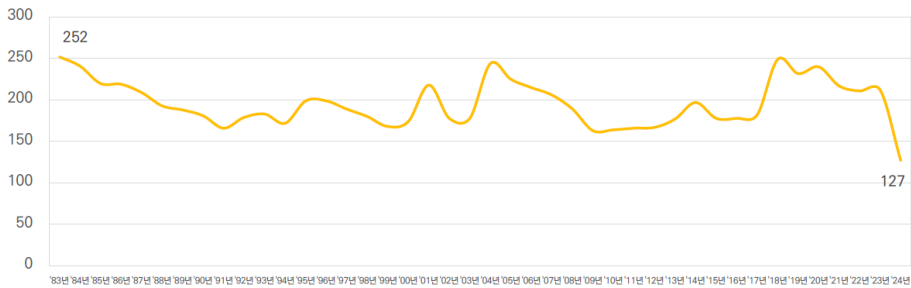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3]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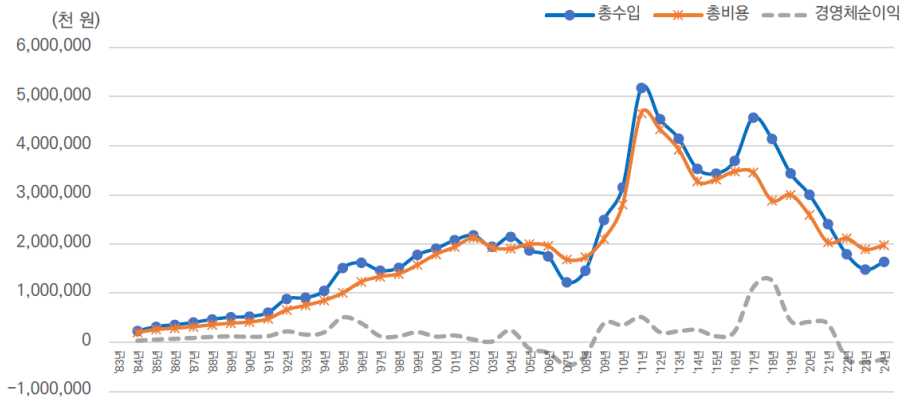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4]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다. 대형트롤어업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5] 대형트롤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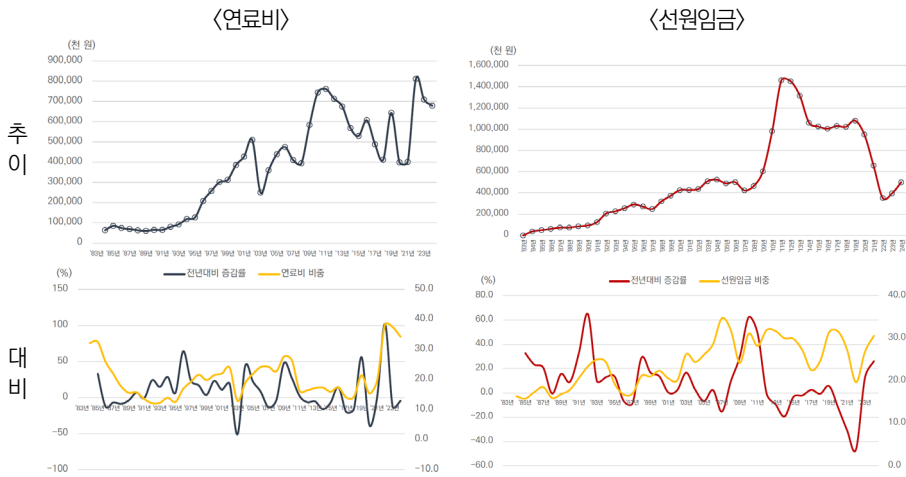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6] 대형트롤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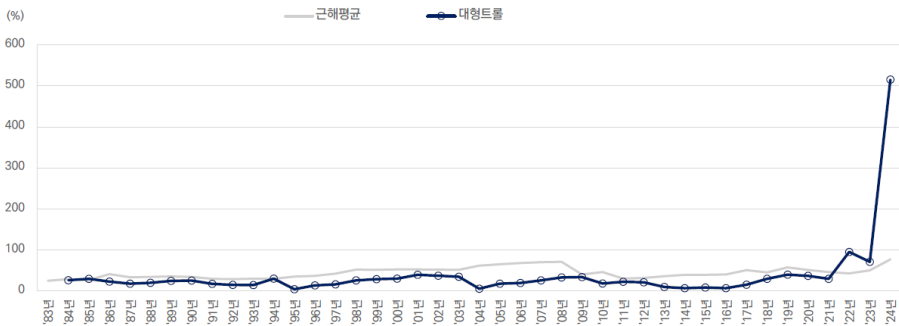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7] 대형트롤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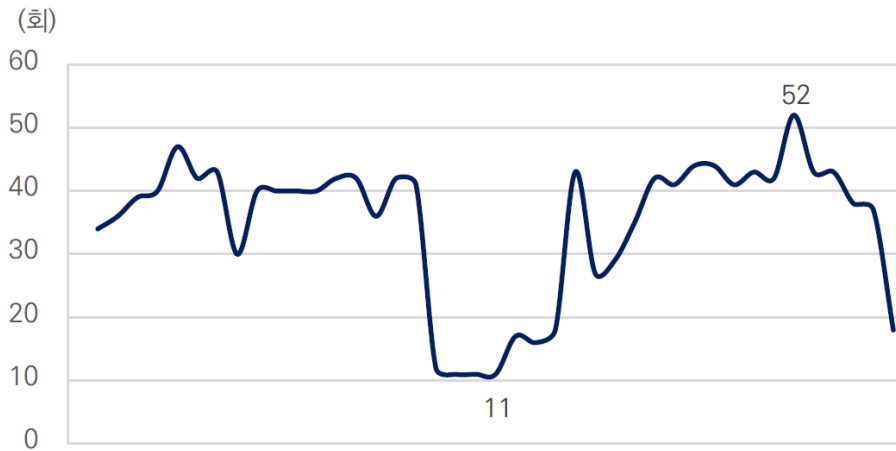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8] 대형트롤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⑤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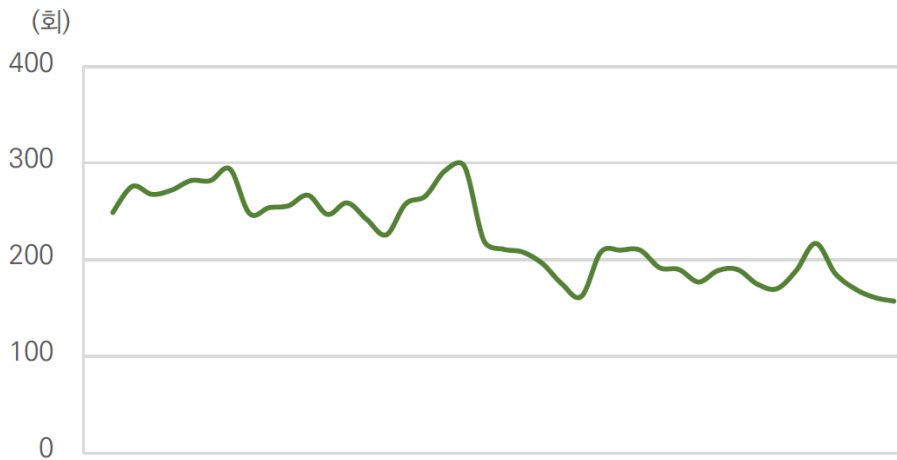


'83년 '85년 '87년 '89년 '91년 '93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19] 대형트롤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⑥ 출어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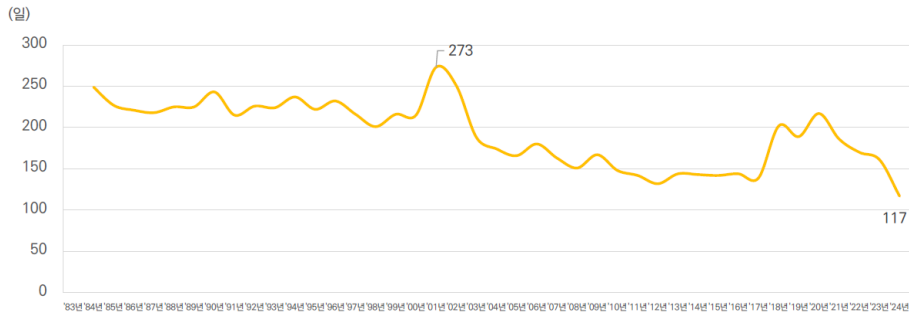


'83년 '85년 '87년 '89년 '91년 '93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0] 대형트롤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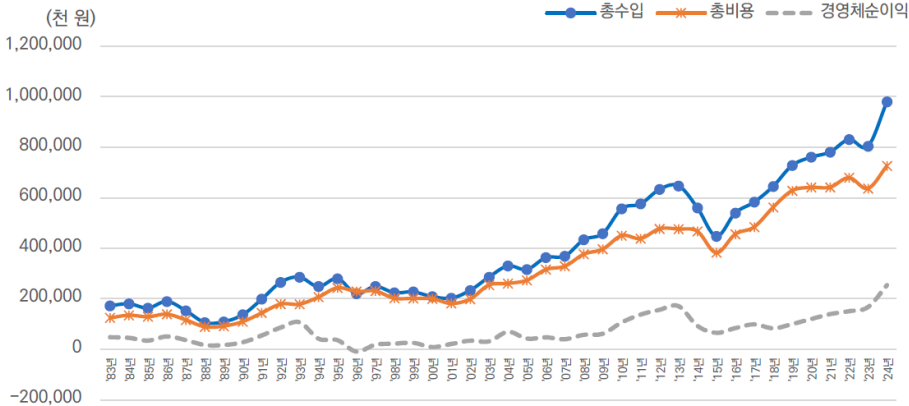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1] 대형트롤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라.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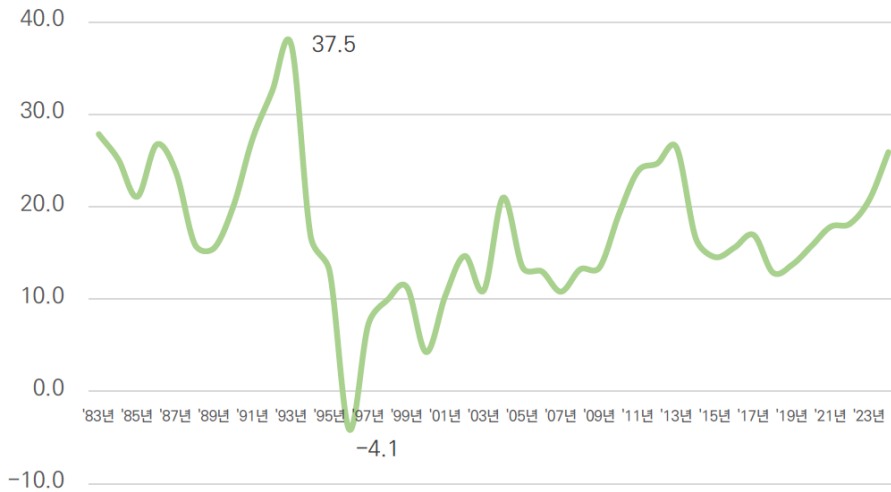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2]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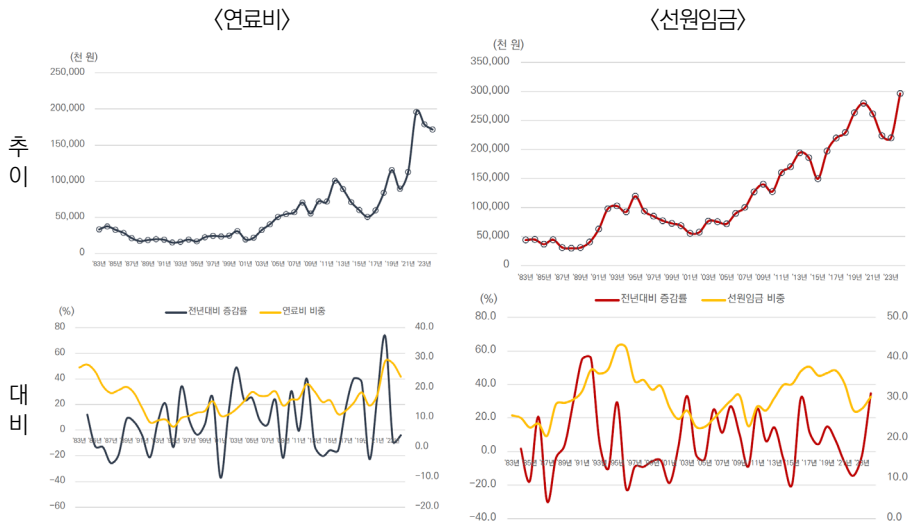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3]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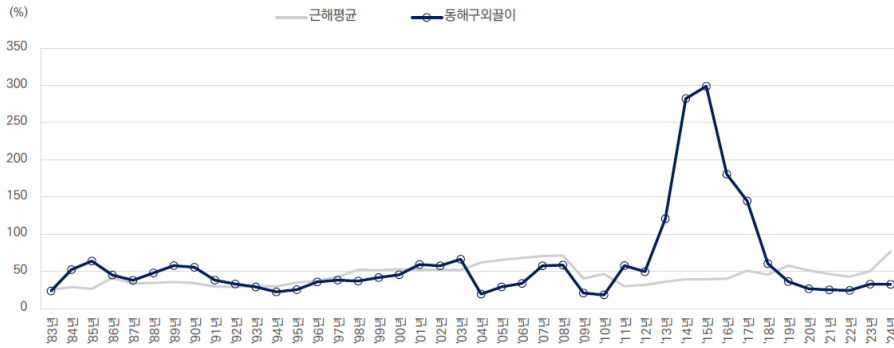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4]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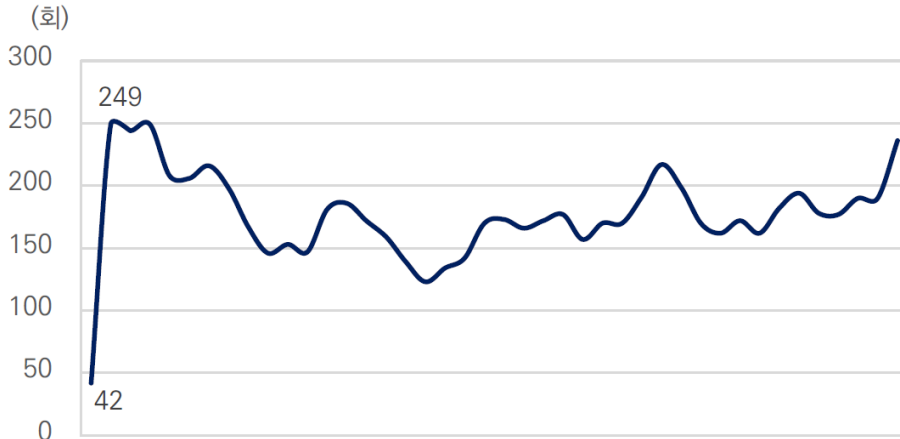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5]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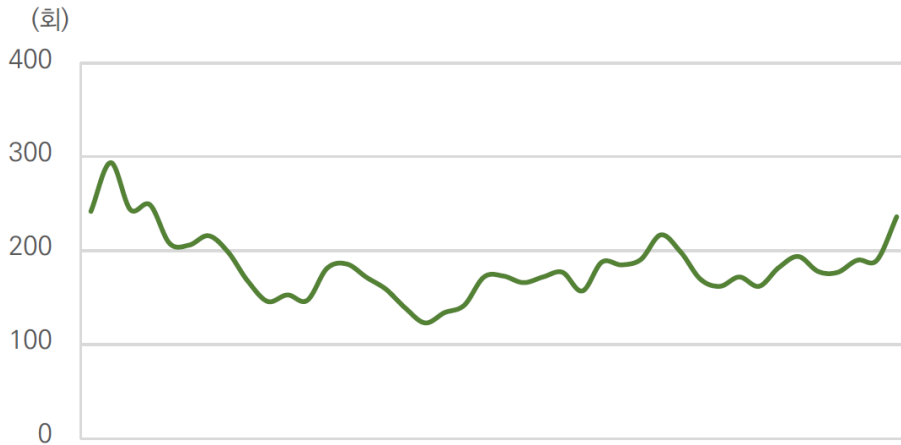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6]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⑥ 출어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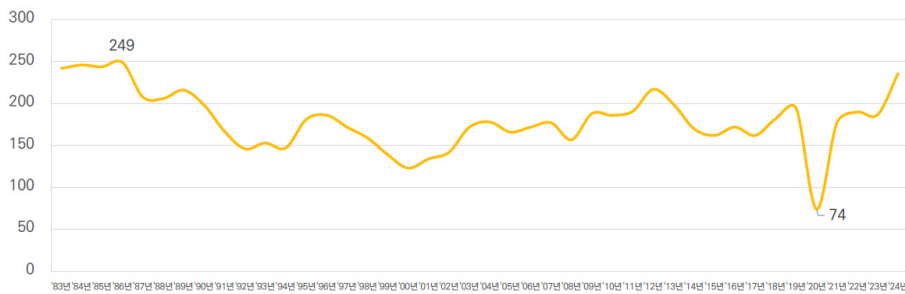


'83년 '85년 '87년 '89년 '91년 '93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7]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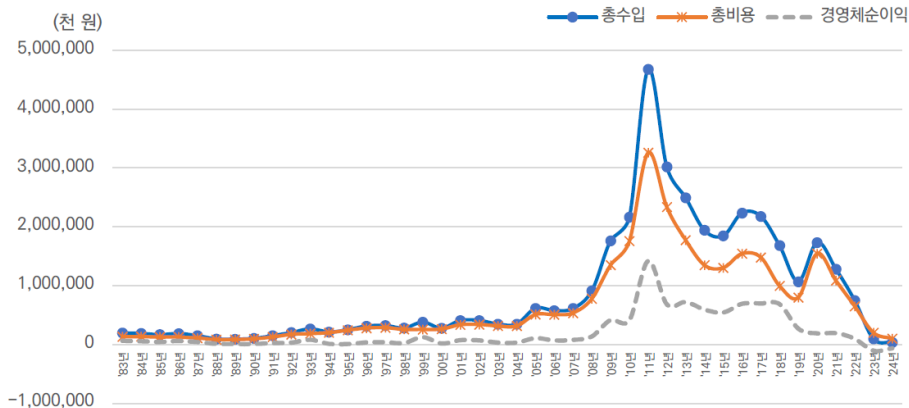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8] 동해구중형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마. 동해구트롤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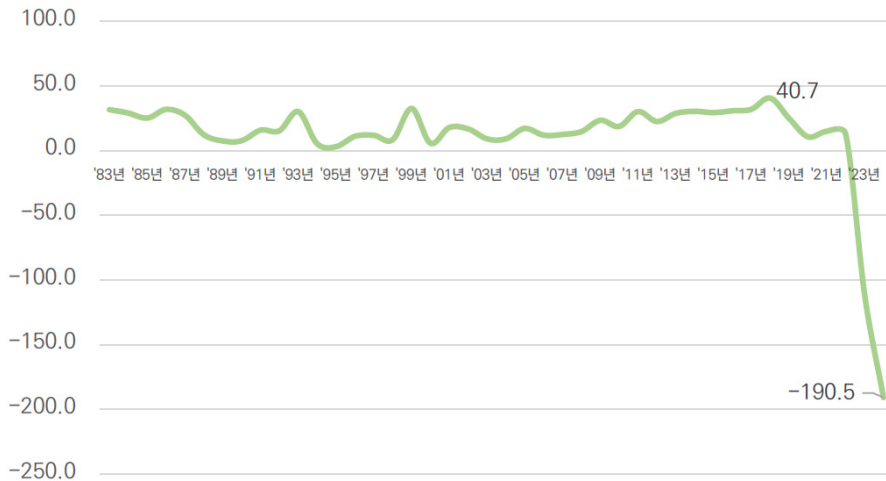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29] 동해구트롤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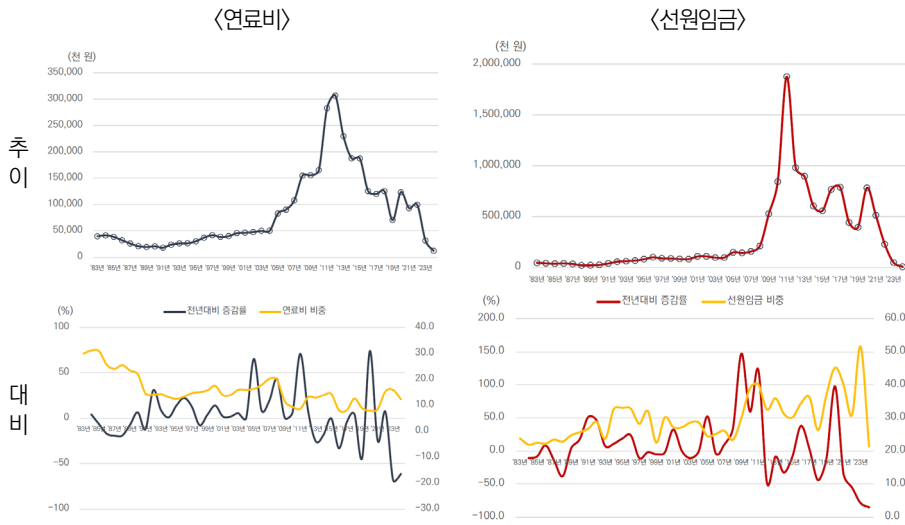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0] 동해구트롤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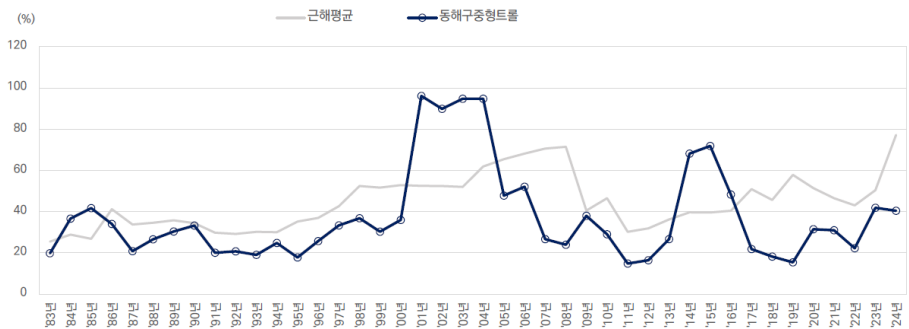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1] 동해구트롤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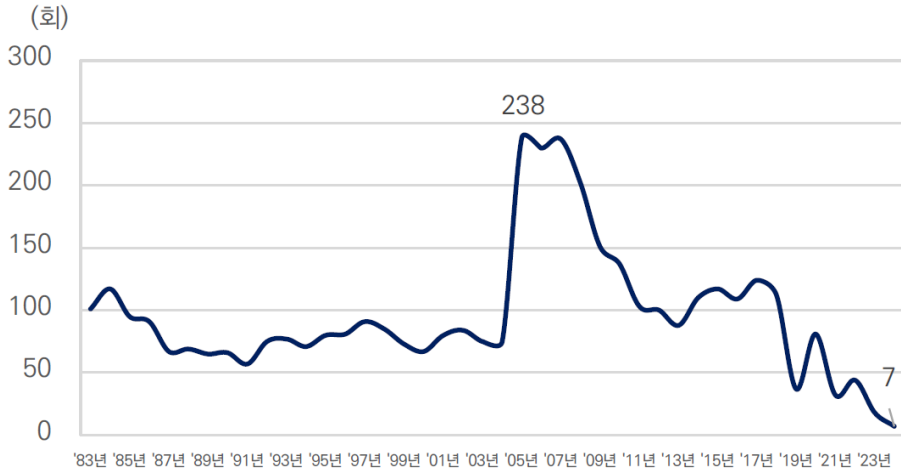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2] 동해구트롤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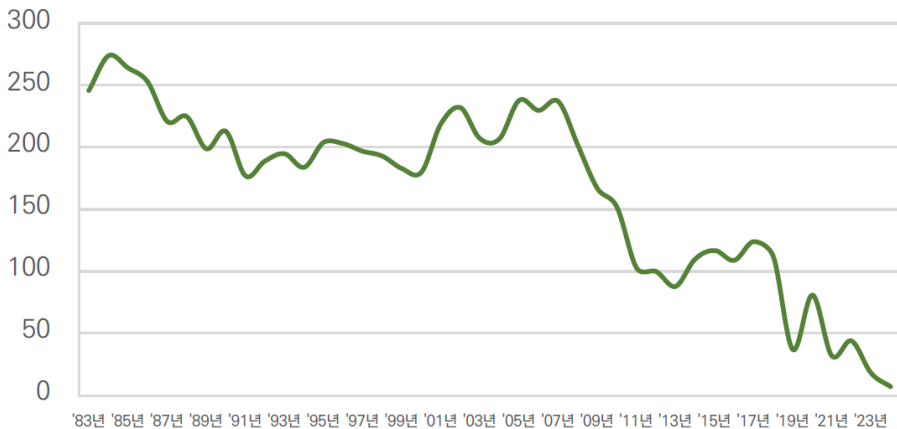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3] 동해구트롤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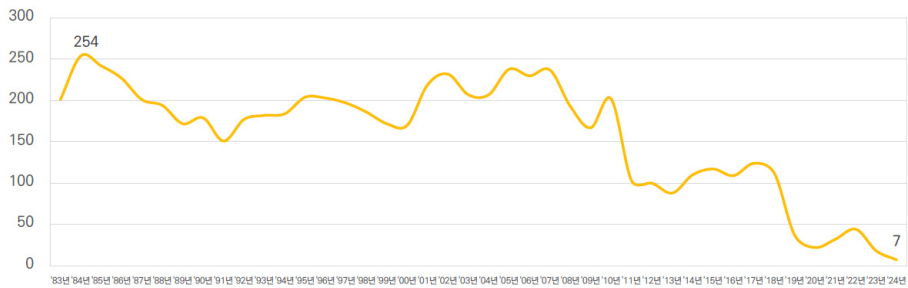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4] 동해구트롤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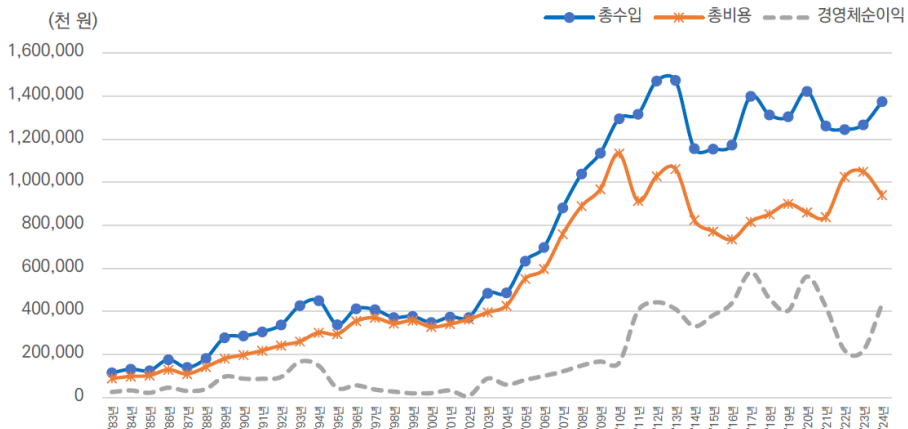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5] 동해구트롤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바.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6]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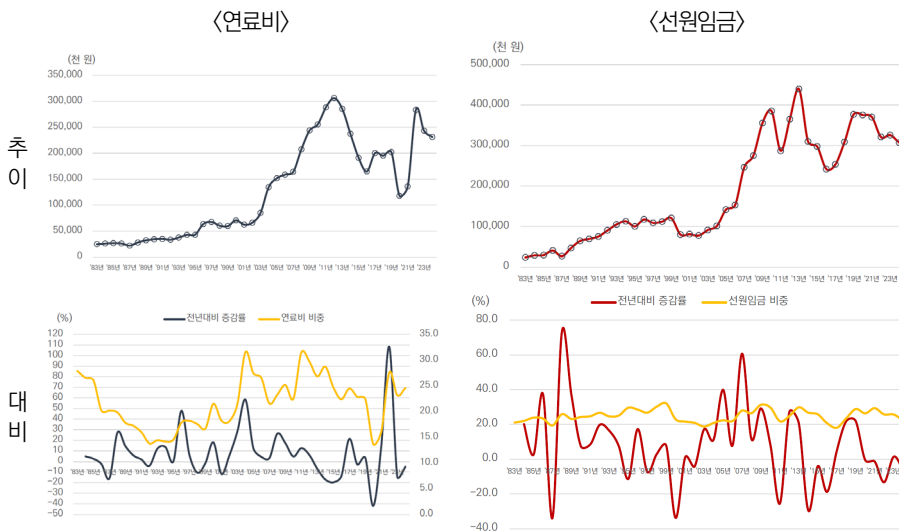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7]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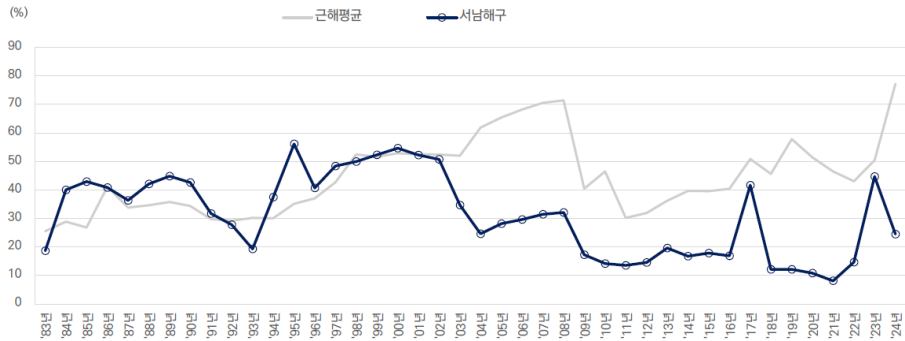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8]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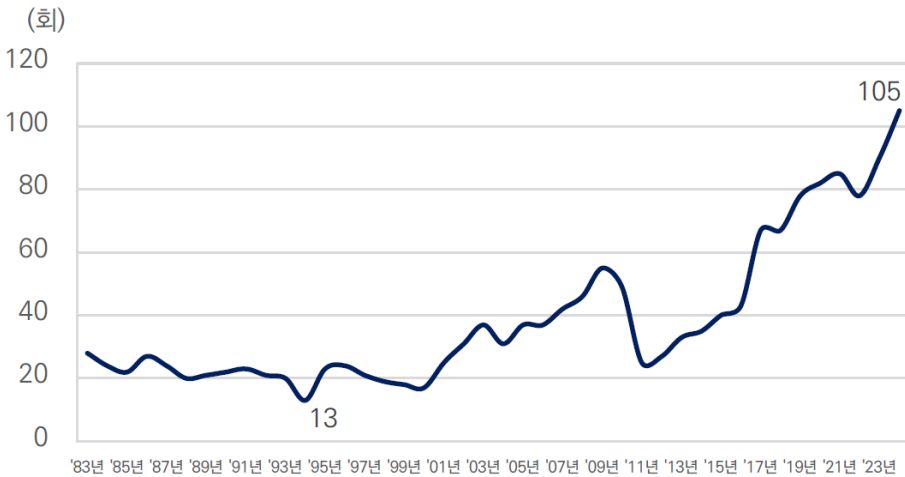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39]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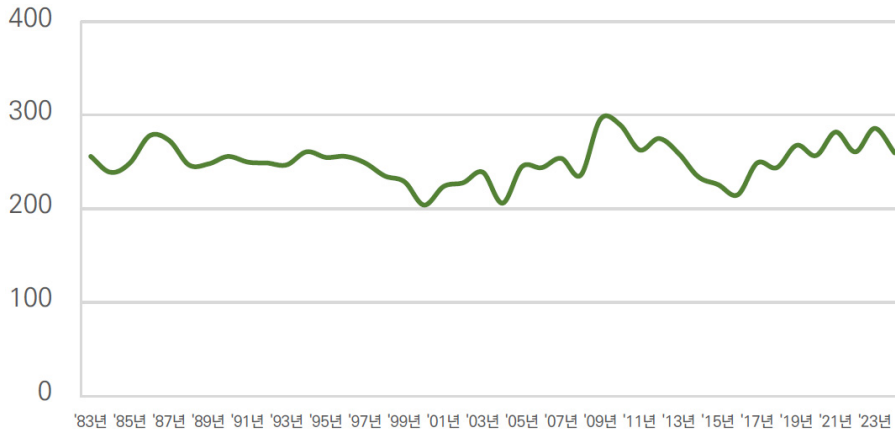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0]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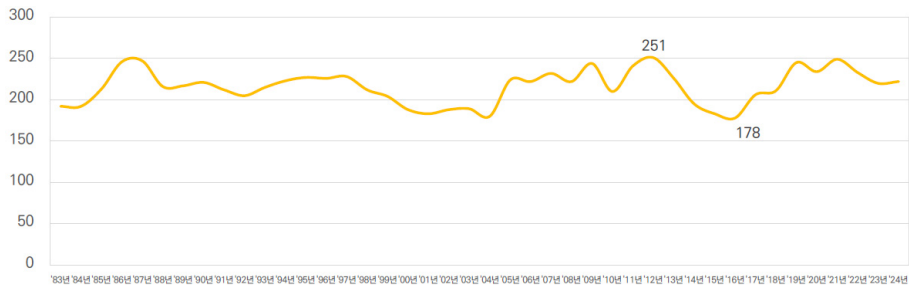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1]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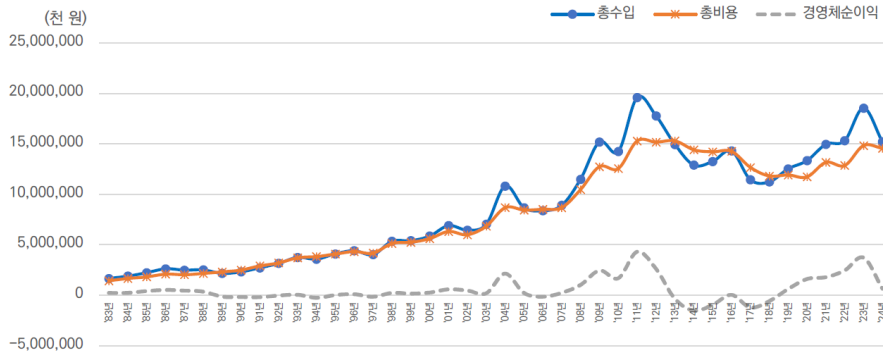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2]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사. 대형선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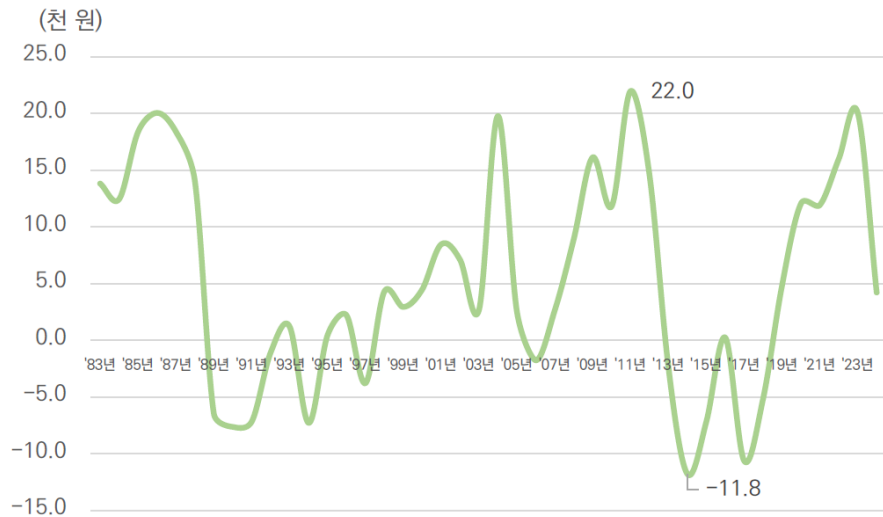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3]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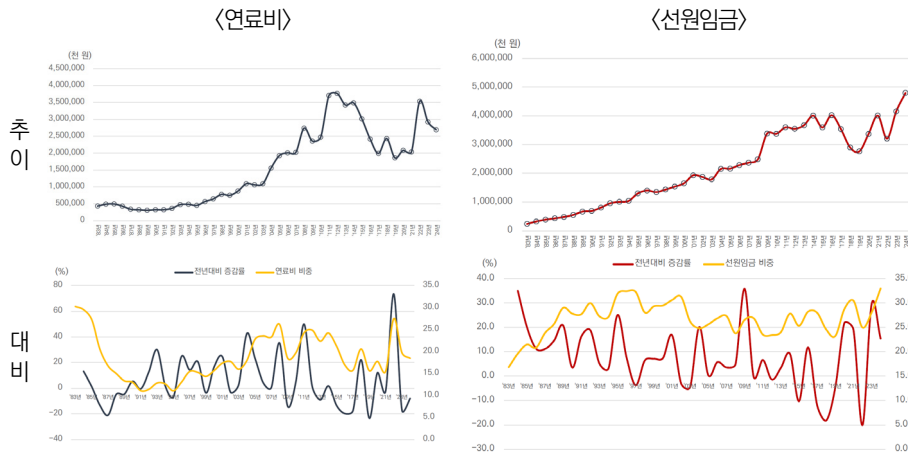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4] 대형선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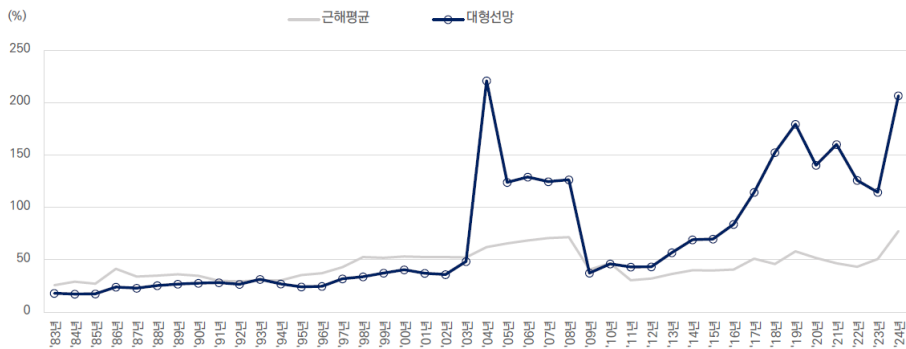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5] 대형선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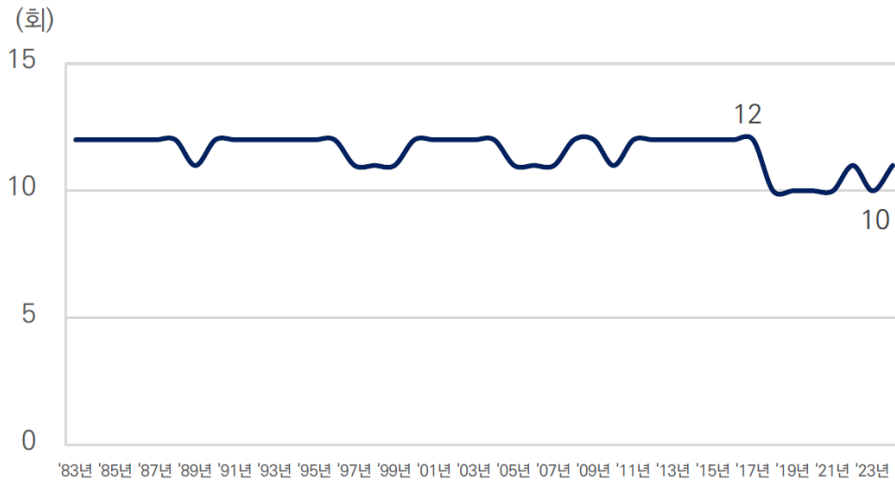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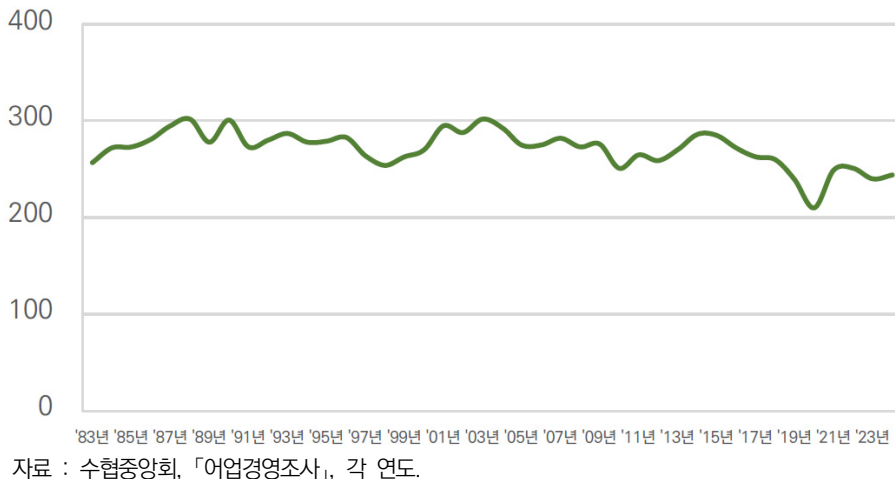
[부록 그림 46] 대형선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⑤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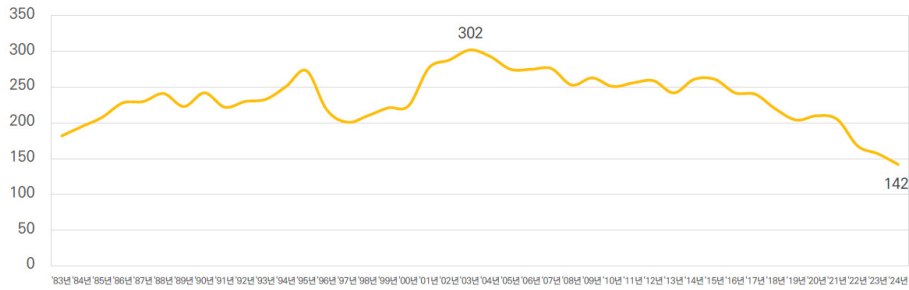
[부록 그림 47] 대형선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⑥ 출어일수 추이



[부록 그림 48] 대형선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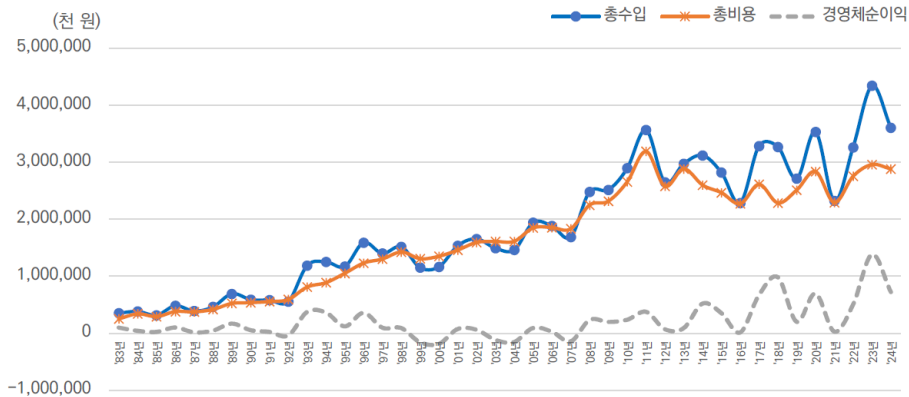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49] 대형선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아. 기선권현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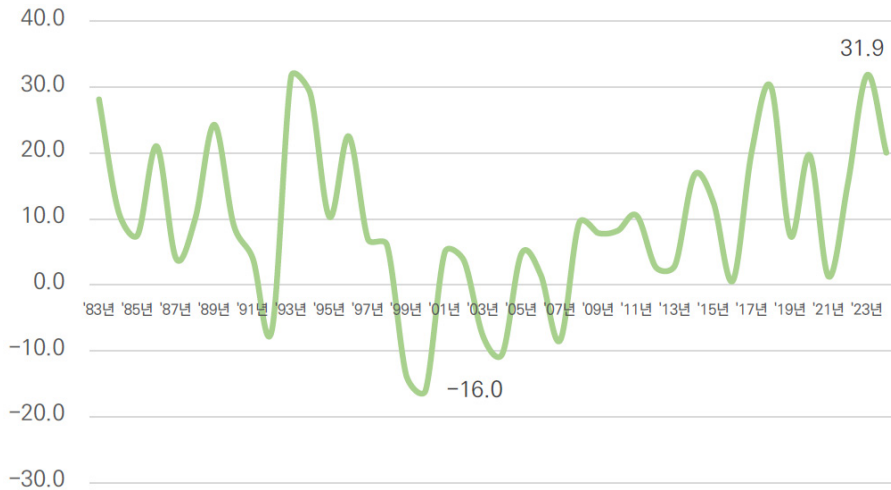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0] 기선권현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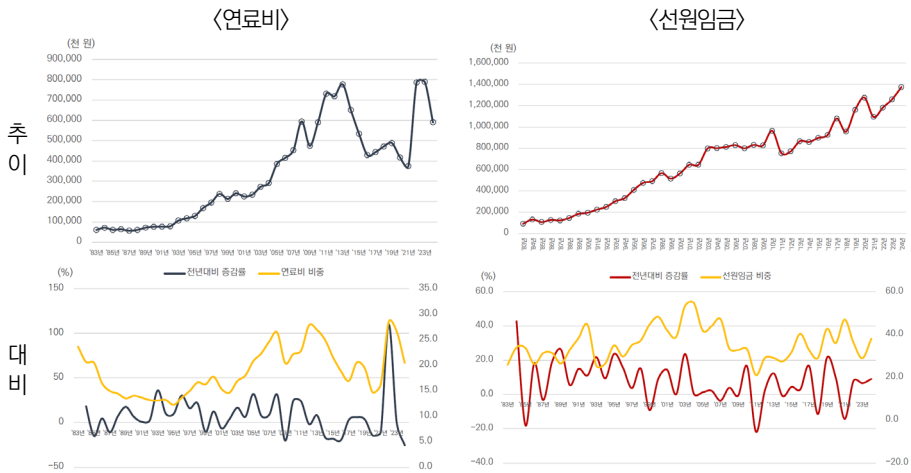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1] 기선권현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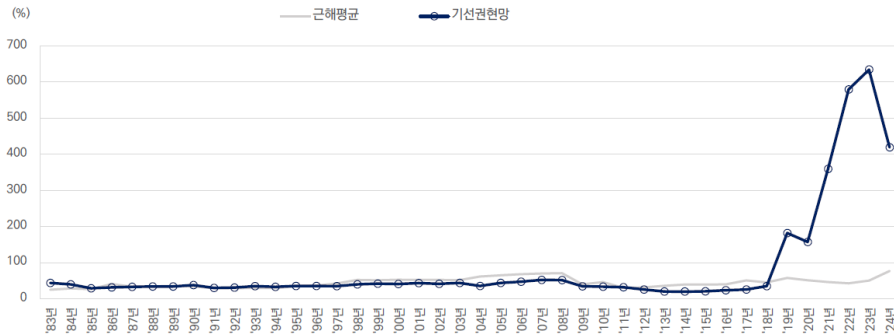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2] 기선권현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3]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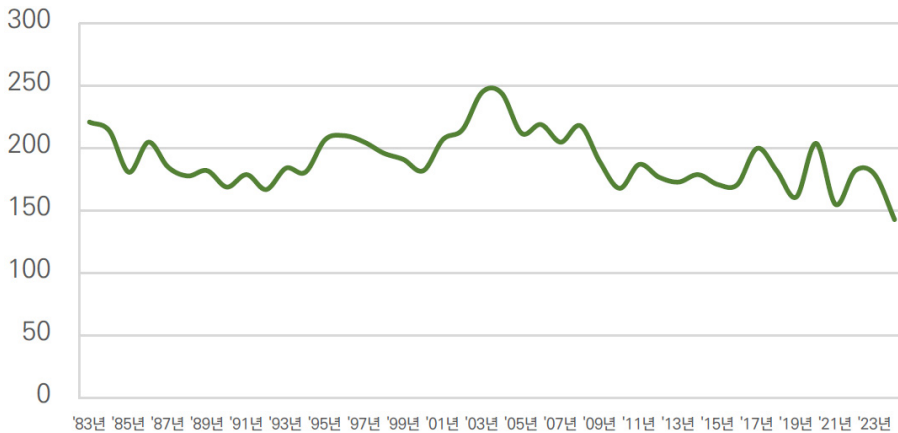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4] 기선권현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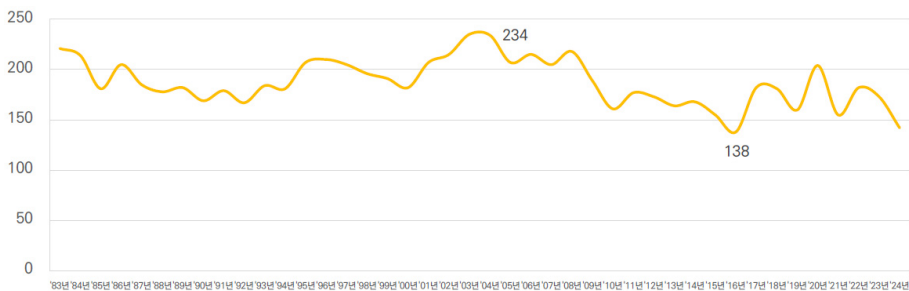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83년 '85년 '87년 '89년 '91년 '93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5] 기선권현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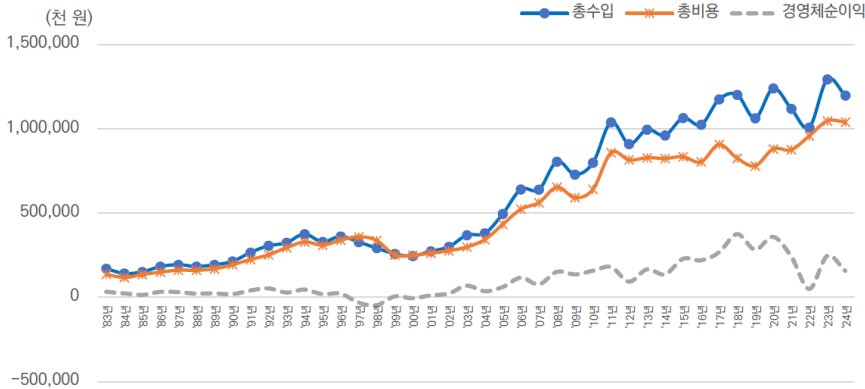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6] 기선권현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자. 근해안강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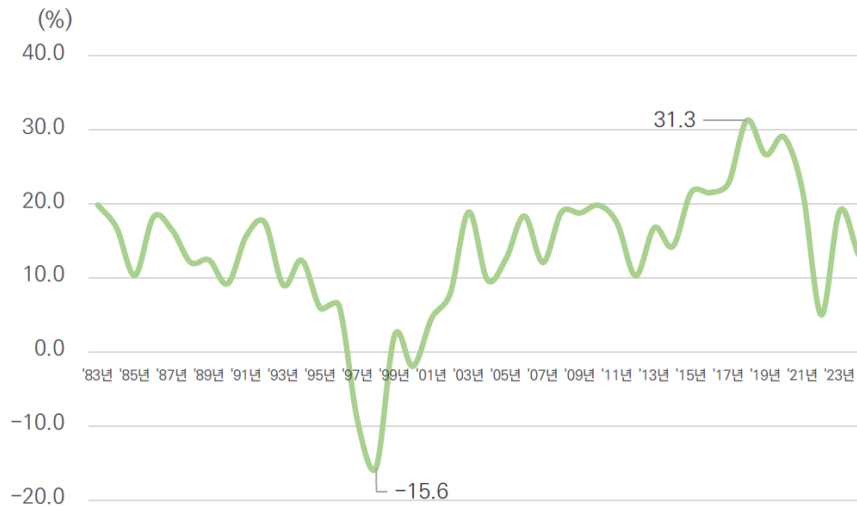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7] 근해안강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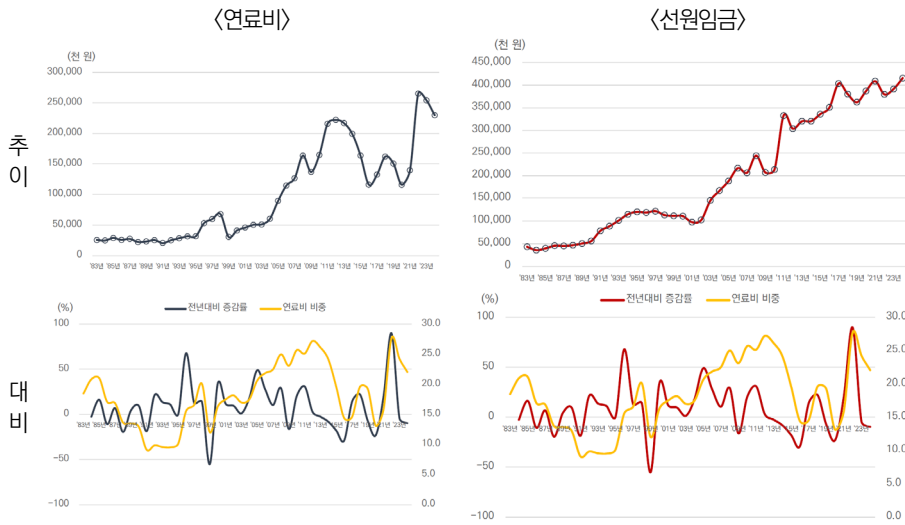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8] 근해안강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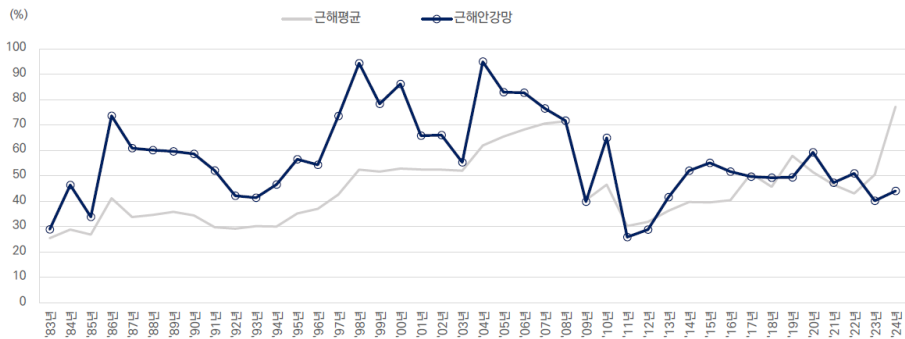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59] 근해안강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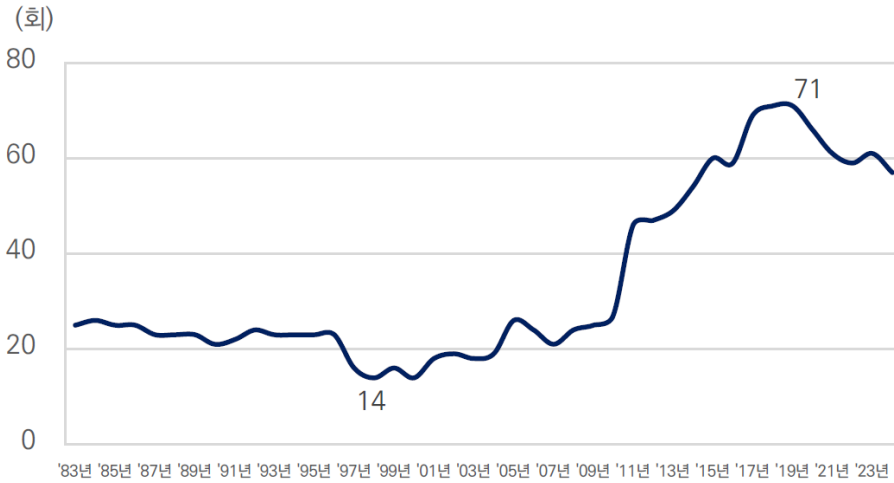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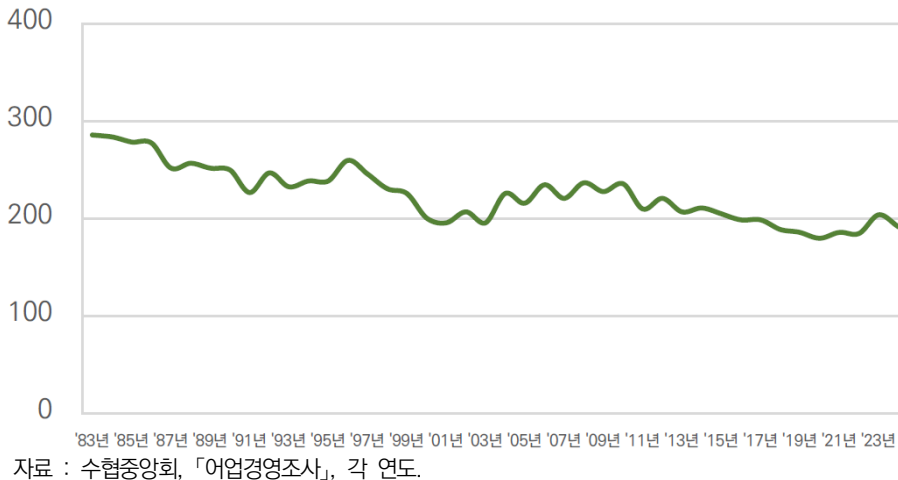
[부록 그림 60] 근해안강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⑤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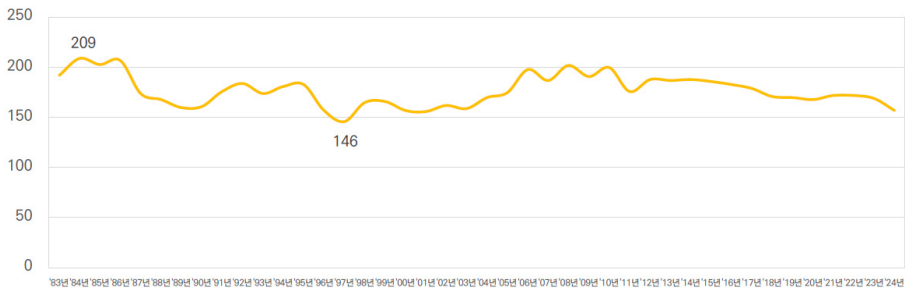
[부록 그림 61] 근해안강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⑥ 출어일수 추이



[부록 그림 62] 근해안강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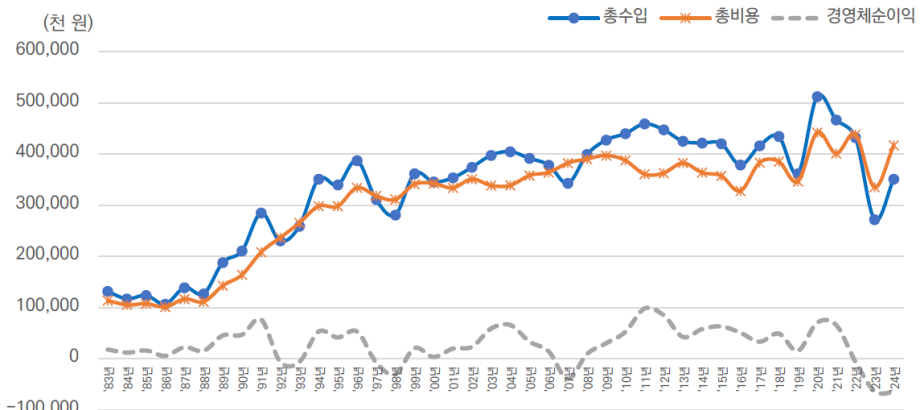
⑦ 어로일수 추이



[부록 그림 63] 근해안강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차. 근해채낚기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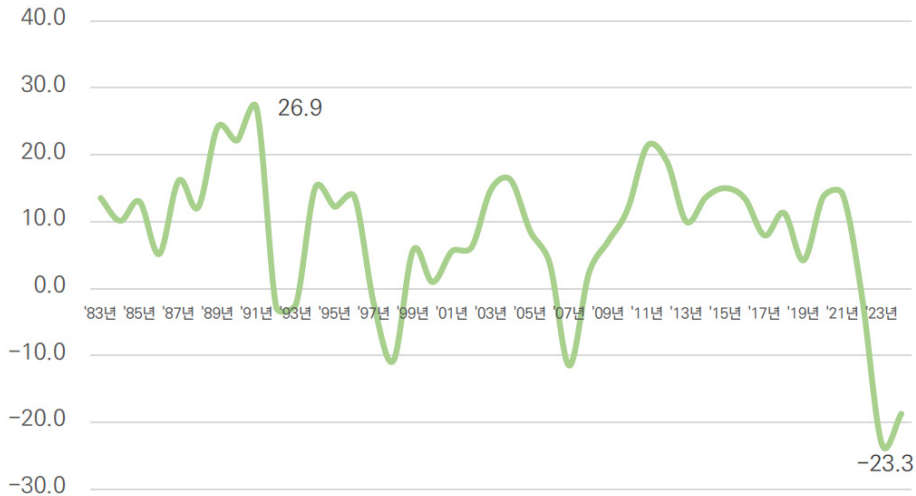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부록 그림 64] 근해채낚기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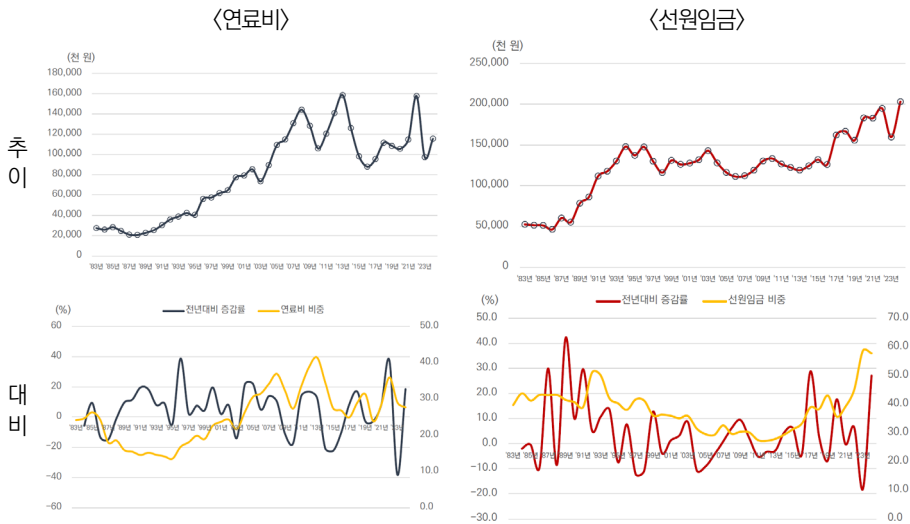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65] 근해채낚기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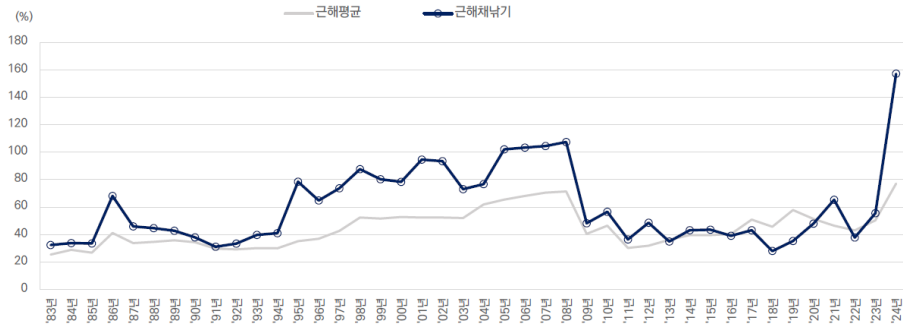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66] 근해채낚기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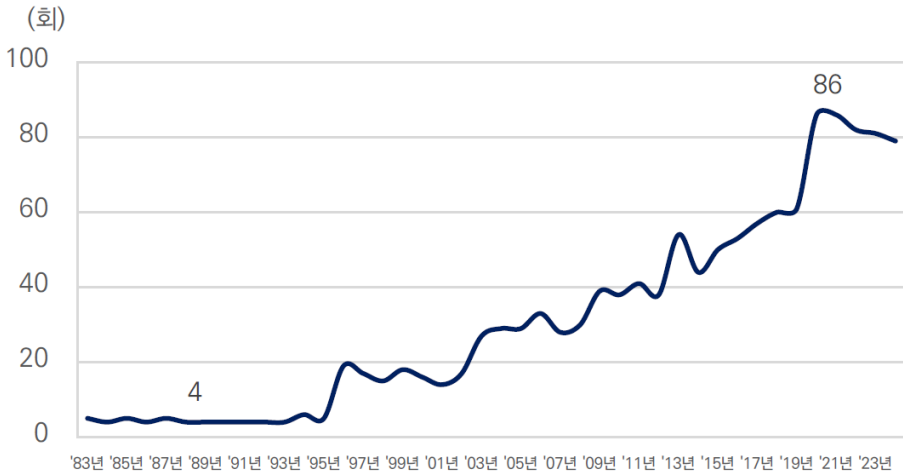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67] 근해채낚기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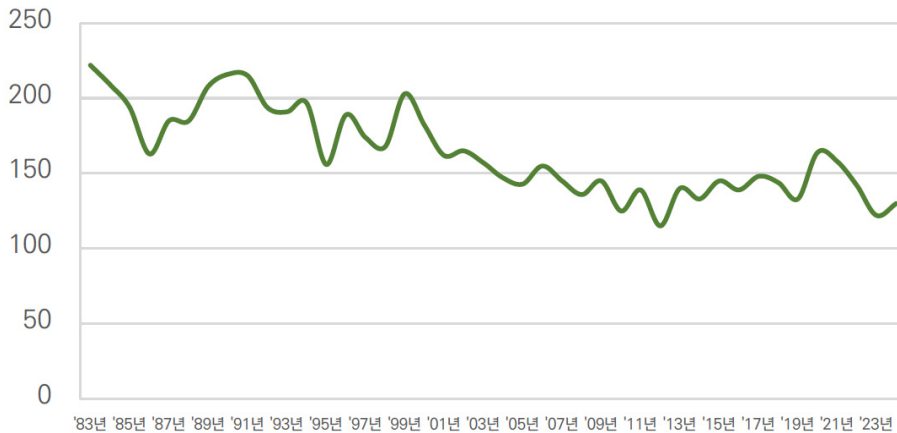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68] 근해채낚기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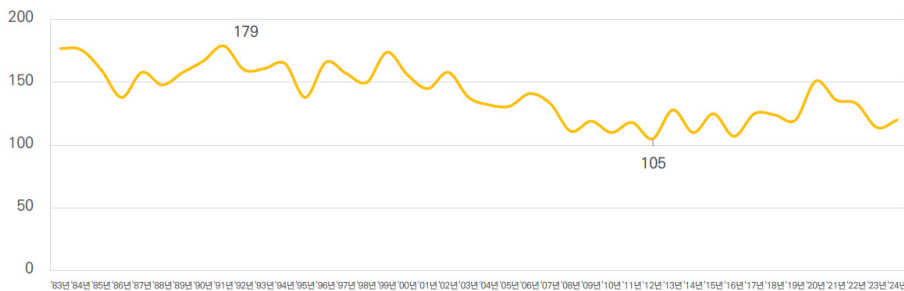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69] 근해채낚기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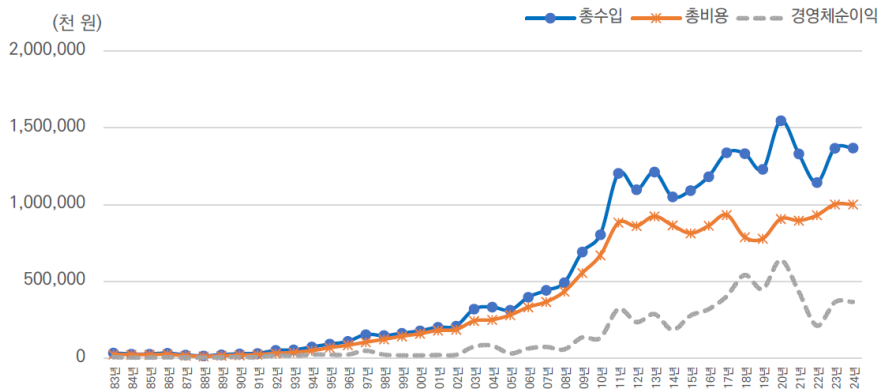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0] 근해채낚기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카. 근해자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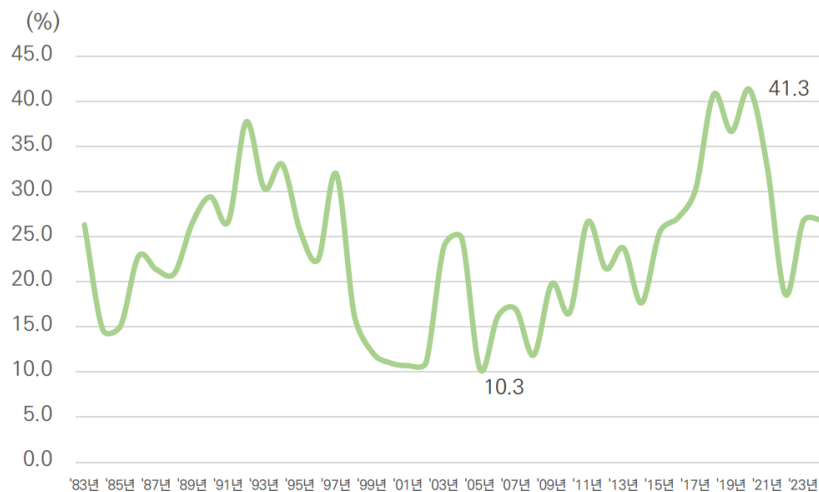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1] 근해자망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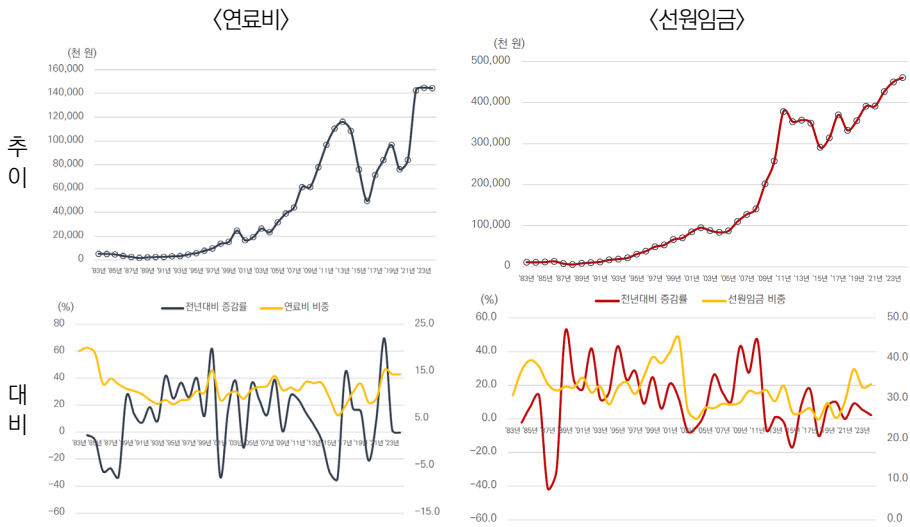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2] 근해자망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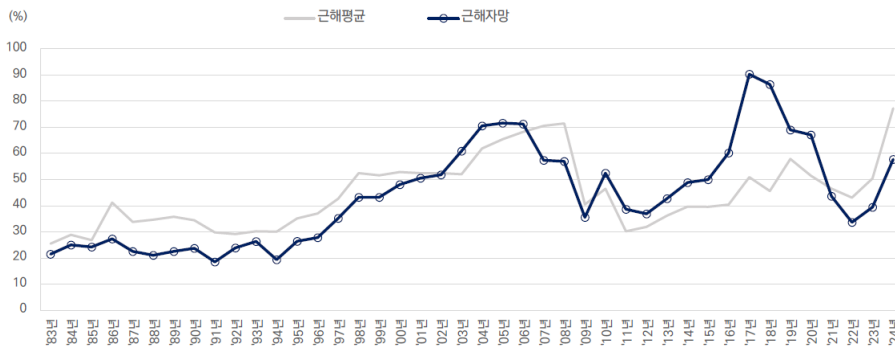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3] 근해자망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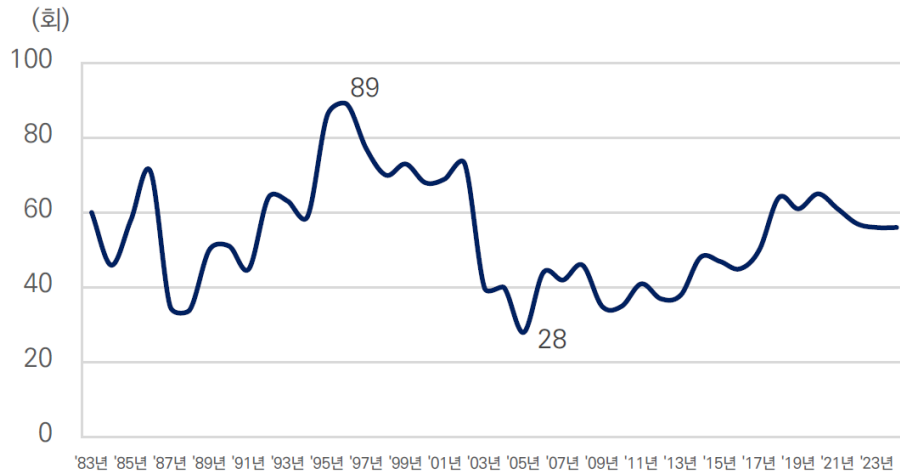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4] 근해자망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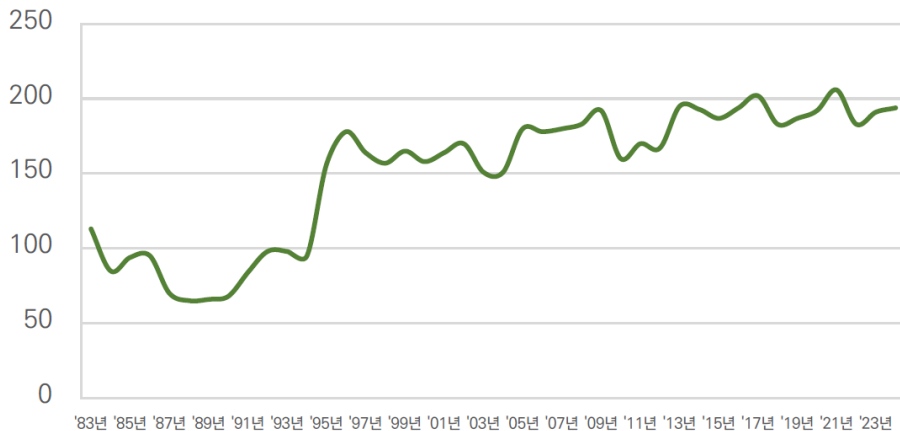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5] 근해자망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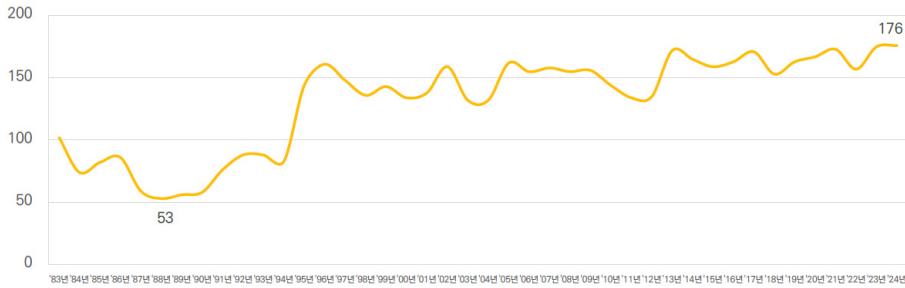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6] 근해자망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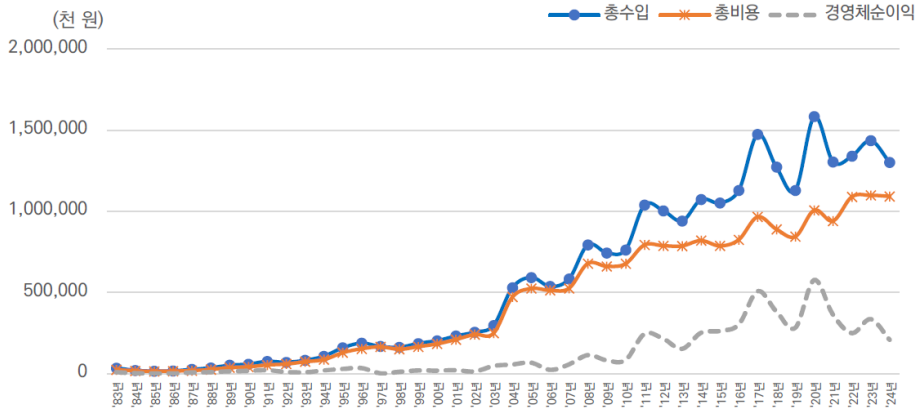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7] 근해자망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타. 근해연승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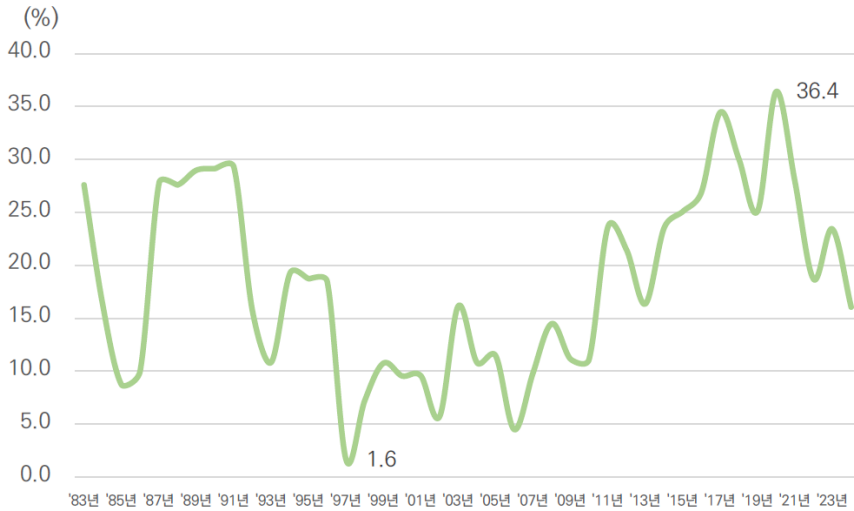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8] 근해연승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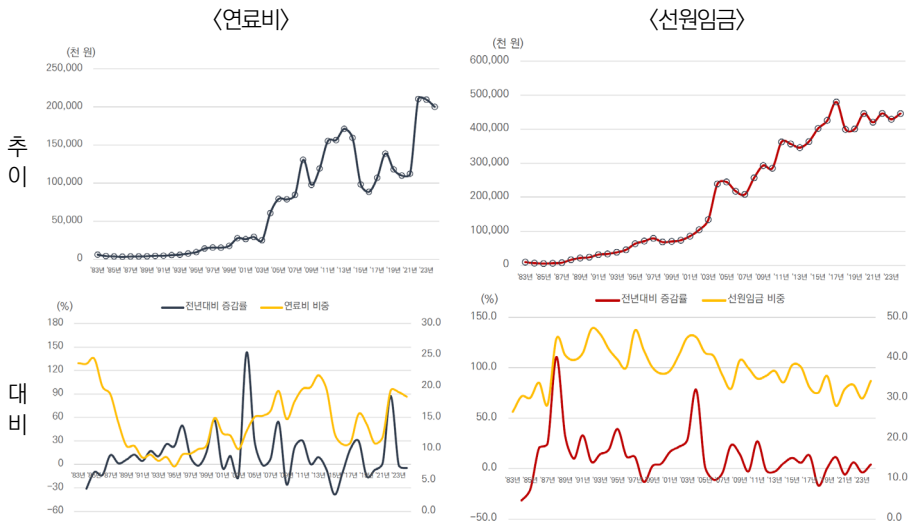
② 순이익률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79] 근해연승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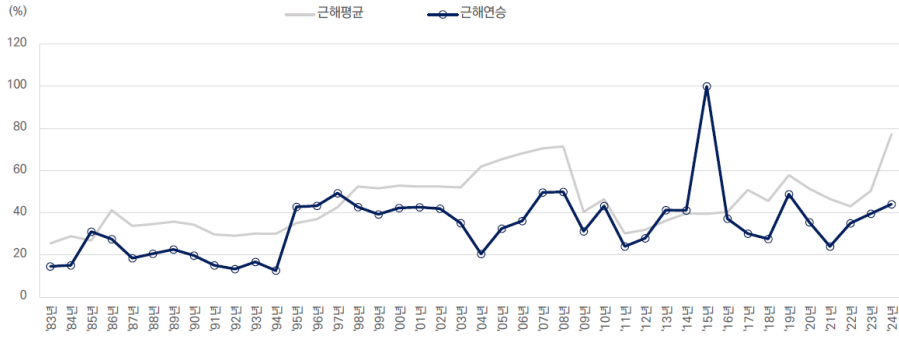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0] 근해연승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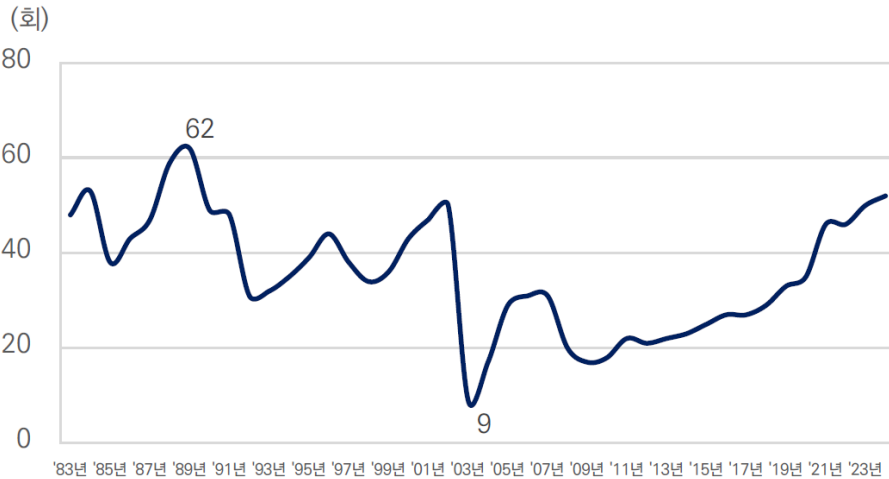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1] 근해연승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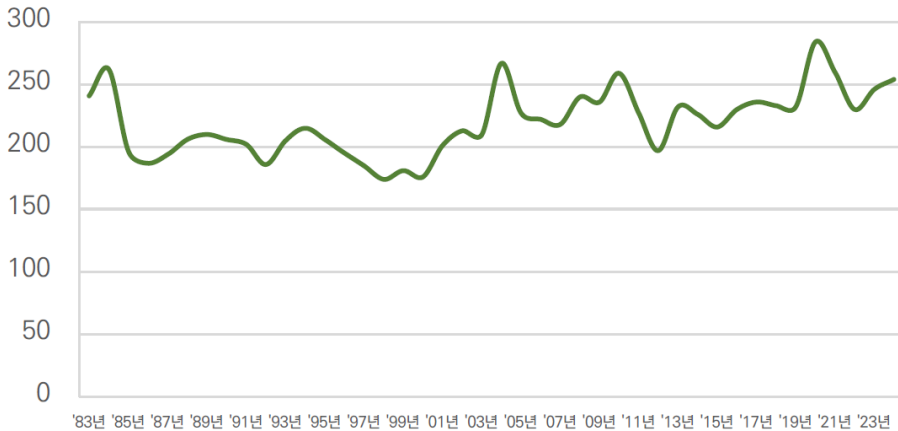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2] 근해연승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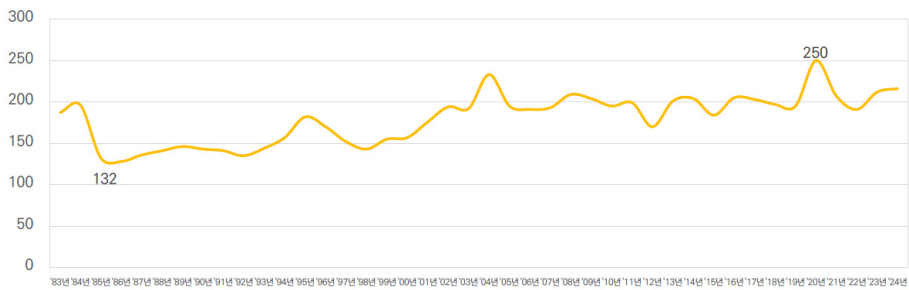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83년 '85년 '87년 '89년 '91년 '93년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23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3] 근해연승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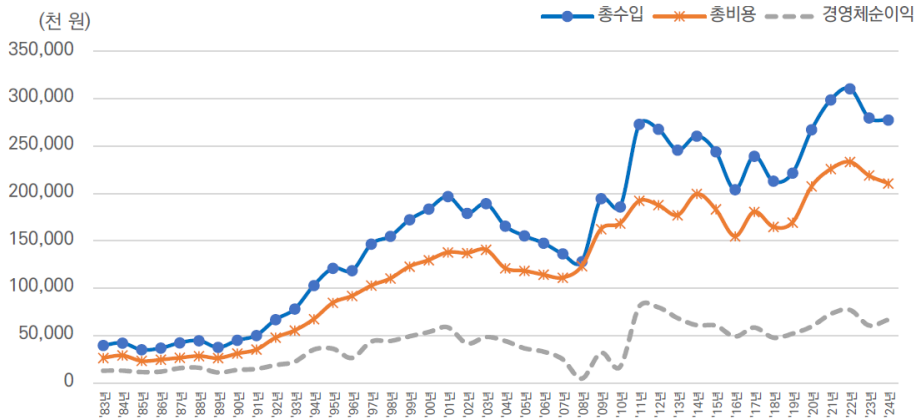


'83년 '84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4] 근해연승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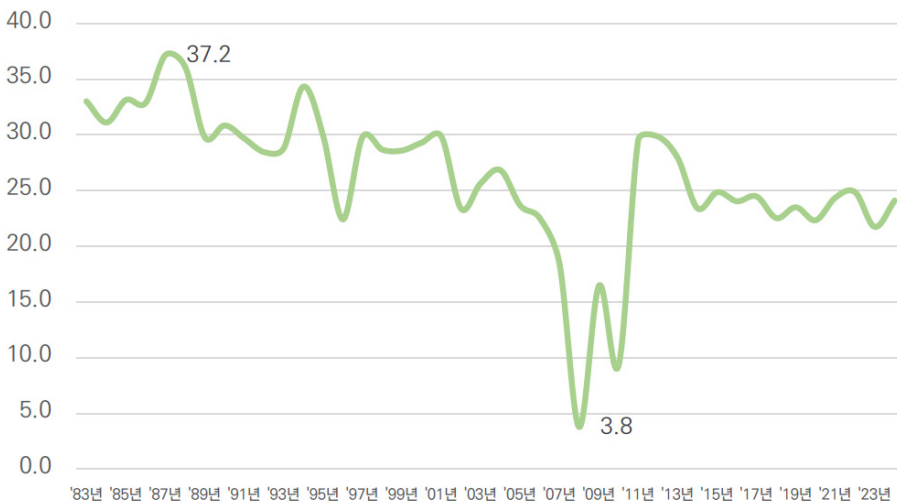
파. 잠수기어업

① 주요 경영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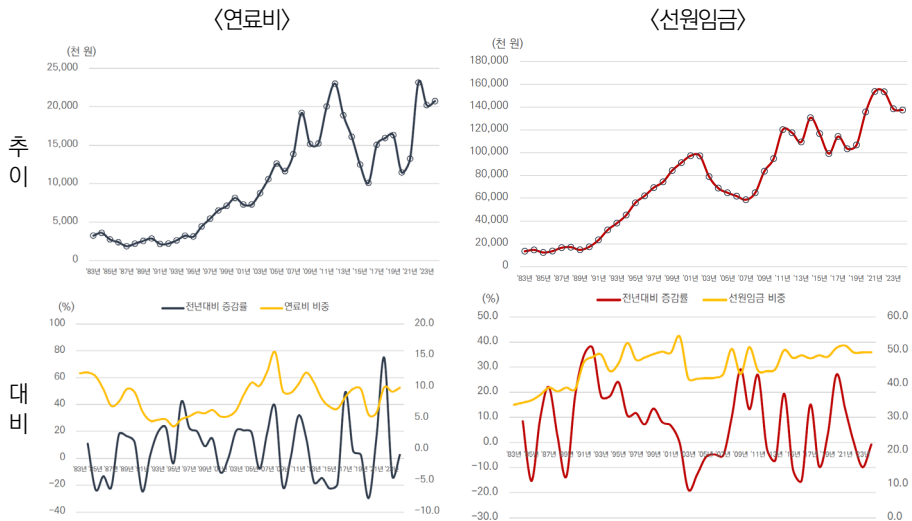
[부록 그림 85] 잠수기어업의 주요 경영실적 추이

② 순이익률 추이



[부록 그림 86] 잠수기어업의 순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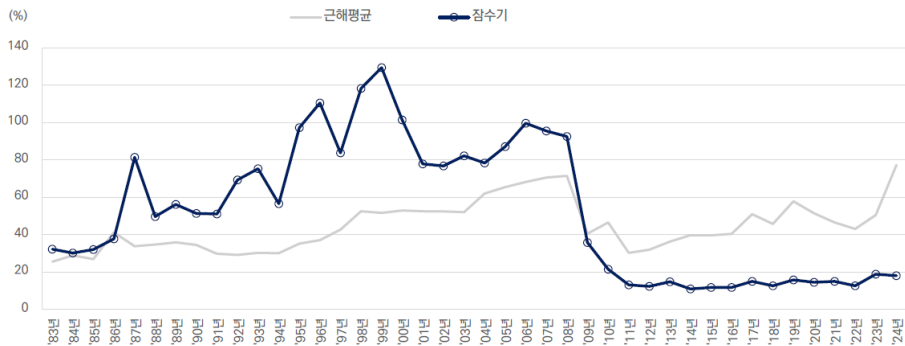
③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7] 잠수기어업의 비용(연료비, 선원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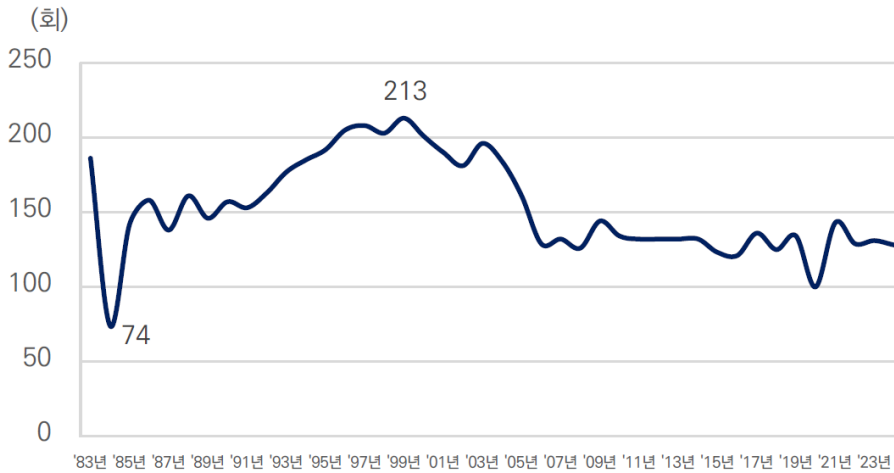
④ 부채비율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8] 잠수기어업의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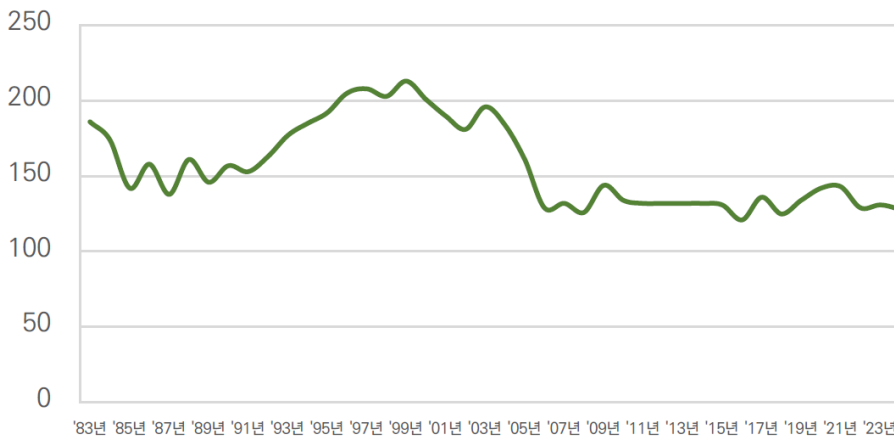
⑤ 출어횟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89] 잠수기어업의 출어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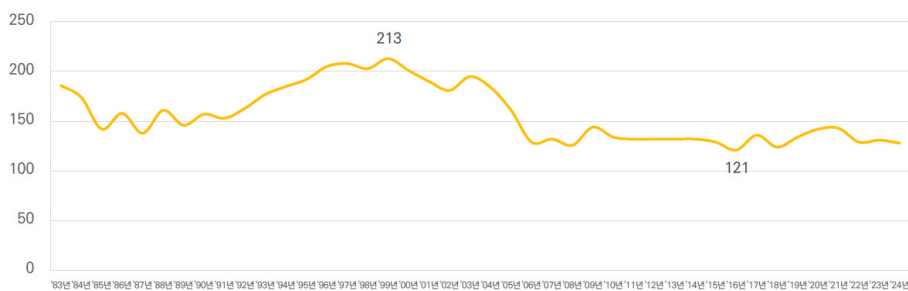
⑥ 출어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90] 잠수기어업의 출어일수 추이

⑦ 어로일수 추이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각 연도.

[부록 그림 91] 잠수기어업의 어로일수 추이

부록 2. 연안어업의 업종별 경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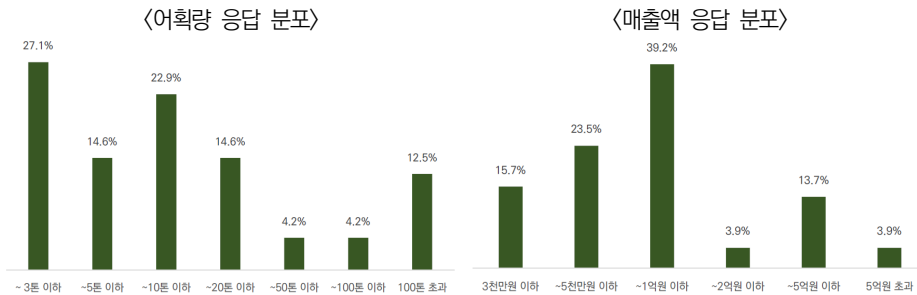
가. 연안자망어업

① 기초 통계량

〈부록 표 1〉 연안자망어업의 기초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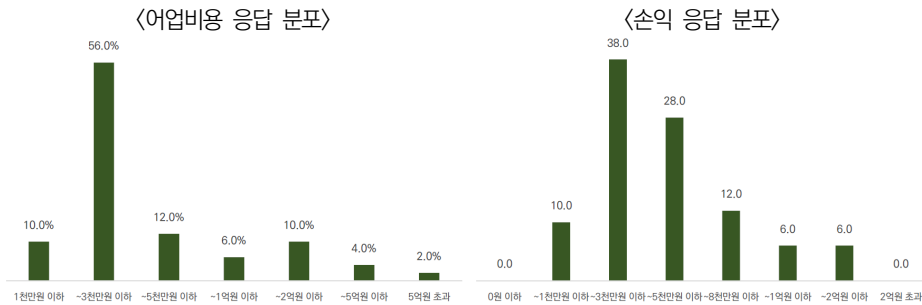
구분	어획량	매출액	비용	손익	출어일수	조업일수
평균	32.4	11964.4	7161.4	4564.3	198.7	183.1
최빈값	2.0	5000.0	2000.0	3000.0	250.0	180.0
표준 편차	58.4	16665.2	14923.7	3901.3	62.5	57.6
최솟값	0.5	1800.0	500.0	100.0	70.0	89.0
최댓값	250	100000	96000	20000	300	300
관측수	48	51	50	50	48	58

② 어획량 및 매출액



[부록 그림 92] 연안자망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③ 어업비용 및 손익



[부록 그림 93] 연안자망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나. 연안통발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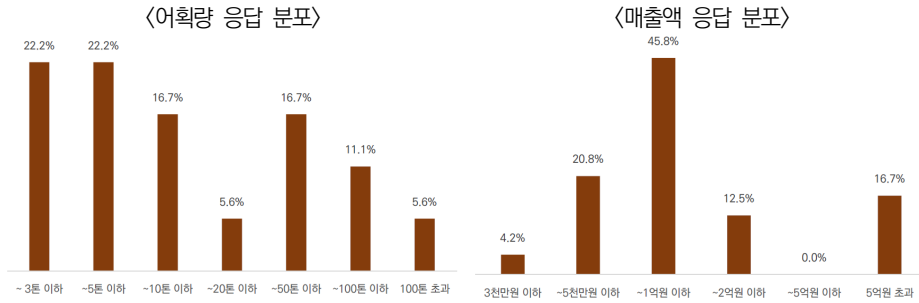
① 기초 통계량

〈부록 표 2〉 연안통발어업의 기초 통계량

구분	어획량	매출액	비용	손익	출어일수	조업일수
평균	44.4	18620.8	13979.2	4600.0	195.3	188.4
최빈값	5.0	7000.0	3000.0	4000.0	180.0	180.0
표준 편차	116.0	25404.4	23656.3	3032.1	52.1	46.9
최솟값	0.3	3000.0	1000.0	1000.0	90.0	100.0
최댓값	500	100000	95000	15000	300	300
관측수	18	24	24	24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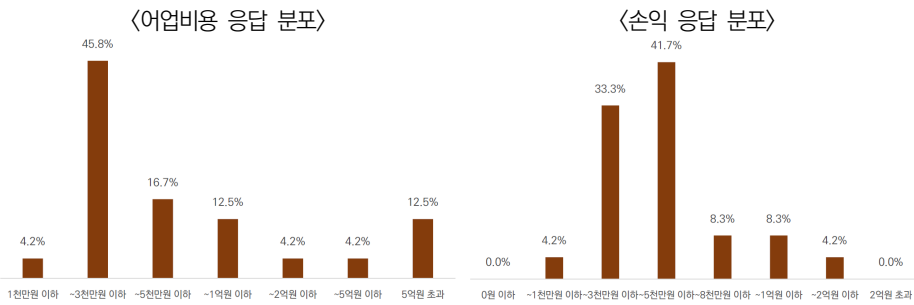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② 어획량 및 매출액



[부록 그림 94] 연안통발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③ 어업비용 및 손익



[부록 그림 95] 연안통발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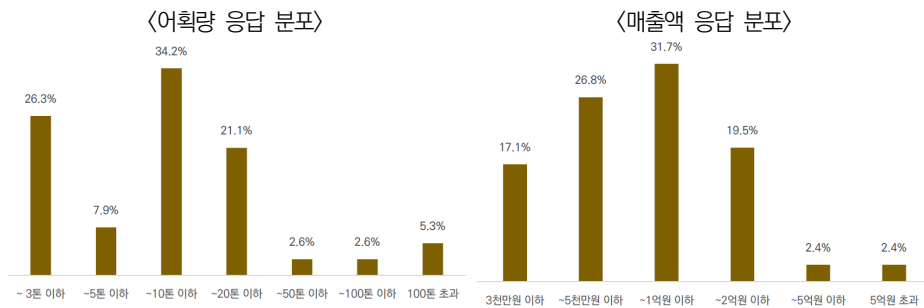
다. 연안복합어업

① 기초 통계량

〈부록 표 3〉 연안복합어업의 기초 통계량

구분	어획량	매출액	비용	손익	출어일수	조업일수
평균	36.8	10603.9	4253.4	3743.2	175.9	174.4
최빈값	2	8000	2000	3000	200	250
표준 편차	131.6	19847.2	3919.3	2381.3	74.0	70.4
최솟값	0.2	300.0	100.0	200.0	15.0	15.0
최댓값	800	130000	18000	10000	300	300
관측수	38	41	41	41	38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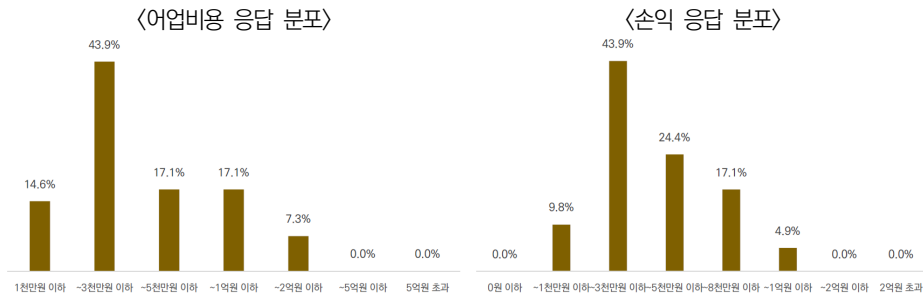
② 어획량 및 매출액



[부록 그림 96] 연안복합어업의 어획량 및 매출액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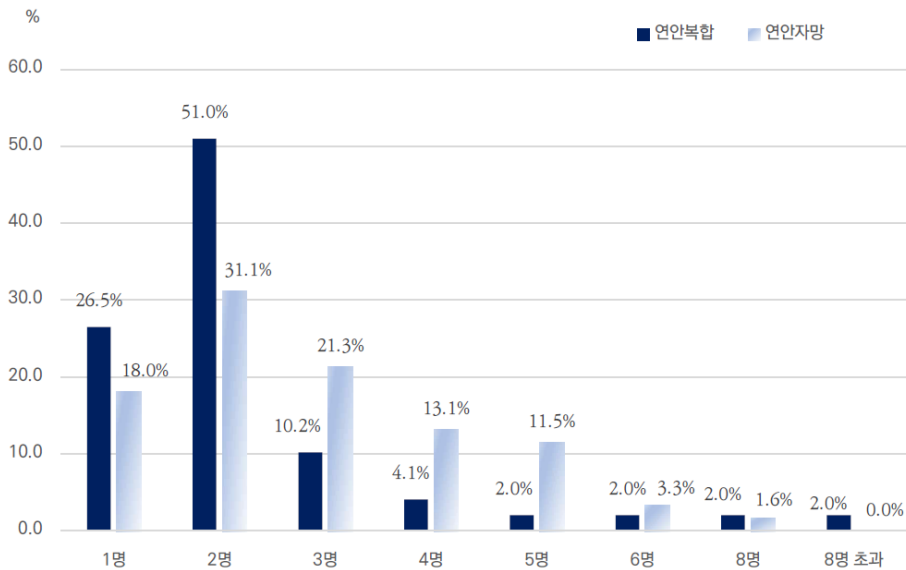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③ 어업비용 및 손익



[부록 그림 97] 연안복합어업의 어업비용 및 손익 응답 분포

라. 연안어업의 승선인원 수



[부록 그림 98] 연안복합 및 연안자망어업의 선원수에 대한 응답 분포

부록 3. 어업인 인식 조사 설문지

어업경영 실태 및 어업인의 어업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설문조사는 정부의 TAC 전면 확대 등 정책 변화 기조에 대응하여 ① 어업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해 ② 어업 지원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 처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되며, 수협이 대정부 건의 활동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설문지 송부 : 설문지 스캔 후 EKP 내부 메일(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책임연구원)로 송부
 ☞ 설문 항목 관련 문의처 :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책임연구원(02-2240-0427)

1. 기본 항목

☞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1. 귀하가 소속된 수협은 어디입니까? _____수협
2. 귀하의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_____세, 성별 : 남 / 여
3. 귀하는 어떤 업종(허가)에 종사하십니까? 허가종류, 선박별 톤급,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선박별 선원 수를 다음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선망, 쌍끌이, 권현망은 1통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어선 1	어선 2	어선 3	어선 4
연근해 구분	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허가 종류	어업	어업	어업	어업
톤급	톤	톤	톤	톤
선원 수(실승선인력)	명	명	명	명

II. 어업경영실태

☞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1. 최근 5년간 어업경영 실적(연평균)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 내 연평균 어획량, 매출액, 비용, 손익, 출어일수, 조업일수 등을 다음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선망, 쌍끌이, 권현망은 1통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연평균 어획량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비용	연평균 손익	연평균 출어일수	연평균 조업일수
톤	만원	만원	만원	일	일

근래 몇 년 사이 우리 어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① 어업의 일반적인 부분, ② 어업경영에서 비윤리적인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생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각 항목별로 해당 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어 업 일 반 부 문	구인난(선원 구인)					
	조업어장 이동 (기후변화)					
	어군 탐지					
	입출항					
	어업인 간 갈등 (조업구역, 어구사용 등)					
	낙시어선과의 갈등					
	정부 정책 변동성*					

* 정부정책 변동성은 FTA, CPTPP,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등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를 의미함

3. 어업경영의 비용 측면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각 항목별로 해당 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유류비 부담					
금융 부담(부채·이자상환)					
선원 임금 부담					
어구비(주 어구) 부담					
출어비(미끼, 주부식비 등) 부담					
수리비 등 부담					
보험료 부담(공과금 포함)					

Ⅲ. 정부 정책 인지 및 어업경영 계획

가. 정부 정책 인지

1.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TAC 제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우리나라는 TAC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① 제도 참여업종과 비참여업종 간 역차별, ② 수산자원보호 효과 감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2. 현재 정부는 TAC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몰랐다

3. 귀하께서는 TAC 제도의 전면 확대(모든 업종에 제도 적용)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에서는 휴어제 등 어업규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이러한 자발적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요.

4. 귀하는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4-1.(①, ② 필요없다 응답하신 분)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귀하는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하지 않겠다 ② 주변에서 참여하면 나도 참여하겠다 ③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5-1.(① 참여하지 않겠다 응답하신 분)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 귀하는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누가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협중앙회 ② 회원조합(지구별/업종별수협) ③ 지역어업인협회 ④ 해당 지역 선주협회
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⑥ 기타(_____)

7. 귀하는 다음 중 자발적인 수산자원 관리 수단으로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골라주십시오.

- ① 자체 휴어기간 설정 ② 금어구, 금지체장 철저 준수 ③ 자체적 어구(수) 제한 ④ 종묘 방류
⑤기타(_____)

어업인은 TAC 제도 외 ① 금어기, ② 금어구, ③ 포획 금지체장·체중 등 다양한 어업관리 수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요.

8. 귀하께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의 수단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8-1.(①, ② 필요없다 응답하신 분)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 귀하는 주변의 어업인들이 위의 수단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② 준수하지 않는다 ③ 보통 ④ 잘 지킨다 ⑤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나. 어업경영 계획

☞ 경영에서 투자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어업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어업투자와

② 경영지속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요.

1. 귀하는 어업에 필요한 어선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1.(①, ② 필요없다 응답하신 분)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귀하는 본인의 어업경영에서 어업 설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투자 의향 없다 ② 계획만 있다 ③ 투자할 것이다

2-1.(① 투자 의향 없다 응답하신 분)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귀하는 향후 어선 교체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어선 교체 의향 없다 ② 계획만 있다 ③ 어선 교체할 것이다

3-1.(① 어선 교체 의향 없다 응답하신 분) 어선 교체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어업경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지속가능성)'는 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5. 귀하는 향후 10년 동안 어업경영을 지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10년 내 어업 은퇴할 것이다 ② 향후 10년은 더 어업을 경영할 것이다

6. 귀하는 언젠가 하실 어업경영 은퇴 후, 경영 후계 의향 또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① 후계 필요 없다 ② 직계가족에게 이양 ③ 친인척에게 이양 ④ 타인에게 이양 ⑤ 정부 정책에 맡김
⑥ 기타()

IV. 어업경영 지원에 대한 인식

어업인은 수산자원 관리라는 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속에서 어업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업은 수산자원을 어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조업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수산자원의 분포, 어군 형성 등은 해마다 변하고 있어, 계획을 가지고 어업경영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 등에서는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어업경영 지원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해주시요.

1. 귀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어업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1. 어업경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귀하는 다음의 어업경영지원 방식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 해당 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지원 방식	전혀 선호 하지 않음	선호 안함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현금성 직접지원(직불제 등)					
이차보전(대출 지원 등)					
융자(대출) 규모 확대					

3. 귀하는 다음의 어업경영지원 정책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 해당 칸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십시오.

지원 방식	전혀 선호 하지 않음	선호 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비 용	영어자금 지원				
	면세유 공급				
	친환경 어구 지원				
	어선원 보험금 지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지원 방식		전혀 선호 하지 않음	선호 하지 않음	보통	선호함	매우 선호함
투 자	어선 신조 지원					
	어선 개량 지원					
기 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감척사업 확대					
	유통 가공 지원					
	수산물 판매 지원					
	신규 보험 개발(어획 부문)					

4. 귀하는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4-1. 어업경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귀하는 어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없다(현상황에 만족한다) ② 모르겠다 ③ 노력한다 ④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V. TAC 참여 업종 대상 애로점 및 건의사항

☞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의 입장에서 제도 참여와 관련한 애로점 및
건의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애로점	
건의 사항	

설문을 종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발	행	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	행	인	회 장 노 동 진
편	집	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이 종 화
수 산 경 제 연 구 원	전	화	(02) 2240-0427
연 락 처	팩	스	(02) 2240-0426
인 쇄 처	(주)피알앤북스		(02) 467-4545
발	행	일	2026. 05

〈비매품〉

수사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어업 지원 방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